



2021.07.09

국회예산정책처 | 경제현안분석 | 제103호

분위별 자산·소득 분포 분석 및 국제비교

Quantile Analysis of Korean Household Asset and Income and International Comparison

권일, 김미애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분위별 자산·소득 분포 분석 및 국제비교

경제현안분석 제103호

분위별 자산·소득 분포 분석 및 국제비교

총 괄 I 이 정 은 경제분석국장

기획·조정 I 김 상 우 산업자원분석과장

작 성 I 권 일 산업자원분석과 경제분석관
김 미 애 산업자원분석과 경제분석관

지 원 I 정 진 아 산업자원분석과 행정실무원

「경제현안분석」은 국회가 관심 있게 다룰 재정 현안이나 정책 이슈에 대해 객관성 있는 분석정보를 적시성 있게 제공함으로써, 국회의 예산 및 법안 심사와 의제 설정을 실효성 있게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문 의 : 경제분석국 산업자원분석과 | 02) 6788-3781 | nabo3781@nabo.go.kr

이 책은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www.nabo.go.kr)를 통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분위별 자산·소득 분포 분석 및 국제비교

2021. 7

이 보고서는 「국회법」 제22조의2 및 「국회예산정책처법」 제3조에 따라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발간 심의위원회」의 심의(2021. 4. 15.)를 거쳐 발간되었습니다.

발 간 사

지속 가능한 성장과 포용적 성장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사회경제적 형평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가계 경제 격차의 심화는 사회적 양극화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가계 자산과 소득의 분배 수준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득의 분포와 분배 수준에 관한 연구는 지속해서 수행되어 왔지만, 자산과 소득의 분포와 분배 수준을 동시에 분석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입니다.

본 보고서는 우리나라 가계의 자산 및 소득 분포 현황과 결정요인을 분석하고, 주요국과의 비교를 통해 자산 및 소득의 분배 수준을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되었습니다. OECD 국가와의 비교에 의하면,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가계 소득의 격차는 높은 반면, 가계 자산의 격차는 낮은 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2011~2019년 동안 우리나라 가계의 자산 및 소득 분포를 살펴보면, 가계의 자산 격차가 소득 격차에 비해 더 크고, 특히 최근 자산 가격 상승에 따라 자산 격차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주요국 대비 여전히 높은 소득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정책을 추진함과 동시에, 최근 지역별·분위별 가계 자산 격차가 확대되는 현상에 주목하여 자산 분배 수준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보고서가 소득을 중심으로 한 현행 재분배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향후 가계의 자산과 소득을 동시에 고려한 가계 경제의 분배 수준 제고를 위한 정책을 검토함에 있어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본 보고서는 담당 분석관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으로 국회 예산정책처의 공식견해와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1년 7월

국회예산정책처장 임 익 상

차 례

요 약

I. 서 론 / 1

- 1. 연구 배경 및 목적 1
- 2. 선행연구·분석방법 및 주요 내용 2

II. 우리나라 가계의 자산 및 소득 분포 분석 / 9

- 1. 가계의 자산 및 소득 현황 9
- 2. 자산과 소득 분포 분석 17
 - 가. 연도별 표본통계량 17
 - 나. 자산 유형별 분포 20
 - 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자산 및 소득 분포 22
 - 라. 연령대별 자산 및 소득 분포 25
- 3. 소결 28

III. 우리나라 가계의 자산 및 소득 격차 분석 / 31

- 1. 가계의 자산 및 소득 격차 분석 32
 - 가. 그래프를 통한 격차 분석 32
 - 나. 지표를 통한 격차 분석 37
- 2. 자산과 소득의 상관관계 분석 41
- 3. 가계의 자산 및 소득 수준 결정요인 분석 44
 - 가. 기초통계량 45
 - 나. 순자산 수준 결정요인 분석 46
 - 다.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수준 결정요인 분석 49
- 4. 소결 51

IV. 가계 자산 및 소득 분포의 국제비교 / 53

1. OECD 국가의 가계 자산 분포	53
가. 가계 자산의 중위수대비 평균값의 비율	53
나. 지니계수와 팔마비율	54
다. 분위별 자산점유율	58
2. OECD 국가의 가계 소득 분포	60
가. 가계 소득의 중위수대비 평균값의 비율	60
나. 지니계수와 팔마비율	61
다. 분위별 소득점유율	62
3. 가계 자산과 가계 소득의 결합분포 분석	65
4. 가계 자산 및 가계 소득 분포 변화 추이	67
가. 가계의 자산 격차 추이	67
나. 가계의 소득 격차 추이	71
5. 소결	76

V. 시사점 / 79

부 록 / 83

참고문헌 / 89

경제현안분석 목록 / 91

표 차례

[표 1] 우리나라 가계의 자산 현황	11
[표 2] 가구 자산분위별 순자산 평균금액, 점유율	12
[표 3] 가구 소득분위별 소득 평균금액, 점유율	13
[표 4] 자산 및 소득항목별 표본통계량: 2011년 기준	17
[표 5] 자산 및 소득항목별 표본통계량: 2015년 기준	18
[표 6] 자산 및 소득항목별 표본통계량: 2019년 기준	19
[표 7] 자산 유형별 가구당 보유액 및 구성비	21
[표 8]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자산 및 소득 격차 비교	23
[표 9] 연령대별 자산 및 소득 분포	25
[표 10] 60대 이상 가구의 자산 항목별 비중	27
[표 11] Spearman 순위상관계수: 2019년 기준	42
[표 12] 소득 1분위의 Spearman 순위상관계수: 2019년 기준	43
[표 13] 소득 5분위의 Spearman 순위상관계수: 2019년 기준	43
[표 14] 가구주 특성별 비중	46
[표 15] 가구 순자산에 대한 OLS 및 분위회귀분석 결과: 2019년 기준	48
[표 16] 가구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에 대한 OLS 및 분위회귀분석 결과: 2019년 기준 ..	50
[표 17] OECD 각 국가의 분위별 가계 자산 점유율	59
[표 18] OECD 국가별 가계 소득의 분위별 비중	64
[표 19] 분석대상 OECD 국가별 가계 자산의 지니계수 변화: 순위별	69
[표 20] 분석대상 OECD 국가별 가계 자산의 p90/p50배율 변화: 순위별	70
[표 21] 분석대상 OECD 국가별 가계 소득의 지니계수 변화: 순위별	72
[표 22] 분석대상 OECD 국가별 가계 소득의 팔마비율 변화: 순위별	74
[표 23] 분석대상 OECD 국가별 가계 소득 p90/p50 분위배율의 변화: 순위별 ..	76
 [부표 1] 자산과 소득의 불평등지수: 2011~2019년	83
[부표 2] 가구 순자산에 대한 OLS 및 분위회귀분석 결과: 2011년 기준	84
[부표 3] 가구 순자산에 대한 OLS 및 분위회귀분석 결과: 2015년 기준	85
[부표 4] 가구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에 대한 OLS 및 분위회귀분석 결과: 2011년 기준 ..	86
[부표 5] 가구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에 대한 OLS 및 분위회귀분석 결과: 2015년 기준 ..	87

그림 차례

[그림 1] 국민대차대조표 상 가계 자산 추이	9
[그림 2] 가계 대출종류별 추이	12
[그림 3] 소득분배지표 추이: 지니계수	14
[그림 4] 소득분배지표 추이: 5분위 배율	15
[그림 5] 소득분배지표 추이: 상대적 빈곤율	15
[그림 6] 가구당 거주주택 평균 보유액 및 자산 구성비 추이	22
[그림 7]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자산 및 소득 격차 추이	24
[그림 8] 주택매매가격지수 변동율 추이	24
[그림 9] 연령대별 자산 및 소득 분포 변화	25
[그림 10] 40대, 50대 가구의 소득 및 비소비지출	26
[그림 11] 60대 이상 가구의 총자산 대비 거주주택 비중	27
[그림 12] 표준화한 순자산의 커널밀도함수 추이	33
[그림 13] 표준화한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의 커널밀도함수 추이	34
[그림 14] 순자산 및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의 팬 퍼레이드 추이	35
[그림 15] 순자산 및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의 로렌즈곡선 추이	36
[그림 16] 순자산 및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의 지니계수 추이	38
[그림 17] 순자산 및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의 일반화된 엔트로피지수(GE(1)) 추이 ..	39
[그림 18] 순자산 및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의 p_{90}/p_{10} 추이	40
[그림 19] 순자산 및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의 p_{90}/p_{50} 추이	40
[그림 20] 가계 자산의 중위수대비 평균값의 비율	54
[그림 21] 가계 자산의 지니계수	55
[그림 22] 가계 자산의 상위 10% 및 하위 40%의 자산비중과 팔마비율	56
[그림 23] 가계 자산의 지니계수와 팔마비율	58
[그림 24] OECD 국가별 가계 소득의 중위수대비 평균값 비율	60
[그림 25] OECD 국가별 가계 소득의 지니계수	61
[그림 26] OECD 국가별 가계 소득의 팔마비율	62
[그림 27] OECD 평균 및 한국의 가계 소득 분위별 비중 비교	63
[그림 28] OECD 국가별 가계 자산과 가계 소득 지니계수의 비교	65

[그림 29] OECD 국가별 가계 자산과 가계 소득 팔마비율의 비교	66
[그림 30] 가계 자산 및 소득의 상·하위계층 간 격차	67
[그림 31] 분석대상 OECD 국가의 가계 자산 격차 변화: 지니계수 기준	69
[그림 32] 분석대상 OECD 국가의 가계 소득 격차 변화: 지니계수 기준	73
[그림 33] 분석대상 OECD 국가의 가계 소득 격차 변화: 팔마비율 기준	75

요 약

1. 서 론

- 최근 지속 가능한 성장과 포용적 성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사회경제 및 가계의 경제 수준 불균형으로 인해 발생하는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에 대한 공감대 확산
 - 기존의 사회경제적 형평성에 관한 많은 보고서들은 가계의 소득 분포나 빈곤율 등에 초점을 두고 분석
 - 가계 경제의 근간을 소득에만 한정하여 보게 되면 자산 규모의 차이로 인하여 가계에 실직, 질병, 은퇴 등 경제적 충격이 발생하는 경우 가계 경제 수준에서 격차가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
- 가계 경제의 분배 수준을 논하기 위해서는 가계 경제에서 소득과 자산의 역할을 동시에 분석한 연구가 필요
 - 자산은 실직, 질병, 노후 등 가계의 다양한 위기 상황에 대한 경제적 안정성을 담보하는 역할을 수행하므로, 자산 격차의 확대는 사회계층별 상대적 격차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음
 - 개인이나 가계의 소득에 비해 자산의 분포 실태를 측정할 수 있는 자료 및 통계의 부족으로 자산의 분포와 관련된 국내 연구는 제한적
- 본 보고서는 국내외 가계 자산 및 소득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가계 경제의 불평등도 변화 추이와 결정요인을 분석
 - 2011~2019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가계 자산과 소득의 분포를 분석하고, OECD 국가들의 2010년, 2014년 및 2017년 가계 경제 자료를 바탕으로 가계 자산 및 소득 분포의 국제비교를 수행함으로써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

2. 우리나라 가계의 자산¹⁾ 및 소득 분포 분석

- 우리나라 자산 5분위(상위 20%)의 순자산 점유율은 2011년 63.9%에서 2015년 60.2%로 낮아졌다가, 2019년 62.0%로 소폭 상승하여 2011년 대비 1.9%p 하락하였으나, 자산 2, 3, 4분위의 순자산 점유율은 상승
 - 2011~2019년 기간 중 자산 1분위(하위 20%)의 순자산 점유율은 0.4~0.6% 수준으로 정체
- 우리나라 소득 5분위(상위 20%)의 소득 점유율은 2011년 47.4%에서 2015년 45.7%로 낮아졌다가, 2019년 46.9%로 소폭 상승하여 2011년 대비 0.5%p 하락하였으나, 소득 1, 4분위의 소득 점유율은 상승
 - 2011~2019년 기간 중 소득분배지표는 경상소득 기준으로는 지니계수만 개선되고 5분위배율, 상대적 빈곤율은 악화되었으나, 처분가능소득 기준으로는 지니계수, 5분위배율, 상대적 빈곤율이 모두 개선
- 2011년, 2015년 및 2019년의 자산과 소득항목의 표본통계량을 살펴본 결과, 순자산과 처분가능소득이 모두 중위값보다 평균이 큰 오른쪽으로 긴 꼬리를 가지고 있는 비대칭적 분포로 나타남
 - 2019년 기준 우리나라 가계 자산은 부동산의 비중이 71.8%로 대부분을 차지
 - 2011~2019년 기간 중 거주주택이 다른 자산항목보다 높은 연평균 5.7% 증가하였고, 부동산 또는 거주주택이 없는 가구의 비중은 꾸준히 감소하여, 부동산을 통한 자산 축적이 점차 확대되었음을 시사
 - 동 기간 중 부채가 없는 가구의 비중은 꾸준히 증가한 반면, 가계부채비율은 37.7%p 증가하여, 부채가 있는 가구의 가구당 평균 부채 금액이 상승하고 상환부담도 상승했음을 알 수 있음

1)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자산은 금융자산과 실물자산으로 구분되고, 금융자산은 저축액과 현금·주지·전월세보증금으로 구성되며, 실물자산은 부동산과 기타 실물자산으로 구성됨. 부동산은 거주주택과 거주주택 이외 부동산, 계약금 및 중도금 납입액으로 구성되며, 기타 실물자산은 자동차와 기타(자동차 이외 기타 실물자산, 권리금)로 구성됨

- 수도권(A)과 비수도권(B) 거주자 간 자산 격차(A/B)는 2011년 1.68에서 2015년 1.39까지 축소되었다가, 이후 다시 확대되어 2019년은 1.60으로 증가되었으며 2011년과 대비하여서는 0.08배p 축소됨
 - 2011~2014년 기간에는 비수도권의 주택매매가격이 수도권에 비해 높게 증가하였으나, 2015~2019년 기간에는 수도권의 주택매매가격이 더 큰 폭으로 증가한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임
 - 소득 격차도 2011년 1.21에서 2014년 1.13까지 축소되었으나, 이후 다시 확대되어 2017년 1.22를 기록한 후 2019년에 1.20으로 약간 하락
- 연령대별로 보면, 2019년 기준으로 60대 이상 가구의 자산 중 부동산의 비중이 78.1%를 차지하고, 특히 거주주택의 비중이 45.1%를 차지하고 있어, 자산 유동성이 낮은 수준
 - 부동산 위주의 자산 구성은 유동성이 낮아 현금화가 어렵기 때문에 실직, 질병 등 다양한 위기 상황에 대응하여 경제적 안정을 담보하는 데는 미흡

3. 우리나라 가계의 자산 및 소득 격차 분석

- 2011년, 2015년 및 2019년의 자산 및 소득변수의 불평등도를 커널밀도추정(Kernel Density Estimate: KDE) 및 팬 퍼레이드(Pen's Parade), 로렌츠 곡선을 이용해 분석한 결과, 자산이 소득에 비해 상위계층 집중도가 더 심한 것으로 나타남
 - 커널밀도추정 결과 2019년 순자산의 최댓값은 중위값의 69.3배 수준이고, 처분가능소득의 최댓값은 중위값의 34.7배 수준으로 나타나, 순자산의 분포가 처분가능소득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상위계층에 집중되어 있음
 - 2011년, 2015년 및 2019년의 커널밀도함수 변화를 살펴보면 순자산과 처분가능소득 모두 2011년에 비해 오른쪽 꼬리가 짧아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불평등도가 완화된 것으로 볼 수 있음

- 특히 처분가능소득은 2019년 최빈값 분포가 2011년과 2015년에 비해 눈에 띄게 높아져, 중위계층이 두꺼워졌음을 보여줌
- 순자산의 팬 퍼레이드 역시 처분가능소득에 비해 오른쪽으로 갈수록 더욱 급격히 증가하는 모양을 나타내고 있어 자산의 분포가 소득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상위계층에 집중되어 있음을 보여줌
- 로렌즈곡선을 그려본 결과, 순자산은 2011~2015년 기간에는 불평등이 개선되었으나, 2019년에는 2015년에 비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고,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은 2011년에서 2015년, 2019년으로 가면서 점차 분배가 개선된 것으로 분석됨

□ 순자산 및 처분가능소득의 격차 결정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가구 순자산에 대해 통상최소자승법(Ordinary Least Squares: OLS) 및 분위회귀분석(Quantile Regression: QR)을 실시 *

- * 표본 전체에 대해 결정변수들이 가지는 영향력을 평균적으로 추정하는 OLS 분석과 함께, 표본을 자산·소득 분위별로 나누어 각 분위 집단들 간에 결정변수들이 미치는 영향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보기 위하여 분위회귀분석 방법을 추가로 사용
- OLS 추정 결과, 가구주 연령이 높고, 수도권에 거주하고, 남성이고, 학력이 높을수록 순자산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의 경우도 순자산과 유사한 방향성을 나타냄
 - 다만 순자산의 경우 연령별로는 60대가 종사상 지위별로는 자영업자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은 50대가 가장 크고, 상용근로자가 자영업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상용근로자보다 자영업자가 자산이 더 많을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이는 상용근로자는 생업을 위한 기타 자산이 필요하지 않으나, 자영업자의 경우는 영업장, 기계장치 등 영업을 위한 기타 자산이 필요한 때문으로 해석됨
- 순자산에 대한 분위회귀분석 결과, 가구주의 인적 특성인 성별, 학력, 종사상 지위는 상위계층으로 갈수록 자산에 미치는 영향력이 점차 감소하는 반면, 수도권 거주여부에 따른 영향력은 자산 상위계층일수록 커지는 것으로 나타남
-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에 대한 분위회귀분석 결과, 소득 상위계층으로 갈수록 수도권 거주 여부와 학력이 처분가능소득 증가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큰 반면, 성별이 미치는 음(-)의 영향은 중위계층에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

- 수도권에 고학력자를 고용해서 고임금을 지급하는 대기업, 금융기업 등이 밀집되어 있고, 소득 상위계층이나 하위계층의 여성보다 중위계층에서 여성의 소득 여건이 불리한 상황임을 반영

4. 가계 자산 및 소득 분포의 국제비교

- OECD 국가의 가계 자산과 가계 소득의 분포를 비교하면, 많은 국가에서 가계 소득보다 가계 자산의 격차가 심하고, 국가 간 차이도 더 크게 나타남
 - 이는 경제성장에 따른 자산축적의 결과일 수도 있으나, 자산 격차보다 소득 격차에 대한 문제의식이 먼저 대두되면서 소득재분배 정책 등을 통해 가계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있었기 때문으로 판단됨
 - 국가 간 정책의 차이, 사회 구조의 차이가 불평등도의 차이에 영향을 미친다는 관점에서 국제비교를 통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필요가 있음
- OECD 국가의 가계 자산 중위수대비 평균값의 비율은 평균 2.7 수준이며,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 평균값은 0.74로 매우 높은 수준
 - OECD 국가 간 가계 자산 지니계수의 차이는 크지 않으나, 가계 소득의 지니계수에서 낮은 수준을 보이는 북유럽국가들의 가계 자산 지니계수가 매우 높게 나타난 것이 특징
 - 한국의 가계 자산 지니계수는 0.67로서 OECD 국가들 중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임
- 가계 자산 분위에 따른 자산점유율을 비교하면, OECD 국가들은 상위 10%가 전체 가계 자산의 50% 이상을 점유
 - 미국의 경우 상위 10%에 자산의 79.47%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나 조사된 국가들 중 상위계층 집중도가 가장 높으며, 한국의 경우 상위 10%의 가계 자산점유율이 42.40%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낮음

- OECD 국가들의 가계 소득 자료에서 중위수대비 평균값의 비율은 평균적으로 1.17배이며, 가계 소득의 지니계수는 0.24~0.46 수준으로 평균은 0.31로 나타남
 - 한국의 경우 중위수대비 평균값의 비율은 OECD 평균과 비슷한 1.18 수준이지만 지니계수는 0.36으로 OECD 평균보다 약간 높게 나타나, 지니계수로 평가한 가계 소득의 불평등도는 상대적으로 높은 편
 - 유럽지역 대부분의 국가들은 평균값과 중위수의 차이가 크지 않은 상황에서 지니계수도 상대적으로 낮음

- 팔마비율은 가계 소득 전체 중 고소득층이 차지하는 소득액의 비중을 이용하여 소득의 집중도를 보여주는데, 지니계수와 달리 OECD 국가들의 팔마비율은 국가 간 차이가 다소 큰 편
 - 한국의 경우는 1.44로서 소득수준 상위 10%의 고소득가구에 대한 소득 집중도가 다소 심한 것으로 나타남

- 분위별로 점유하고 있는 가계 소득의 비중을 구하면 평균적으로 소득수준 상위 10%가 전체소득의 약 25%를 점유
 - 대부분의 북유럽국가 및 동유럽국가에서는 하위계층의 소득비중이 OECD 평균을 상회하고, 상위계층의 소득비중은 OECD 평균보다 낮음
 - 반면, 한국은 하위계층의 소득비중은 OECD 평균보다 낮은 반면, 상위계층의 소득비중은 OECD 평균보다 높게 나타나 상대적으로 상위계층 집중도가 높음

- 2017년 기준으로 자산과 소득의 결합분포를 분석해 보면, OECD 평균 가계 자산의 지니계수는 0.74이고 가계 소득의 지니계수는 0.31로서 자산의 상위계층 집중도가 소득보다 두드러지게 높음
 - 미국과 터키는 가계 자산의 지니계수와 가계 소득의 지니계수가 동시에 매우 높은 값을 가짐
 - 사회복지수준이 높은 국가로 평가되는 스웨덴과 덴마크, 노르웨이 등의 북유럽국가는 소득의 지니계수는 낮으나 가계 자산의 지니계수는 가장 높음

- 반면 일본과 한국, 뉴질랜드와 다수의 서유럽국가들은 가계 소득의 지니계수는 상대적으로 높은 값을 갖지만 가계 자산의 지니계수는 낮은 수준
- 가계 자산 및 가계 소득 분포 변화 추이를 보면, 대부분의 국가에서 소득 격차는 조금씩 개선되는 경향을 보이지만, 자산 격차는 다수의 국가에서 지니계수가 상승하여 악화되는 양상을 보임
 - 그리스, 스페인, 핀란드, 슬로바키아 등의 국가는 2010~2014년 기간과 2014~2017년 기간 중 자산격차가 계속 심화
 - 다만, 프랑스, 오스트리아의 경우 2010~2014년 기간과 2014~2017년 기간 중 가계 자산 격차가 소폭이지만 개선
- 가계 자산 격차를 2010년과 2014년 사이의 변화와, 2014년과 2017년 사이의 변화로 나누어 비교하면, 각 국가의 산업구조와 금융시장의 발달정도, 가계 자산의 구성요소 등의 차이로 인해 변화 폭이 국가별로 상이
 - 다수의 국가에서 2010~2014년 사이에 자산 격차가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다가 2014~2017년에는 다소 격차가 심화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자산 가격이 하락하고 경기침체가 심화되었으나, 2014년 이후 자산 가격이 상승하고 금융시장이 회복된 영향으로 보임
 - 가계가 보유한 자산의 가격 및 분포가 가계의 경제수준 격차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실례로 볼 수 있음

5. 시사점

- 우리나라 가구는 자산 격차가 소득 격차에 비해 더 크고, 상위계층 집중도도 더 심한 것으로 분석됨
 - 가계의 처분가능소득은 2011년 이후 전 기간에 걸쳐 격차가 지속적으로 완화된 반면, 가계 자산은 2016년 이후 격차가 심화

- 따라서 자산 격차를 고려하지 않은 소득분배 개선 정책으로는 가계의 경제적 격차를 개선하는 데에 한계가 있음
- 특히 우리나라 가계는 저소득층과 고소득층 모두 보유자산 대부분이 부동산에 편중
 - 부동산과 거주주택 위주의 가계 자산 포트폴리오로는 가계가 위기 상황에 직면할 경우, 유동성 부족으로 인해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움
 - 따라서 자산의 역할 중 하나인 위기상황에 대한 경제적 안정성을 담보하는 역할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
- 가구 순자산 및 처분가능소득에 대한 분위회귀분석 결과, 연령, 성별, 학력, 수도권 거주 여부 등 결정요인이 미치는 영향이 상위계층과 하위계층에서 각기 다르게 나타남
 - 이는 소득이나 자산의 분위별로 정책의 세분화가 필요함을 시사
- 최근 계층 간 자산 격차와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자산 격차가 확대되고 있어, 경제적 격차 심화에 따른 사회적 통합 저해 등의 문제 대두
 - 계층 간 가계 자산의 격차 확대와 수도권과 비수도권 거주자 간 가계 자산 격차 확대는 대부분 거주주택에서 발생
 - 따라서 주택가격의 상승으로 인한 자산 격차 심화를 방지하기 위해, 실수요자 중심의 지속적인 주택시장 안정화 정책이 필요
 - 이와 함께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균형발전을 통해 지역 간 경제적 격차를 축소하는 정책이 꾸준히 추진되어야 함
- OECD 국가별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가계 자산의 상위계층 집중도가 가계 소득에 비해 훨씬 심하고 집중도의 국가 간 차이 또한 가계 소득보다 가계 자산에서 더 크게 나타남
 - 경제 성장에 따른 자산의 축적으로 인한 부의 효과(wealth effect)가 상위계층과 하위계층의 격차를 심화시키는 현상과 함께 국가별 정책과 제도의 차이로 인한 영향도 있는 것으로 추정됨

- 가계 경제의 격차를 완화할 수 있는 소득재분배 정책이나 과세시스템, 사회 복지정책의 효과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국가별 특성을 고려하여 정책에 반영하여야 함을 시사
- 다만, 본 보고서는 가계금융복지조사와 OECD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는데, 표본조사의 공통적 한계와 더불어 각국의 사회경제적 배경 및 여건의 차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였다는 한계가 있음
 - 따라서 이러한 한계에 유의하여 분석 결과를 해석할 필요가 있고, 추후 이를 보완하기 위한 후속 연구가 필요

I.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최근 지속 가능한 성장과 포용적 성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사회경제적 형평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세계 경제의 침체와 산업구조 변화로 인한 각국 경제는 급진적인 변화를 경험하면서 지속적인 경제성장이 가능한지에 대한 문제를 고민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경제성장의 또 다른 측면인 사회경제적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포용적 성장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 특히 가계 경제의 격차가 확대되면서 사회양극화가 심화되고 계층 간 갈등과 대립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각 사회계층에 고루 성장의 성과가 나누어져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기존의 사회경제적 형평성에 관한 많은 보고서들은 가계 소득의 평균값이나 중위수 또는 불평등지수의 변화 등을 중심으로 가계 소득 분포나 빈곤율 등에 초점을 두고 분석하고 있다. 가계 경제의 근간은 소득이라는 측면에서 바라본 것이다. 그런데, 가계의 경제수준이 소득에 의해서만 결정된다고 보는 것은 노동의 수만 없이 자산의 상속·증여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격차를 간과한 것이라는 지적이 대두되었다.¹⁾ 선행된 여러 연구들은 자본수익률이 경제성장률을 지속적으로 상회하면서 자본축적의 속도가 빨라지게 되면, 상속자산 등을 통해 발생하는 불로소득의 비중이 노동소득의 비중을 앞지른다는 가설에 대한 실증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가계의 경제수준은 가계의 일반적인 소득과 더불어 보유한 자산의 가치와 이를 통한 소득도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자산은 상위층의 자산점유율이 매우 커 소득보다 계층 간 격차가 더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극단적으로 한 사회에서 소득이 없는 사람들의 비율은

1) GDP와 GNI 등의 거시 경제적 자료로 가계의 경제수준(households' economic well-being)을 가늠하는데 많은 한계가 있음을 지적한 Stiglitz, Sen and Fitoussi(2009)의 연구를 필두로 가계 소득의 불평등을 해소하고 포용적 성장을 지향해야 한다는 논의가 매우 활발해졌으며, Piketty(2014) 등의 연구에서 부의 불평등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경제적 불평등 논의의 초점이 가계 소득 뿐만 아니라 가계가 보유한 자산의 개념으로 확대됨

낮은 반면, 순자산²⁾이 음(-)이거나 없는 사람들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³⁾ OECD 각 국의 가계 소득⁴⁾ 및 가계 자산⁵⁾의 분포를 보면, 가계 소득이 상위계층에 집중된 정도에 비하여 가계 자산이 상위계층에 집중된 정도가 훨씬 심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국가별로 자산과 소득 격차의 상대적 크기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스웨덴의 경우 가계 소득의 지니계수가 다른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나 소득 격차가 낮은 것으로 평가되지만, 자산의 지니계수는 가장 큰 값을 가진다. 반면 일본의 경우, 소득 격차는 상대적으로 높은 국가이지만 가계 자산의 지니계수는 슬로바키아공화국을 제외하고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인다. 가계 소득의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는 경우에도 가계 자산의 격차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실질적인 가계의 경제적 양극화문제를 해소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

본 보고서는 가계의 경제적 격차가 가계가 보유한 자산의 차이로 인해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가계 소득뿐만 아니라 가계 자산의 분포에 주목하였다. 자산은 실직이나 질병, 노후빈곤 등 가계의 다양한 위기 상황에 대한 경제적 안정성과 회복력을 담보한다는 측면에서 가계 경제의 분배 수준에 미치는 자산의 영향력을 간과할 수 없다. 가계 자산과 가계 소득의 분포를 동시에 분석함으로써, 소득을 중심으로 한 현행 재분배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향후 가계 자산과 소득을 동시에 고려한 가계 경제의 분배수준 제고를 위한 정책을 검토함에 있어 참고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2. 선행연구·분석방법 및 주요 내용

개인이나 가계의 자산 분포 실태를 측정할 수 있는 자료 및 통계의 부족으로 자산의 분포와 관련된 연구는 제한적으로 수행되었으나, 최근 자산 불평등에 관한 관심

2)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

3) 2019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기준 소득이 없는 사람의 비중은 0.02%, 순자산이 음(-)이거나 없는 사람의 비중은 3.05%로 나타남

4) 처분가능소득(Disposable Income of Household)

5) 본 연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가계 자산’이라는 용어는 가계가 보유하고 있는 부(富)를 통칭하는 ‘Wealth of Household’를 의미하는 반면, 가계 소득의 ‘자산으로부터의 소득’ 계정에서의 자산은 금전적 자산소득을 발생시키는 좁은 의미의 자산(asset)을 의미함

이 고조되면서 KDI,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국토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국책 연구원에서도 관련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노영훈·김현숙(2005)은 가계동향조사의 소득 자료와 부동산 보유세(재산세와 종합토지세) 자료의 주택자산 소유정보를 통합하여 소득과 주택의 결합분포를 소득 분위별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고령층의 경우 소득분위와 주택자산분위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연령이 낮은 가구주는 소득 수준이 높고, 고령층 가구주는 주택자산가액이 높게 나타나는 등 연령대별로 상이한 소득 자산 분포가 나타나 확인되었다.

남상호(2007)는 노동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1999~2004년 기간의 우리나라 가구의 자산 보유현황과 구조를 분석하였다. 우리나라 가구의 자산구성 특징은 부동산의 비중이 매우 높고, 순자산 분포는 소득에 비하여 집중도가 매우 크고, 자산보유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상섭(2009)은 2000년대 초반 우리나라 가계 자산의 불평등도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는데, 가계 자산의 불평등도는 주로 부동산의 불평등도에 의해 결정된다고 분석하였다. 부동산이 자산 불평등도에 미치는 영향은 금융자산보다 약 6~7배 정도 더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남상호(2015)는 노후보장 패널조사자료(2013)를 이용하여 중·고령자 가구를 대상으로 소득분위별 가구 소득 및 자산 분포의 특징과 결정요인을 살펴보았다. 우리나라 중·고령자 가구는 연령대, 가구유형, 교육수준, 가구주 성별 등에 따라 자산 분포에 현저한 차이가 있고, 자산은 60대(소득은 50대)에 정점에 이르렀다가 그 이후 감소한다고 분석하였다. 이우진(2018)은 평균 샤플리값 분해⁶⁾를 통해 우리나라(2014 기준)의 자산 불평등도(0.585)가 총소득 불평등도(0.391)에 비해 높고, 불평등의 원천별 기여도를 분석한 결과 자산 불평등은 대부분 부동산자산(83%)에서 기인하고, 총소득은 대부분 노동소득(84%)에서 기인한다고 분석하였다.

KDI(2019)⁷⁾는 2000년대 초반 이후 가계의 부채 증가가 소득·자산 관련 가구 특성과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를 가구미시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는데, 가계부

6) 샤플리값은 협조적 게임(cooperative game)이론에서 게임의 참여자간 협조로 얻어진 총 이득을 각 참여자의 한계적 기여(marginal contribution)에 따라 배분하는 균형배분규칙으로 이를 이용해 소득 및 자산 불평등에 대한 원천별 한계기여를 추계함. 샤플리값을 이용한 분해는 영점 샤플리값 분해(zero Shapley value decomposition method)와 평균 샤플리값 분해(mean equalized Shapley value decomposition method)가 있음. 둘 사이의 차이는 평균 샤플리값 분해는 원천별 점유율이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영점 샤플리값 분해는 원천별 점유율이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음

7) 김영일, 「가계 소득·자산의 분포와 가계부채에 대한 연구」, KDI, 정책연구시리즈 2019-07, 2019.

채와 부동산자산의 증가율 간에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고, 부동산자산 증가가 큰 가구에서 부채 증가도 컸던 것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부채의 증가는 가계의 자산 확대에 중요한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으므로, 가계부채의 증가는 금융시장만의 문제가 아니라 부동산시장과 경제적 불평등의 문제까지 연관된 문제이고, 정책적인 대응도 금융시장 측면뿐 아니라 부동산시장과 과세 체계까지 아우른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2020)⁸⁾은 우리나라 가계 자산의 불평등 현황과 그 원인을 미시자료(가계금융복지조사, 재정패널조사)와 Piketty 방법론을 적용해 집계한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미시자료를 이용한 분석에서 상대적으로 나이가 적은 세대는 근로소득만으로 자산을 축적하는 것이 이전 세대에 비해 더욱 어려워진 것으로 나타났다. Piketty 방법론을 적용해 집계한 자료를 이용한 분석에서는 향후 소득보다는 상속이 자산 축적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커질 것이므로, 초기에 자산을 보유하지 못한 경우 자산을 축적하는 것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되었다. 또한 자산의 수익률은 자산의 규모에 비례하여 증가하는 경향이 있어서 자산의 축적 여부에 따라 경제수준의 격차도 확대될 것으로 분석되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19)⁹⁾은 우리나라에서 불평등과 거시경제 변수와의 관련성을 파악하고자, 가계동향조사와 OECD 회원국의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우리나라는 자산이 소득보다 상층부에 더 편중되어 있고, 상위 10%가 보유한 자산 중 실물자산(부동산)의 비중이 금융자산의 비중보다 훨씬 크다는 특징이 있으며, 부동산 자산의 변화가 부의 불평등을 확대하는 데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우리나라의 소득 불평등은 급격한 부동산 가격 상승과 같은 자산 가격의 증가가 소득에 반영되고 있는 데 기인했을 가능성이 있고, 부의 불평등이 심화되면 국내소비를 위축시키고, 경제의 대외의존도를 높이는 등 경제성장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국토연구원(2020)¹⁰⁾은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지니계수를 통해 자산 종류별 자산 불평등도를 측정하였고, 지니계수로 측정한 불평등도를 집단 내와

8) 정다운·강동익·최승문, 「자산 격차 발생 요인 분석 및 완화 방안 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보고서 19-05, 2019.

9) 윤덕룡·이동은·이진희, 「자산가격 변화가 경제적 불평등과 대외경제 변수에 미치는 영향 분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19-21, 2019.

10) 오민준, 「자산 불평등에서 주택의 역할」, 국토연구원, WP 20-08, 2020.

집단 간 불평등도로 구분하여 요인 분해를 실시하였다. 우리나라는 자산 불평등도가 소득 불평등도보다 크며, 특히 주택 등 부동산자산의 불평등도가 큰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자산 불평등도는 수도권 거주 집단이 비수도권 거주 집단보다 높고, 2030세대의 자산 불평등도가 다른 연령집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 불평등도의 요인 분해 결과, 주택보유여부와 소득계층으로 구분한 집단 간 불평등도가 자산 불평등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자산 가격 상승으로 자산 소유자는 자본가치 증가의 이익을 얻는 반면, 자산 미소유자의 장래 자산 구입에 대비한 저축의 가치는 저하되고, 빈부는 진지한 노력의 결과라기보다는 과거로부터의 자산보유량에 의해 결정되어 불평등 증가와 양극화 심화를 초래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외의 선행연구로는 우리나라의 자산 불평등을 분석한 Leipziger et al.(1992)과 Davies and Shorrocks(2000)의 연구가 있고, 스페인 중앙은행의 자료를 이용하여 자산 불평등의 요인을 분해한 Azpitarte(2008)의 연구 등이 있다. Azpitarte는 스페인 중앙은행의 Spanish Survey of Household Finances(2002) 자료를 이용하여 가계 자산 분포와 자산불평등의 요인을 분해하였는데, 국내 선행연구결과와는 달리 금융 자산은 자산 불평등을 높이는 반면 주택자산은 불평등을 완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이 소득보다 더 불균등하게 분포되어 있고, 주택자산이 금융자산보다 좀 더 균등하게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가계 자산 및 소득 분포 분석을 위해 가계의 자산, 부채, 소득 등을 미시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통계를 제공하는 가계금융복지조사(2012~2020) 원자료¹¹⁾를 이용하였다. 가계금융복지조사는 자산의 경우 조사년도 3월 31일 기준, 소득은 조사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기준으로 작성되었는데, 자산의 조사시점이 3월 말이므로 조사전년도의 자산 상태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자산과 소득 조사기준의 차이에 따른 귀속연도 불일치를 피하기 위해, 예를 들어 2012년 가계금융복지조사는 2011년의 자산 및 소득 분포를 나타내는 것으로 가정한다.

11) 가계금융복지조사는 가계의 자산, 부채, 소득, 지출 등을 통해 경제적 삶의 수준 및 변화 등을 미시적으로 파악하려는 목적으로 실시됨. 가계금융복지조사는 「통계법」 제17조에 따른 지정통계로 2012년 가계금융조사(2010~2011)에 복지부문을 추가하여 1차 패널조사 실시 후, 2015년 연동표본 도입 등을 거쳐 2019년 8차 표본조사를 실시함

본 연구는 가계의 자산 및 소득 분포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분석 단위를 가구로 하고, 자산과 소득은 분배 분석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개념인 순자산(net worth)과 처분가능소득(disposable income)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순자산은 금융자산과 비금융자산의 합으로 구성되는 자산에서 부채를 뺀 값이고, 처분가능소득은 소득에서 세금, 사회보장분담금, 이자 등의 비소비지출을 제외한 소득이다.¹²⁾ 일반적인 소득분배 분석과 같이 가구 구성원의 후생수준을 살펴보기 위해 균등화 소득을 이용하였으나,¹³⁾ 자산관련 자료는 균등화하지 않은 자료를 이용하였다.¹⁴⁾

가계조사(표본조사)에서는 표본 오류(sampling error)와 비표본 오류(non-sampling error)¹⁵⁾가 존재할 수 있어, 소득이나 자산을 정확하게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나는 문제이다.¹⁶⁾ 이러한 가계조사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가계금융복지조사는 노동패널, 재정패널 등 다른 자산관련 통계에 비해 표본의 수가 가장 많다는 장점이 있으며, 우리나라의 공식적인 분배수준 작성에 기반이 되는 조사로서 이를 토대로 작성된 통계가 국제기구에 제공되고 있다. 따라서 본 보고서는 자산과 소득의 분포에 대한 분석 및 국제비교를 위해,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이용하였다.

OECD 국가들의 가계 자산 및 소득 분포는 OECD에서 조사하여 발표하는 자료를 바탕으로 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기준연도는 2010년, 2014년 및 2017년 자료이다. 국가별 발표시기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제시한 기준년도 2010년이 실제로 의미하는 것은 국가별로 2009~2011년에 조사된 자료이다. 마찬가지로, 2014년과 2017년은 국가별로 전후 1년의 차이가 있다. 또한 가계 소득과 가계 자산의 특

12)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비소비지출, 처분가능소득은 행정자료로 보완한 조사결과이며, 이외의 주요통계(자산, 부채, 순자산 등)는 면접조사 결과만으로 작성됨

13) 균등화 소득은 가구의 소득을 가구원수의 제곱근($\sqrt{\text{가구원수}}$)으로 나눈 값

14) 일반적인 가계 자산 관련 연구에서 가구 내에서 자산은 가구원들에게 공공재와 같아 한 가구원이 자산을 사용하는 것이 다른 가구원의 자산 사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가정을 하고 있기 때문임

15) 표본 오류는 표본이 모집단을 제대로 대표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오류이며, 이것은 표본 규모를 늘리거나 표본의 설계를 개선해서 줄일 수 있음. 비표본 오류는 자료의 측정, 수집,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로 가계조사에서는 무응답(조사 대상자가 응답을 기피), 과소 또는 과대 보고, 피조사자의 오해와 혼동 등의 형태로 나타남. 이러한 비 표본 오류를 제거하기 위해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소득의 경우는 2016년 자료부터 행정자료를 통해 보정하고 있음

16) 김낙년, “가계조사의 행정자료에 의한 보정: 2016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중심으로,” 『한국사회정책』, 제27권 제1호, 2020.

성상, 그 의미와 조사기준이 국가별로 차이를 갖기 때문에 OECD 자료와 국가별 자료를 비교하여 자료를 보완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2장에서는 우리나라 가구의 2011~2019년 기간의 자산 및 소득 분포를 분석하고 그 추이를 살펴본다. 가계 자산과 소득의 구성요소를 살펴보고 각각의 지니계수, 5분위배율, 상대적 빈곤율 등을 통해 불평등지수를 산출한다. 이를 바탕으로 3장은 우리나라 가계의 자산 및 소득의 분포와 결정요인을 분석하고, 결정요인의 영향력 변화를 추정하기 위해 자산과 소득 각각에 대하여 각 연도별로 통상최소자승법(Ordinary Least Squares: OLS)에 의한 분석과 분위회귀분석(Quantile Regression: QR)을 실시하였다.¹⁷⁾ 표본 집단의 이질성을 가정한 분위회귀분석을 사용하면 종속변수의 조건부 분위별 인구학적 특성 및 가구특성 변수들의 영향력을 각각 추정해 낼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순자산과 처분가능소득에 대하여 가구주 연령, 거주지역, 가구주 성별, 가구주 종사상지위, 가구주 학력이 미치는 영향을 자산과 소득분위별로 분석하였다. 4장은 국내 가계 자산과 소득의 분포를 OECD 국가들의 자료와 비교하기 위하여 지니계수, 팔마비율, 분위수비율 등을 산출한다. 국내 자료와 같은 미시데이터를 사용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으나, 국내 가계 자산과 소득 분포를 다른 국가의 수준과 비교하는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을 둔다. 중위수대비 평균값 비율과 지니계수, 팔마비율 및 분위수비율을 바탕으로 OECD 국가별 가계 자산과 소득 분포의 격차 정도를 평가한다. 2010년, 2014년 및 2017년 자료가 이용 가능한 국가들의 가계 자산과 소득 분포의 불평등지수를 구하고 그 추이를 분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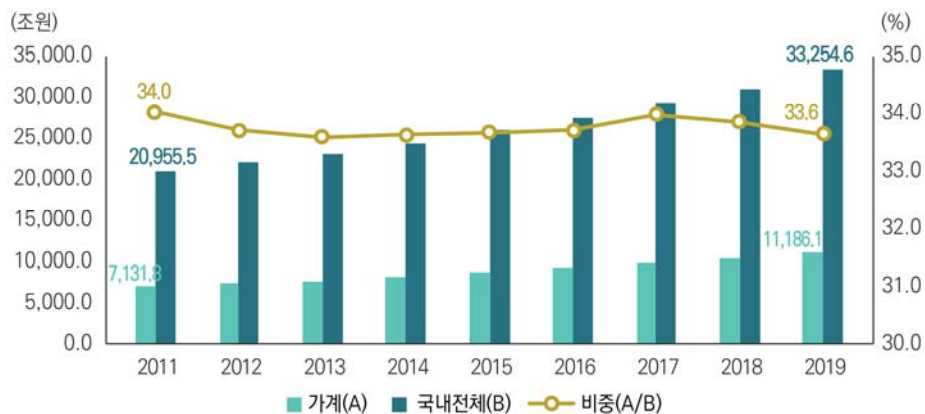
17) 분위회귀분석은 표본 집단의 이질성을 고려하는 분석방법으로 Koenker and Bassett(1978)가 처음 제시한 개념

Ⅱ. 우리나라 가계의 자산 및 소득 분포 분석

1. 가계의 자산 및 소득 현황

우리나라 국민대차대조표¹⁸⁾ 상 가계의 자산¹⁹⁾은 2011~2019년 기간 중 연평균 5.8% 증가하여 국내총생산의 연평균 증가율(4.1%)²⁰⁾을 상회하였다.

[그림 1] 국민대차대조표 상 가계 자산 추이



주: 국민대차대조표 상 가계는 가계와 비영리단체를 합한 개념

자료: 한국은행, 국민대차대조표

2019년 기준 국민대차대조표 상 가계부문의 자산 규모는 1경 1,186.1조원, 순자산 규모는 9,307.1조원이고, 가계금융복지조사 상 자산 규모는 9,038.1조원, 순자산 규모는 7,362.8조원으로 추계되었다. 국민대차대조표 대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가계 자산 및 순자산 규모는 2019년 기준 각각 80.8%, 79.1% 수준으로 나타난다.

18) 국민대차대조표는 일정시점에서 한 나라 전체나 개별 경제주체가 보유하고 있는 실물자산액과 금융자산, 부채의 규모 및 증감을 기록한 통계로 실물자산과 금융자산 등 국부(national wealth) 또는 순자산(net worth)의 변동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국민경제의 재무상태표임

19)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자산은 금융자산과 실물자산으로 구분되고, 금융자산은 저축액과 현거주지 전월세보증금으로 구성되며, 실물자산은 부동산과 기타 실물자산으로 구성됨. 부동산은 거주주택과 거주주택 이외 부동산, 계약금 및 중도금 납입액으로 구성되며, 기타 실물자산은 자동차와 기타(자동차 이외 기타 실물자산, 권리금)로 구성됨

20) 국내총생산은 2011년 1,388.9조원에서 2019년 1,919.0조원으로 증가

전병유 외(2016)²¹⁾는 이러한 차이에 대해 국민대차대조표 상 가계에는 민간 비법인기업과 비영리단체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포함하지 않는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는 자산이 그만큼 과소 조사될 수 있고, 표본조사인 가계금융복지조사의 특성상 자산 상위계층의 경우는 자산을 과소 보고하는 경향이 있어 자산 상위계층이 과소 대표되어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한다.

김낙년(2019)²²⁾은 국민대차대조표와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자산 분류 방식은 대체로 대응되나, 자산과 부채 규모를 비교할 때는 두 자료의 조사 대상, 조사 시점, 포괄 범위에 차이가 있음을 유념하여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예를 들어 국민대차대조표는 모든 경제주체를 대상으로 연말 기준으로 추계되나, 서베이(survey) 자료인 가계금융복지조사의 경우에는 현역군인이나 시설에 거주하는 가족 등 일부 경제 주체가 제외되고, 3월 말 기준으로 조사된다.

특히 국민대차대조표 대비 가계금융복지조사 비율이 2019년 기준으로 실물자산은 95.9%인데 반해, 금융자산은 53.5% 수준으로 상당히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김낙년(2020)²³⁾은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금융자산이 부동산보다 무응답이 많아 비표본 오류가 상대적으로 크고, 금융자산은 최상층의 자산 보유 규모가 큰데,²⁴⁾ 전체 가구의 0.1% 수준(약 1.9만 가구)인 가계금융복지조사의 표본으로는 최상위층을 선정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아 표본 오류도 더해졌을 수도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논의를 종합해 보면, 가계금융복지조사는 민간 비법인기업 등 일부가 조사 대상에서 제외되고, 설문조사의 특성 상 응답자가 무응답 또는 축소응답을 하거나 최상위층이 표본에 적절하게 포함되지 못함에 따라 금융자산의 규모가 국민대차대조표보다 과소 추정된 것으로 보인다.

21) 전병유 외, 「한국의 불평등 2016」, 한신대학교 공공정책연구소, 페이퍼로드, 2016.

22) 김낙년, “우리나라 개인 자산 분포의 추정,” 「경제사학」 제43권 제3호(통권 제71호), 경제사학회, 2019, 437~482쪽.

23) 김낙년, “가계조사의 행정자료에 의한 보정: 2016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중심으로,” 「한국사회정책」 제27권 제1호, 한국사회정책학회, 2020, 39~61쪽.

24) 김낙년은 소득자본화 방식을 통해 행정자료로 보정된 금융소득을 역산하여 금융자산의 분포를 추정하였는데, 연간 금융소득이 5~6천만원 구간에서 가계금융복지조사가 파악한 금융자산은 국민대차대조표의 62.5% 수준인 반면, 연간 금융소득이 5억원인 최상위 소득구간에서는 국민대차대조표의 0.8% 수준 정도만 파악하는 것으로 추정

2011~2019년 기간 중 국민대차대조표 기준으로 가계의 자산과 순자산은 각각 연평균 5.8%, 5.6% 증가하였고, 가계금융복지조사 상으로는 각각 연평균 5.7%, 5.5% 증가하였다. 또한 국민대차대조표 및 가계금융복지조사 상 금융자산 증가율은 각각 6.9%, 5.4%이고, 실물자산 증가율은 각각 5.2%, 5.8%로 나타났으나, 가계의 부채 증가율은 각각 6.9%, 7.0%로 다른 항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했다.

[표 1] 우리나라 가계의 자산 현황

(단위: 조원, %)

구분	2011			2019		
	국민대차대조표 (A)	가계금융복지조사 (B)	비율 (B/A)	국민대차대조표 (A)	가계금융복지조사 (B)	비율 (B/A)
자산(a)	7,131.8	5,780.8	81.1	11,186.1 (5.8)	9,038.1 (5.7)	80.8
금융자산	2,332.4	1,395.3	59.8	3,981.4 (6.9)	2,131.4 (5.4)	53.5
실물자산	4,799.4	4,385.4	91.4	7,204.7 (5.2)	6,906.7 (5.8)	95.9
부채(b)	1,101.5	974.6	88.5	1,879.0 (6.9)	1,675.2 (7.0)	89.2
순자산(a-b)	6,030.3	4,806.2	79.7	9,307.1 (5.6)	7,362.8 (5.5)	79.1

주: 1. ()는 2011~2019년 기간의 연평균 증가율(CAGR)

2. 국민대차대조표 상 가계는 민간 비법인기업 및 가계에 봉사하는 비영리단체를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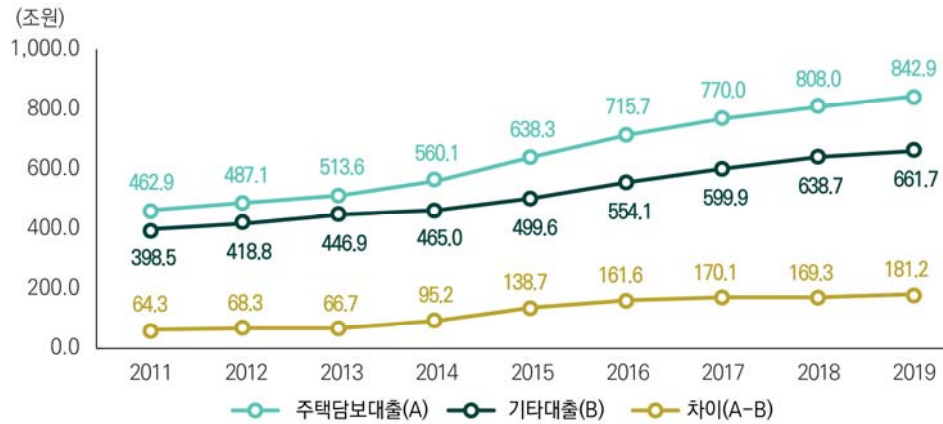
3. 국민대차대조표에서는 실물자산을 비금융자산으로 칭함

4. 부채는 국민대차대조표에서는 금융부채를 의미하나,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는 금융부채와 임대보증금을 합한 금액임

자료: 한국은행 국민대차대조표,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2011~2019년 기간 중 연평균 증가율이 가장 높았던 가계 부채의 증가 추이를 대출종류별로 살펴보면, 주택담보대출이 2011년 462.9조원에서 2019년 842.9조원으로 7.8%(380.0조원) 증가하는 동안, 기타대출은 2011년 398.5조원에서 2019년 661.7조원으로 6.5%(263.2조원) 증가하였다. 따라서 주택담보대출(A)과 기타대출(B)의 차이(A-B)는 2011년 64.3조원에서 2019년 181.2조원으로 8년간 약 2.8배 규모로 확대되었다. 특히, 2015년과 2016년의 주택담보대출은 전년대비 각각 14.0%, 12.1% 증가하여, 2011~2019년 기간의 연평균 증가율을 큰 폭으로 상회하였다.

[그림 2] 가계 대출종류별 추이



자료: 한국은행, 가계신용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자산²⁵⁾ 상위 20%(자산 5분위)의 순자산 점유율은 2011년 63.9%에서 2015년 60.2%로 낮아졌다가, 2019년 62.0%로 상승하였으나, 2011년 대비로는 1.9%p 하락하였다. 2011~2019년 기간 중 자산 1분위의 순자산 점유율은 정체되었고, 자산 2, 3, 4분위의 점유율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가구 자산분위별 순자산 평균금액, 점유율

(단위: 만원, %)

	2011		2015		2019		연평균 증가율 ¹⁾
	평균금액	(비중)	평균금액	(비중)	평균금액	(비중)	
전체	26,875	(100.0)	29,918	(100.0)	36,287	(100.0)	3.8
1분위	473	(0.4)	833	(0.6)	675	(0.4)	4.5
2분위	6,428	(4.8)	8,012	(5.4)	8,992	(5.0)	4.3
3분위	14,259	(10.6)	17,888	(12.0)	20,493	(11.3)	4.6
4분위	27,375	(20.4)	32,763	(21.9)	38,773	(21.4)	4.4
5분위	85,822	(63.9)	90,079	(60.2)	112,481	(62.0)	3.4

주: 1) 평균금액의 2011~2019년 기간의 연평균 증가율(CAGR)

1. 비중은 만원임에 다른 단수차이가 있음

자료: KOSIS, 가계금융복지조사, “순자산, 가구소득의 분위별 평균, 점유율 및 경계값”

25) 이하에서 자산은 총자산을 의미

소득²⁶⁾ 상위 20%(소득 5분위)의 소득 점유율은 2011년 47.4%에서 2015년 45.7%로 하락하였다가, 2019년 46.9%로 증가하였으나, 2011년 대비로는 0.5%p 하락하였다. 반면, 소득 1, 2, 3, 4분위의 점유율은 2011~2015년 기간에는 증가하였으나, 2015~2019년 기간에는 소득 1분위의 소득 점유율만 증가하고, 소득 2, 3, 4분위의 점유율은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²⁷⁾

[표 3] 가구 소득분위별 소득 평균금액, 점유율

(단위: 만원, %)

	2011		2015		2019		연평균 증가율 ¹⁾
	평균금액	(비중)	평균금액	(비중)	평균금액	(비중)	
전체	4,233	(100.0)	4,882	(100.0)	5,924	(100.0)	4.3
1분위	761	(3.6)	891	(3.7)	1,155	(3.9)	5.4
2분위	1,991	(9.4)	2,412	(9.9)	2,763	(9.3)	4.2
3분위	3,344	(15.8)	3,993	(16.4)	4,671	(15.8)	4.3
4분위	5,040	(23.8)	5,958	(24.4)	7,126	(24.1)	4.4
5분위	10,029	(47.4)	11,153	(45.7)	13,903	(46.9)	4.2

주: 1) 평균금액의 2011~2019년 기간의 연평균 증가율(CAGR)

1. 비중은 반올림에 따른 단수차이가 있음

자료: KOSIS, 가계금융복지조사, “순자산, 가구소득의 분위별 평균, 점유율 및 경계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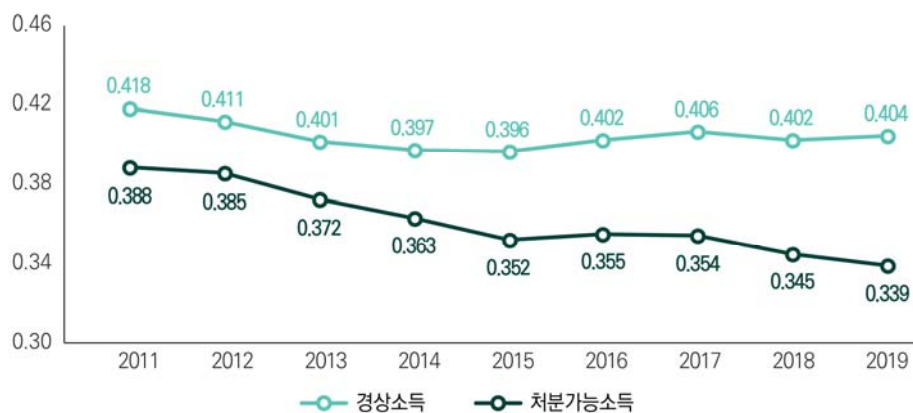
2011~2019년 기간 중 자산 5분위의 순자산 점유율이 소득 5분위의 소득 점유율보다 크게 하락하였으나, 2019년 기준 자산 5분위의 순자산 점유율(62.0%)은 소득 5분위의 소득 점유율(46.9%)보다 높은 수준이다. 순자산은 2015년에 비해 2019년에는 5분위의 점유율만 증가하였으나, 소득의 경우는 1분위와 5분위의 점유율이 증가하였다.

26) 일반적으로 총소득은 경상소득과 비경상소득을 합한 금액을 의미하나,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는 비경상소득은 조사되지 아니함. 따라서 이하에서는 소득은 총소득으로 경상소득을 의미함

27) 2018년 가계금융복지조사(2017년 기준)부터 경상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처분가능소득, 비소비지출(세금, 공적연금·사회보험료) 통계가 국세청, 보건복지부 등의 행정자료로 보완되어 공표되고 있음(2018년 12월). 통계청은 전년도 결과와 비교할 수 있도록 소득·비소비지출은 2017년(2016년 기준)부터 작성하여 제공되고 있으나, 소득, 처분가능소득 및 비소비지출 관련 항목은 2016년 이전 조사 자료와 직접 비교가 곤란하다는 한계가 있음

2011~2019년 기간 중 경상소득 기준으로 지니계수²⁸⁾는 개선되었으나, 5분위배율²⁹⁾, 상대적 빈곤율³⁰⁾은 악화되었다. 그러나 처분가능소득³¹⁾ 기준으로는 모두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³²⁾ 처분가능소득 기준으로 지니계수는 2011년 0.388에서 2019년 0.339로 0.049p, 5분위배율은 8.32배에서 6.25배로 2.07배p, 상대적 빈곤율은 18.6%에서 16.3%로 2.3%p 하락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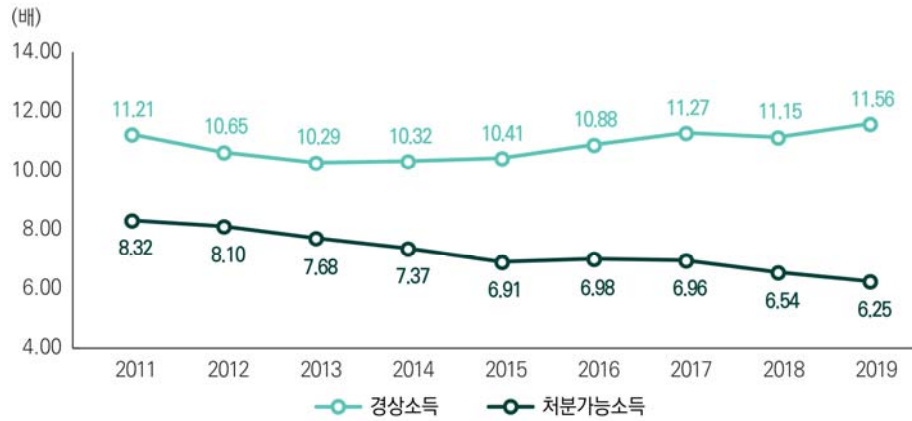
[그림 3] 소득분배지표 추이: 지니계수



자료: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 28) 지니계수는 소득의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0에서 1사이의 수치로 표시되는데, 소득분배가 완전평등한 경우 0, 완전불평등한 경우는 1
- 29) 5분위배율은 균등화 소득 크기 순서에 따라 5개 그룹으로 나누었을 때 소득이 높은 5분위와 소득이 낮은 1분위의 평균소득 사이의 비율로, 5분위 소득이 1분위 소득의 몇 배인지를 나타냄
- 30) 상대적 빈곤율이란 중위소득 50%(상대적 빈곤선) 이하인 계층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전체 인구 중 빈곤 위험에 처한 인구의 비율을 의미
- 31) 가구소득에서 조세, 연금기여금, 이자비용, 비영리단체 또는 가구 간 이전 등을 제외한 소득
- 32) 소득분배지표 작성에 사용하는 소득은 균등화 소득을 사용

[그림 4] 소득분배지표 추이: 5분위 배율



자료: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그림 5] 소득분배지표 추이: 상대적 빈곤율



자료: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통계청은 2016년부터 그동안 가계동향조사에서 작성되었던 공식 소득분배지표를 가계금융복지조사로 변경하여 작성하고 있다. 가계동향조사의 소득분배지표가 고·저소득층의 소득을 현실적으로 잘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국회와 감사원 등의 개선요구가 이어졌기 때문이다. 2016년 기준 소득분배지표는 다음과 같은 변화가 있었다. 첫째, 공식적인 소득분배지표의 기초자료가 가계동향조사에서 가계금융복지조사로 변경되었고, 둘째,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자료

를 국세청, 보건복지부 등 행정자료로 보완하며, 셋째, 시장소득과 처분가능소득을 계산할 때 사적이전지출을 추가로 차감하도록 한 OECD 권고사항 등을 반영하여 소득분배지표를 작성한다는 것이다.

특히 행정자료로 보완하는 이유에 대해서 통계청은 ‘가계금융복지조사의 고소득층 포괄율은 높으나, 소득과 같은 민감한 항목을 조사하는 면접조사의 특성상, 무응답 등으로 인해 응답자로부터 정확한 응답을 측정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³³⁾ 행정자료로 보완하는 경우 소득분배지표가 기존 조사자료만을 이용한 경우보다 소폭 더 상승하고, 작성방법 변경 전후 자료 간 시계열 단절이 나타나 수준 차 보정(시계열 연결)의 문제가 발생할 것이 예상되었다. 이에 통계청은 2016년 자료를 작성하면서 시계열 연결을 위해 2015년 자료에 대해서도 소급하여 행정자료로 보완한 분배지표를 작성하였다. 또한 가계금융복지조사는 2011년부터 시행하였기 때문에 2011~2014년 기간의 자료에 대해서는 시계열 연결을 위한 연구를 별도로 진행하였다. 동 정책연구용역(2018년) 결과를 토대로 최근 행정자료 입수가 불가능한 항목들에 대해 통계적 추정 방법을 이용하여 2011~2014년 기간에 대한 자료를 보완하였다. 본 보고서는 이러한 가계금융복지조사 보완 연구의 결과로 도출된 2011~2019년 기간의 소득분배지표를 인용하였으므로, 시계열 단절로 인한 왜곡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33) 통계청에 따르면 2016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 행정자료를 활용한 결과, 소득이 없다고 응답한 가구의 비율은 감소(0.18%→0.03%)하고, 1억원 이상 고소득층에 속한 가구의 비율은 증가(10.1%→12.7%). 이는 소득에 대해 무응답하거나 소득을 낮게 응답한 경우의 소득이 행정자료로 보완되었기 때문인데, 근로소득이 없다고 응답한 가구 중 행정자료로 보완된 가구 비율은 18% 정도임 (자료: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소득분배지표 관련 7문 7답”, 2017.12.21.)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구간별 가구 비율: 2016년 기준〉

구분	(단위: %)						
	0	1천만 미만	1천만~3천만 미만	3천만~5천만 미만	5천만~7천만 미만	7천만~1억 미만	1억 이상
조사	0.18	11.6	24.1	24.2	16.6	13.3	10.1
보완	0.03	10.0	25.1	21.8	16.3	14.0	12.7

2. 자산과 소득 분포 분석

가. 연도별 표본통계량

2011년 기준 가계금융복지조사의 표본통계량을 살펴보면, 자산의 중위값은 1억 6,445만원, 평균은 3억 2,815만원이고, 처분가능소득의 중위값은 2,753만원, 평균은 3,521만원으로 나타난다. 자산과 처분가능소득 모두 중위값보다 평균이 큰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자산과 처분가능소득이 오른쪽으로 긴 꼬리를 가지고 있는 비대칭분포임을 나타낸다. 또한 자산(8.8)과 순자산(9.3)의 비대칭도 모두 처분가능소득(11.8)보다 작은 것으로 나타난다. 우리나라 가계 자산은 대부분 부동산(69.2%)이고, 거주주택은 부동산의 52.8%를 차지하며, 금융자산(24.2%)은 부동산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은 비중을 차지한다. 부동산, 거주주택, 부채가 전혀 없는 가구의 비중이 각각 33%, 43%, 34%이고,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이 음수(-)인 가구들의 비중은 3%이다.

[표 4] 자산 및 소득항목별 표본통계량: 2011년 기준

(단위: 만원)

Percentiles	자산	금융자산	부동산	거주주택	부채	순자산	경상소득	처분가능소득
1%	20	8	0	0	0	-2,818	229	146
5%	405	50	0	0	0	80	480	424
10%	1,250	180	0	0	0	709	714	637
25%	5,586	974	0	0	0	4,430	1,620	1,382
50%(중위수)	16,445	3,392	10,000	5,000	600	13,540	3,300	2,753
75%	37,000	8,825	26,000	16,000	5,000	30,982	5,575	4,609
90%	74,552	19,422	55,000	31,000	14,010	62,744	8,560	6,964
95%	113,957	29,710	86,000	45,000	24,550	96,440	11,000	8,882
99%	257,890	67,556	202,000	100,000	61,000	223,600	20,000	15,230
관측치 수	19,744	19,744	19,744	19,744	19,744	19,744	19,744	19,744
평균	32,815	7,951	22,707	11,994	5,360	27,455	4,294	3,521
표준편차	60,797	16,065	50,071	21,542	15,376	52,910	4,674	3,841
왜도(비대칭도) ¹⁾	8.8	9.8	10.2	7.3	12.0	9.3	10.2	11.8
첨도 ²⁾	145.8	183.0	192.0	174.7	282.6	164.5	293.9	381.0

주: 1) 분포가 기울어진 정도와 방향을 나타내며, 0이면 분포 형태가 좌우대칭인 정규분포를 뜻함. 음수(-)면 평균을 중심으로 왼쪽으로 치우쳐 있고, 양수(+)면 평균을 중심으로 오른쪽으로 치우쳐 있음

2) 관측치들이 어느 정도 집중적으로 중심에 몰려있는가 측정할 때 사용하며, 첨도값이 3에 가까우면 산포도가 정규분포에 가까움. 첨도가 3보다 크면 중앙부분이 뾰족하고, 정규분포보다 긴 꼬리를 갖으며, 첨도가 3보다 작으면 중앙부분이 보다 완만한 모양으로 정규분포보다 짧은 꼬리를 가짐

1. 각 항목별 분위의 평균 및 통계량임

자료: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2012)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2015년 기준 가계금융복지조사의 표본통계량을 살펴보면, 자산 중위값은 2억 260만원, 평균은 3억 6,249만원이고, 처분가능소득의 중위값은 3,108만원, 평균은 3,889만원으로 나타난다. 자산과 처분가능소득 모두 중위값보다 평균이 큰 것으로 나타나며 오른쪽으로 긴 꼬리를 가지고 있는 비대칭분포를 보인다. 또한 자산(10.1)과 순자산(10.5)이 모두 비대칭도가 처분가능소득(4.4)보다 큰 것으로 나타난다. 우리나라 가계 자산은 대부분 부동산(69.3%)이고, 거주주택은 부동산의 54.3%를 차지하며, 금융자산(24.6%)은 부동산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은 비중을 차지한다. 부동산, 거주주택, 부채가 전혀 없는 가구의 비중이 각각 31%, 40%, 35%로 2011년 대비 부동산과 거주주택이 없는 사람의 비중은 감소하였으나, 부채가 없는 가구의 비중은 증가하였다. 또한 순자산이 음수(-)인 가구들의 비중은 2%로 2012년 대비 1%p 감소하였다.

[표 5] 자산 및 소득항목별 표본통계량: 2015년 기준

(단위: 만원)

Percentiles	자산	금융자산	부동산	거주주택	부채	순자산	경상소득	처분가능 소득
1%	30	10	0	0	0	-2,393	272	219
5%	410	62	0	0	0	111	540	477
10%	1,490	200	0	0	0	849	740	672
25%	6,740	1,148	0	0	0	5,250	1,800	1,523
50%(중위수)	20,260	4,177	12,800	7,500	900	16,600	3,704	3,108
75%	43,242	10,252	30,000	20,000	6,300	36,244	6,300	5,215
90%	80,960	21,348	59,000	35,000	16,550	67,068	9,600	7,819
95%	119,181	32,641	90,000	48,000	27,500	98,848	12,100	9,835
99%	255,926	71,742	205,000	90,000	70,000	219,502	20,000	15,588
관측치 수	18,273	18,273	18,273	18,273	18,273	18,273	18,273	18,273
평균	36,249	8,926	25,110	13,636	6,333	29,916	4,715	3,889
표준편차	63,173	17,071	51,974	20,766	17,854	53,308	4,468	3,602
왜도(비대칭도) ¹⁾	10.1	11.4	10.6	7.0	11.8	10.5	4.2	4.4
첨도 ²⁾	198.0	310.1	205.6	197.9	249.7	227.4	48.8	56.6

주: 1) 분포가 기울어진 정도와 방향을 나타내며, 0이면 분포 형태가 좌우대칭인 정규분포를 뜻함. 음수(-)면 평균을 중심으로 왼쪽으로 치우쳐 있고, 양수(+)면 평균을 중심으로 오른쪽으로 치우쳐 있음

2) 관측치들이 어느 정도 집중적으로 중심에 몰려있는가 측정할 때 사용하며, 첨도값이 3에 가까우면 산포도가 정규분포에 가까움. 첨도가 3보다 크면 중앙부분이 뾰족하고, 정규분포보다 긴 꼬리를 갖고, 첨도가 3보다 작으면 중앙부분이 보다 완만한 모양으로 정규분포보다 짧은 꼬리를 가짐

1. 각 항목별 분위의 평균 및 통계량임

자료: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2016)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2019년 기준 가계금융복지조사의 표본통계량을 살펴보면, 자산 중위값은 2억 2,807만원, 평균은 4억 1,243만원이고, 처분가능소득의 중위값은 3,534만원, 평균은 4,483만원으로 나타난다. 자산과 처분가능소득 모두 중위값보다 평균이 큰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자산과 처분가능소득이 오른쪽으로 긴 꼬리를 가지고 있는 비대칭분포임을 나타낸다. 또한 자산(6.4)과 순자산(6.8)이 모두 비대칭도가 처분가능소득(7.2)보다 작은 것으로 나타난다. 우리나라 가계 자산은 대부분 부동산(71.8%)이고, 거주주택은 부동산의 57.5%를 차지하며, 금융자산(23.1%)은 부동산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은 비중을 차지한다. 부동산, 거주주택, 부채가 전혀 없는 가구의 비중이 각각 30%, 39%, 36%로 2015년 대비 부동산과 거주주택이 없는 사람의 비중은 감소하였으나, 부채가 없는 가구의 비중은 증가하였다. 순자산이 음수(-)인 가구들의 비중은 2011년과 동일한 3%로 2015년 대비 1%p 증가하였다.

[표 6] 자산 및 소득항목별 표본통계량: 2019년 기준

(단위: 만원)

Percentiles	자산	금융자산	부동산	거주주택	부채	순자산	경상소득	처분가능 소득
1%	45	10	0	0	0	-3,166	446	233
5%	500	100	0	0	0	110	750	666
10%	1,580	250	0	0	0	845	1,030	898
25%	7,628	1,208	0	0	0	5,697	2,026	1,743
50%(중위수)	22,807	4,430	14,000	8,000	800	18,300	4,184	3,534
75%	48,649	10,885	35,000	23,000	7,267	40,848	7,333	6,070
90%	93,600	22,310	73,000	45,000	19,400	78,490	11,209	9,060
95%	139,201	33,460	111,000	65,000	31,000	115,100	14,420	11,476
99%	301,730	75,142	253,000	130,000	80,000	260,080	23,625	17,442
관측치 수	18,064	18,064	18,064	18,064	18,064	18,064	18,064	18,064
평균	41,243	9,535	29,631	17,033	7,116	34,127	5,495	4,483
표준편차	66,637	20,982	54,662	28,106	18,128	57,874	5,564	4,210
왜도(비대칭도) ¹⁾	6.4	17.1	6.4	4.5	9.2	6.8	8.0	7.2
첨도 ²⁾	76.5	542.9	81.5	37.6	179.8	82.5	210.6	207.5

주: 1) 분포가 기울어진 정도와 방향을 나타내며, 0이면 분포 형태가 좌우대칭인 정규분포를 뜻함. 음수(-)면 평균을 중심으로 왼쪽으로 치우쳐 있고, 양수(+)면 평균을 중심으로 오른쪽으로 치우쳐 있음

2) 관측치들이 어느 정도 집중적으로 중심에 몰려있는가 측정할 때 사용하며, 첨도값이 3에 가까우면 산포도가 정규분포에 가까움. 첨도가 3보다 크면 중앙부분이 뾰족하고, 정규분포보다 긴 꼬리를 갖고며, 첨도가 3보다 작으면 중앙부분이 보다 완만한 모양으로 정규분포보다 짧은 꼬리를 가짐

1. 각 항목별 분위의 평균 및 통계량임

자료: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2020)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2011년, 2015년 및 2019년의 자산과 소득항목의 표본통계량을 살펴본 결과, 부동산 자산이 없는 가구의 비중이 2011년 33%에서 2015년 31%, 2019년 30%로 꾸준히 감소하였다. 또한 거주주택이 없는 가구의 비중도 2011년 43%에서 2015년 40%, 2019년 39%로 꾸준히 감소하였다. 반면, 부채가 전혀 없는 가구의 비중은 2011년 34%에서 2015년 35%, 2019년 36%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비율³⁴⁾이 2011년 152.9%에서 2019년 190.6%로 37.7%p 증가³⁵⁾한 것과 대조적으로 부채가 없는 가구의 수가 증가한 것은 부채가 있는 가구에서 부채가 더 증가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2011~2019년 기간 중 자산과 순자산의 비대칭도는 2011년 각각 8.8, 9.3에서 2015년 10.1, 10.5로 증가하였다가 2019년 6.4, 6.8로 감소하였다. 반면, 처분가능소득의 비대칭도는 2011년 11.8에서 2015년 4.4로 낮아졌다가, 2019년 7.2로 다시 높아졌다. 이에 따라 2011년에는 처분가능소득의 비대칭도가 자산 및 순자산보다 컸으나, 2015년에는 처분가능소득의 비대칭도가 작게 나타났고, 2019년에는 다시 처분가능소득의 비대칭도가 자산 및 순자산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2015년 및 2019년 통계에서 공통적으로 부동산과 거주주택이 없는 가구의 비중이 각각 30% 이상이지만, 그 비중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가계 자산 중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1년 69.2%에서 2019년 71.8%로 증가하였고, 부동산에서 거주주택이 차지하는 비중도 2011년 52.8%에서 2019년 57.5%로 증가하였다. 2011~2019년 기간 중 자산과 순자산은 각각 연평균 2.9%, 2.8% 증가하였는데 비해, 처분가능소득은 연평균 3.1%로서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자산 중에서는 거주주택이 연평균 4.5%로 자산과 소득을 통틀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나. 자산 유형별 분포

2011~2019년 기간 중 가구의 자산은 연평균 4.1% 증가하였는데, 동 기간 중 우리나라 가계의 자산은 부동산, 특히 거주주택을 중심으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2012년만 예외적으로 가계의 부동산 및 거주주택의 평균 보유액과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

34) 가구의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 = (가구 부채총액 ÷ 가구 처분가능소득) × 100

35) OECD, 「OECD National Accounts」, 2020. 11.

중이 전년대비 감소하였는데, 이는 2012년 주택시장이 전반적으로 침체되어 주택가격이 하락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국부동산원³⁶⁾에 따르면, 주택매매가격지수가 2010년 12월(88.671)대비 2011년 12월(94.112) 5.441 증가한 데 반해, 2012년 12월에는 92.764로 1.348 감소하였다.

[표 7] 자산 유형별 가구당 보유액 및 구성비

(단위: 만원, %)

	자 산	금융 자산	저축액	전·월세 보증금	실물 자산	부동산	거주주택	거주주택 외	기타
2011 (구성비)	32,324 (100.0)	7,802 (24.1)	5,571 (17.2)	2,231 (6.9)	24,522 (75.9)	22,505 (69.6)	12,194 (37.7)	10,310 (31.9)	2,017 (6.2)
2012 (구성비)	32,688 (100.0)	8,457 (25.9)	6,093 (18.6)	2,363 (7.2)	24,232 (74.1)	22,055 (67.5)	11,770 (36.0)	10,286 (31.5)	2,177 (6.7)
2013 (구성비)	33,539 (100.0)	8,646 (25.8)	6,308 (18.8)	2,338 (7.0)	24,893 (74.2)	22,678 (67.6)	12,364 (36.9)	10,314 (30.8)	2,215 (6.6)
2014 (구성비)	34,685 (100.0)	8,914 (25.7)	6,550 (18.9)	2,363 (6.8)	25,772 (74.3)	23,649 (68.2)	13,166 (38.0)	10,483 (30.2)	2,123 (6.1)
2015 (구성비)	36,637 (100.0)	9,279 (25.3)	6,826 (18.6)	2,453 (6.7)	27,358 (74.7)	25,237 (68.9)	14,237 (38.9)	11,000 (30.0)	2,122 (5.8)
2016 (구성비)	38,671 (100.0)	9,722 (25.1)	7,208 (18.6)	2,514 (6.5)	28,950 (74.9)	26,835 (69.4)	15,416 (39.9)	11,419 (29.5)	2,115 (5.5)
2017 (구성비)	42,036 (100.0)	10,346 (24.6)	7,685 (18.3)	2,662 (6.3)	31,689 (75.4)	29,380 (69.9)	16,894 (40.2)	12,487 (29.7)	2,309 (5.5)
2018 (구성비)	43,191 (100.0)	10,570 (24.5)	7,873 (18.2)	2,697 (6.2)	32,621 (75.5)	30,379 (70.3)	17,933 (41.5)	12,446 (28.8)	2,242 (5.2)
2019 (구성비)	44,543 (100.0)	10,504 (23.6)	7,632 (17.1)	2,873 (6.4)	34,039 (76.4)	31,962 (71.8)	18,945 (42.5)	13,017 (29.2)	2,076 (4.7)
(증감율)	(4.1)	(3.8)	(4.0)	(3.2)	(4.2)	(4.5)	(5.7)	(3.0)	(0.4)

주: 1) 2011~2019년 기간의 연평균 증가율(CAGR)

1. '거주주택 외'에는 '계약금 및 중도금'이 포함됨
2. 구성비는 자산대비 비중임
3. 단위조정으로 인한 단수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36) 한국부동산원, 월간 매매가격지수.

2019년 기준 가구의 자산에서 실물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76.4%로 실물자산은 대부분 부동산(71.8%)이며, 가구의 자산에서 거주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은 42.5%로 나타났다. 동 기간 중 저축액은 자산보다 낮은 수준인 4.0% 증가함에 따라 비중도 17.2%에서 17.1%로 0.1%p 감소하였다. 반면, 거주주택은 연평균 5.7%로서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여 비중도 37.7%에서 42.5%로 4.8%p 증가하였다.

가계의 거주주택 평균은 2011년 1억 2,194만원에서 2012년 1억 1,770만원으로 소폭 하락한 후, 꾸준히 증가해 2019년 1억 8,945만원으로 2012~2019년 기간 중 7,175만원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자산에서 부동산과 거주주택이 차지하는 비중도 2011년 37.7%에서 2012년 36.0%로 하락한 이후에는 2019년 42.5%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그림 6] 가구당 거주주택 평균 보유액 및 자산 구성비 추이



자료: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자산 및 소득 분포

2011~2019년 기간 중 수도권 거주자의 소득은 연평균 4.6%, 자산은 3.7%, 실물자산은 3.5%, 순자산은 3.6% 증가한 데 비해, 비수도권 거주자의 소득은 연평균 4.7%, 자산은 5.0%, 실물자산은 5.1%, 순자산은 4.5% 증가하였다. 2011~2019년 기간 중 실물자산의 격차가 가장 큰 폭으로 완화되었는데, 2011년 1.69에서 2019년 1.59배로 0.10배 축소되었다.

[표 8]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자산 및 소득 격차 비교

(단위: 만원, %)

	수도권					비수도권				
	자산	금융자산	실물자산	순자산	소득	자산	금융자산	실물자산	순자산	소득
2011 ²⁾	41,017	9,809	31,208	33,432	4,665	24,437	5,981	18,456	20,925	3,842
2012	40,180	10,418	29,762	32,190	4,813	25,877	6,673	19,203	21,958	4,174
2013	40,607	10,571	30,037	32,528	4,959	27,094	6,891	20,203	22,893	4,384
2014	41,425	10,891	30,535	33,111	5,072	28,522	7,105	21,416	24,148	4,493
2015	42,978	11,271	31,707	34,331	5,206	30,821	7,452	23,370	25,871	4,585
2016 ²⁾	45,726	11,884	33,842	36,737	5,921	32,120	7,713	24,406	26,775	5,067
2017	50,465	12,853	37,611	40,844	6,300	34,220	8,022	26,198	28,363	5,154
2018	52,741	13,159	39,582	42,694	6,412	34,344	8,172	26,172	28,413	5,286
2019 ²⁾	55,116	13,101	42,015	44,740	6,483	34,525	8,044	26,481	28,259	5,394
(증감율) ¹⁾	(3.7)	(4.3)	(3.5)	(3.6)	(4.6)	(5.0)	(4.6)	(5.1)	(4.5)	(4.7)

주: 1) 2011~2019년 기간의 연평균 증가율(CAGR)

2) 2011년, 2016년은 구계열 자료이고, 2019년은 신계열 자료임

1. 단위조정으로 인한 단수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동 기간 중 수도권(A)과 비수도권(B) 거주자 간 소득 및 자산의 격차(A/B)는 모두 2011~2015년 기간에는 축소되었다가, 2015~2019년 기간에는 다시 확대되었다. 소득의 경우는 2011년 1.21배에서 2015년 1.14배로 하락하였다가, 2019년 1.20배로 다시 확대되었고, 자산도 2011년 1.68배에서 2015년 1.39배로 하락하였다가 2019년 1.60배로 확대되었다.

[그림 7]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자산 및 소득 격차 추이



자료: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자산 격차가 2011년에서 2015년 기간 중에는 축소되다가, 2015년 이후 다시 격차가 확대된 것은 2015년 이후 비수도권보다 수도권에서 주택가격이 상대적으로 빠르게 증가한 것에서 기인한다. 수도권의 주택가격지수는 2011년 96.5에서 2019년 104.0로 7.5p 증가한 반면, 비수도권의 주택가격지수는 2011년 91.9에서 2019년 98.0으로 6.1p 증가하였다. 그런데, 이를 기간 구분을 통하여 살펴보면, 2011~2014년 기간에는 비수도권의 주택매매가격이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하였으나, 2015~2019년 기간에는 수도권의 주택매매가격이 더 크게 증가하였다.

[그림 8] 주택매매가격지수 변동률 추이

(2017.11 = 100.0)



주: 각 연도 12월 기준 주택매매가격지수를 기준으로 전년 12월과의 차이로 계산

자료: 한국부동산원,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유형별 매매가격지수」

라. 연령대별 자산 및 소득 분포

연령대별 자산 및 소득 분포 변화를 2011년과 2019년을 비교함으로써 살펴보았다. 2011년과 2019년에서 공통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소득의 경우 가구주 연령대가 상승함에 따라 꾸준히 증가하다 40대를 정점으로, 50대에는 정체되어 있다가 60대에는 큰 폭으로 감소한다. 그러나 자산의 경우는 50대까지 꾸준히 증가하고, 60대의 자산 감소도 소득에 비해 상대적으로 완만한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60대의 순자산은 40대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2019년의 경우에는 50대와 비교하여도 큰 차이가 없다. 2011년과 2019년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차이는 자산과 순자산의 경우 2011년에는 50대까지 꾸준히 증가하나, 2019년에는 연령대가 상승할수록 증가율이 정체되고, 특히 40대에서 50대로 넘어가면서 증가율이 급격히 감소되는 현상을 보인다는 점이다.

[표 9] 연령대별 자산 및 소득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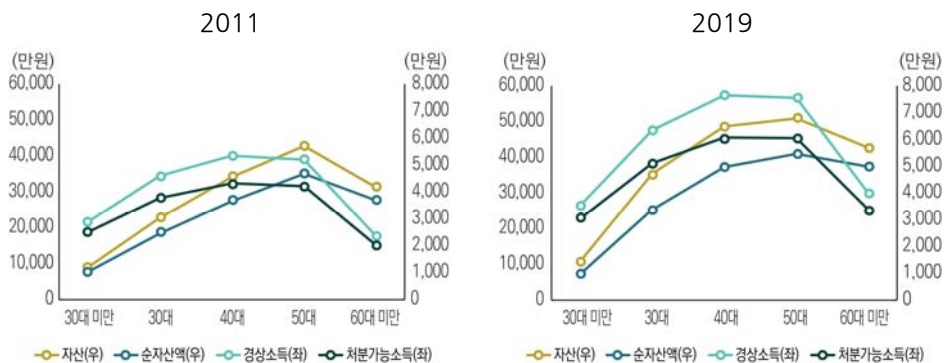
(단위: 만원)

	2011				2019			
	자산	순자산액	경상소득	처분가능소득	자산	순자산액	경상소득	처분가능소득
30세 미만	8,954	7,671	2,879	2,495	10,720	7,241	3,533	3,038
30대	22,747	18,342	4,601	3,779	35,467	25,385	6,346	5,123
40대	34,187	27,460	5,345	4,322	48,686	37,359	7,648	6,079
50대	42,787	35,116	5,196	4,221	50,903	40,987	7,549	6,053
60대 이상	31,302	27,640	2,345	2,007	42,701	37,422	3,989	3,378

주: 연령대는 가구주의 연령대를 의미함

자료: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그림 9] 연령대별 자산 및 소득 분포 변화



자료: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2019년에 40대 가구의 처분가능소득이 50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2018년을 기점으로 40대의 소득이 50대를 추월하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추정된다. 2011~2019년 기간 중 2011년은 40대 가구의 소득이 50대에 비해 많았으나, 2012년부터 2017년 기간에는 50대 가구의 소득이 더 높았다가, 2018년 이후 40대 가구의 소득이 50대 가구의 소득을 넘어선다. 2011~2019년 기간 중 40대 가구의 부채가 50대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함에 따라 원리금 상환액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등 40대 가구의 비소비지출이 50대 가구의 비소비지출보다 많았다. 그러나 2018년부터 40대 가구의 소득이 50대 가구를 추월하게 됨에 따라 40대 가구의 처분가능 소득도 50대 가구를 상회한 것으로 보인다.

[그림 10] 40대, 50대 가구의 소득 및 비소비지출



자료: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60대 이상 가구에서는 2011~2019년 기간 중 자산에서 금융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2011년 15.8%에서 2019년 18.4%로 2.6%p 상승하였으나, 여전히 실물자산의 비중이 81.6%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2019년 기준 유동성이 높은 저축은 15.5%인 데 반해, 유동성이 낮은 부동산은 78.1%, 거주주택은 45.1%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우리나라 고령층의 자산 유동성은 낮은 수준이다.

[표 10] 60대 이상 가구의 자산 항목별 비중

(단위:%, %p)

	금융자산	저축액	실물자산	부동산	거주주택
2011	15.8	13.2	84.2	80.6	44.2
2012	16.9	14.2	83.1	79.1	41.3
2013	16.9	14.5	83.1	78.7	41.7
2014	17.6	15.0	82.4	78.6	41.4
2015	17.6	15.0	82.4	78.8	42.3
2016	18.2	15.5	81.8	78.0	42.1
2017	18.2	15.6	81.8	77.6	42.3
2018	18.8	15.9	81.2	77.2	43.5
2019	18.4	15.5	81.6	78.1	45.1
증감액 ¹⁾	2.6	2.3	-2.6	-2.5	0.9

주: 1) 2011년 대비 2019년의 비중 차이

자료: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그림 11] 60대 이상 가구의 총자산 대비 거주주택 비중



자료: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생애주기가설에 따르면 개인들은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한 예비적 목적으로 경제활동기인 청·장년기에 저축을 하고, 축적된 자산을 은퇴 후의 노후생활을 영위하는 데 사용한다.³⁷⁾ 이렇게 자산은 실직, 질병, 노후 등 가계의 다양한 위

37) A. Ando, F. Modigliani, *The "Life Cycle" Hypothesis of Saving: Aggregate Implications and Tests*,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53(1): 1963.4., pp. 55~84.

기 상황에 대한 경제적 안정성을 담보하는 역할을 수행하는데, 자산의 낮은 유동성은 위기상황에 대한 담보 역할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부동산 자산의 비중 감소는 긍정적인 요인이나, 거주주택의 비중이 2012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점은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별다른 소득이 없는 고령층은 주택가격이 하락하는 경우 보유자산의 가치 하락으로 노후 대비가 불안해질 수 있다. 또한 실직, 심각한 질병 등으로 갑작스런 자금수요가 발생하면, 거주주택 등 부동산을 처분할 수밖에 없는데, 이를 현금화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향후 고령층의 거주주택이 대량으로 시장에서 매물로 나온다면, 주택 가격에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여 가계는 물론 금융기관의 자산 건전성이 악화되어 국민 경제적으로도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³⁸⁾

3. 소결

2011년, 2015년 및 2019년의 자산과 소득항목의 표본통계량을 살펴본 결과, 순자산과 처분가능소득 모두 중위값보다 평균이 큰 오른쪽으로 긴 꼬리를 가지고 있는 비대칭분포를 보였다.

2019년 기준 우리나라 가계 자산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71.8%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2012년 이후 거주주택 가격이 꾸준히 증가한 영향으로 거주주택 자산이 다른 자산항목 증가율보다 높은 연평균 5.7% 증가하였다. 이에 거주주택이 차지하는 비중도 42.5% 수준으로 높아졌다. 2011~2019년 기간 중 부동산 또는 거주주택이 없는 가구의 비중이 꾸준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가계에서 부동산을 통한 자산 축적이 점차 확대되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부채가 없는 가구의 비중은 2011~2019년 기간 중 꾸준히 증가하였는데,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비율은 동 기간 중 37.7%p 증가하였다. 즉, 부채가 없는 가구의 비중 증가에도 불구하고, 부채가 있는 가구의 가구당 평균 부채 금액이 상승해 가계 전체의 부채가 증가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38) 이창선, 「가계 자산 포트폴리오: 고령층일수록 부동산 변동 리스크에 노출」, LG Business Insight 2012.2.8.

수도권과 비수도권 거주자 간 자산 격차는 2011~2015년 기간에는 축소되었다가, 2015~2019년 기간에는 다시 확대되어, 2011~2019년 기간 중 0.08배p 축소되었다. 2011~2015년 기간의 자산 격차 축소는 2011년에서 2014년 기간에는 비수도권의 주택매매가격이 수도권에 비해 높게 증가하였으나, 2015~2019년 기간에는 수도권의 주택매매가격이 더 큰 폭으로 증가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소득의 경우는 2011~2019년 기간 중 자산 격차 축소 폭보다 작은 수준인 0.01배p 축소되었다.

우리나라 60대 이상 가구는 2019년 기준 부동산의 비중이 78.1%를 차지하고 있고, 특히 거주주택의 비중이 45.1%를 차지하고 있어, 자산 유동성이 낮은 수준이다. 유동성이 낮은 거주주택 등 부동산 위주의 자산구성은 가계가 실직, 질병 등 갑작스런 위기 상황에 직면할 경우, 즉각적인 대응이 어려울 수 있다. 또한 은퇴 후 별다른 소득이 없는 고령층은 주택가격이 하락하는 경우 보유자산의 가치 하락으로 노후 대비가 불안해질 수 있으므로, 가계 자산의 경제적 안정성 담보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Ⅲ. 우리나라 가계의 자산 및 소득 격차 분석

본 장에서는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2011~2019년 기간 중 자산 및 소득 분포의 변화를 분석한다. 또한 본 연구가 가계의 자산 및 소득 분포에 초점을 두고 있으므로 분석 단위를 가구로 하고, 자산과 소득은 순자산(net worth)과 처분가능소득(disposable income)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순자산은 자산에서 부채를 뺀 값이고, 처분가능소득은 소득에서 세금, 사회보장분담금, 이자 등의 비소비지출을 제외한 소득이다.³⁹⁾

가구 구성원의 후생수준을 살펴보기 위해 소득은 가구의 소득을 가구원수의 제곱근($\sqrt{\text{가구원수}}$)으로 나눈 균등화 소득을 이용하였다.⁴⁰⁾ 그러나 자산관련 자료는 균등화하지 않은 자료를 이용하였다. Sierminska 외(2005)⁴¹⁾42)는 “가계 자산의 분포 분석에 있어서 가계 자체가 분석의 단위이므로 가구원 수를 고려하지 않는다. 또한 여타 자산분배에 관한 실증연구에서도 일반적으로 가구원 수에 관한 고려를 하지 않는데, 이는 가구 내에서 자산은 가구원들에게 공공재와 같아 한 가구원이 자산을 사용하는 것이 다른 가구원의 자산 사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분석 자료 분포의 양 극단을 조정하기 위한 특이항 조정(top-coding 및 bottom-coding)은 하지 않았다. 통계청 자료의 경우 자료가 비교적 잘 정비되어 있어서 특이항을 조정할 필요가 크지 않고, 자산 및 소득 관련 분석에서는 좌우측 양극단의 값도 중요한 의미를 갖기 때문이다.⁴³⁾

39)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비소비지출, 처분가능소득은 행정자료로 보완한 조사결과이며, 이외의 주요통계(자산, 부채, 순자산 등)는 면접조사 결과만으로 작성됨

40) OECD에서 권장하는 방식으로 균등화한 소득을 이용하면 비균등화 소득에 비해 불평등도가 낮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음

41) Sierminska, E. and Smeeding, T.M., “Measurement Issues: Equivalence Scales, Accounting Framework, and Reference Unit”, Construction and Usage of Comparable Microdata on Wealth: the LWS workshop, Perugia, Italy, 27-29 January, 2005.

42) OECD의 자산 분포 관련 연구에서는 이들이 제안한 연구 방식을 표준으로 채택

43) 남상호(2015)와 정준호·전병유(2017)의 연구도 이와 같은 이유로 자료에 대한 특이항 조정을 하지 않고 분석함

1. 가계의 자산 및 소득 격차 분석

가. 그래프를 통한 격차 분석

가계금융복지조사 상 2011년, 2015년, 2019년의 자산 및 소득 변수의 불평등도를 커널밀도추정(Kernel Density Estimate; KDE) 및 펜 퍼레이드(Pen's Parade)⁴⁴⁾, 로렌즈곡선⁴⁵⁾을 이용해 분석한 결과, 자산이 소득에 비해 상위계층 집중도가 더 심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커널밀도추정(Kernel Density Estimation; KD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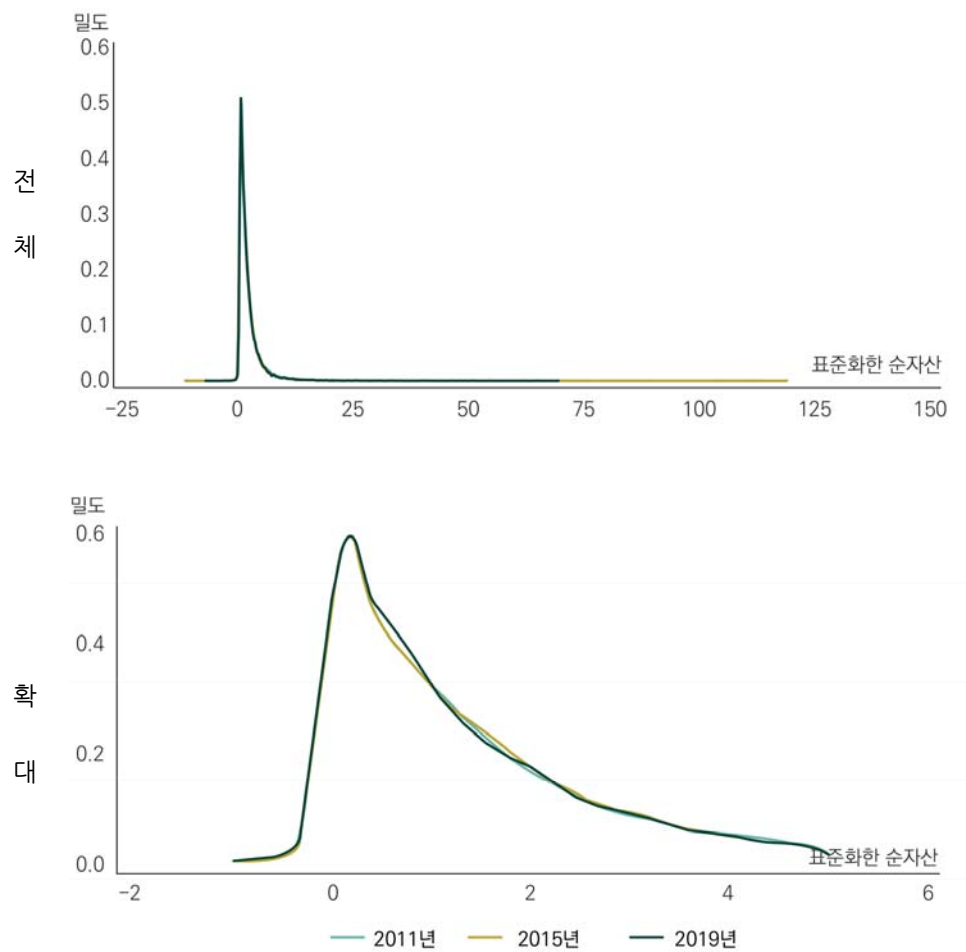
- 밀도추정(density estimation)이란 관측된 데이터의 분포로부터 원래 변수의 (확률)분포를 추정하는 것
 - 밀도 추정에는 모수적(parametric) 방법과 비모수적(non-parametric) 방법이 있음
 - 비모수적 밀도추정은 관측된 데이터만으로 확률밀도함수(pdf)를 추정하는 것으로, 비모수적 밀도추정의 가장 간단한 형태가 관측된 데이터들로부터 히스토그램을 구한 후, 히스토그램을 정규화하여 확률밀도함수로 사용하는 것
 - 그러나 히스토그램(histogram)은 구간의 경계에서 불연속적이고, 구간의 크기 및 시작위치에 따라 히스토그램이 달라지는 등의 문제점이 있음
 - 커널밀도추정은 비모수적 밀도추정 방법 중 하나로 커널함수(kernel function)를 이용해 히스토그램 추정 방법의 문제점을 개선한 것

44) Pen's Parade는 자산 또는 소득이 가장 작은 사람부터 가장 큰 사람까지 순서대로 줄을 세운 것으로, 맨 오른쪽에서 급격하게 곡선이 올라갈수록 자산 또는 소득이 상위계층에 집중되는 현상이 심하다는 것을 나타냄

45) 소득에 따라 순위를 매겨서, 가로축에는 인구의 누적백분율, 세로축에는 소득금액의 누적백분율을 표시함. 로렌즈곡선 내의 45도 선은 완전한 평등을 나타내고, 소득격차가 심해질수록 45도선 아래로 멀어지는 형태가 됨. 완전평등선(45도선)과 로렌즈곡선 사이의 면적이 클수록 불평등도가 커지며 해당 면적을 불평등면적이라 함. 지니계수는 완전평등선과 가로축, 세로축이 이루는 삼각형과 이 불평등면적 간의 비율임

커널밀도추정 결과, 2019년 순자산의 최댓값은 중위값의 69.3배 수준이고,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최댓값은 중위값의 34.7배 수준으로 나타난다. 또한 순자산이 처분가능소득보다 오른쪽으로 꼬리가 길게 형성되어 있어 순자산이 처분가능소득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불평등하게 분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⁴⁶⁾

[그림 12] 표준화한 순자산의 커널밀도함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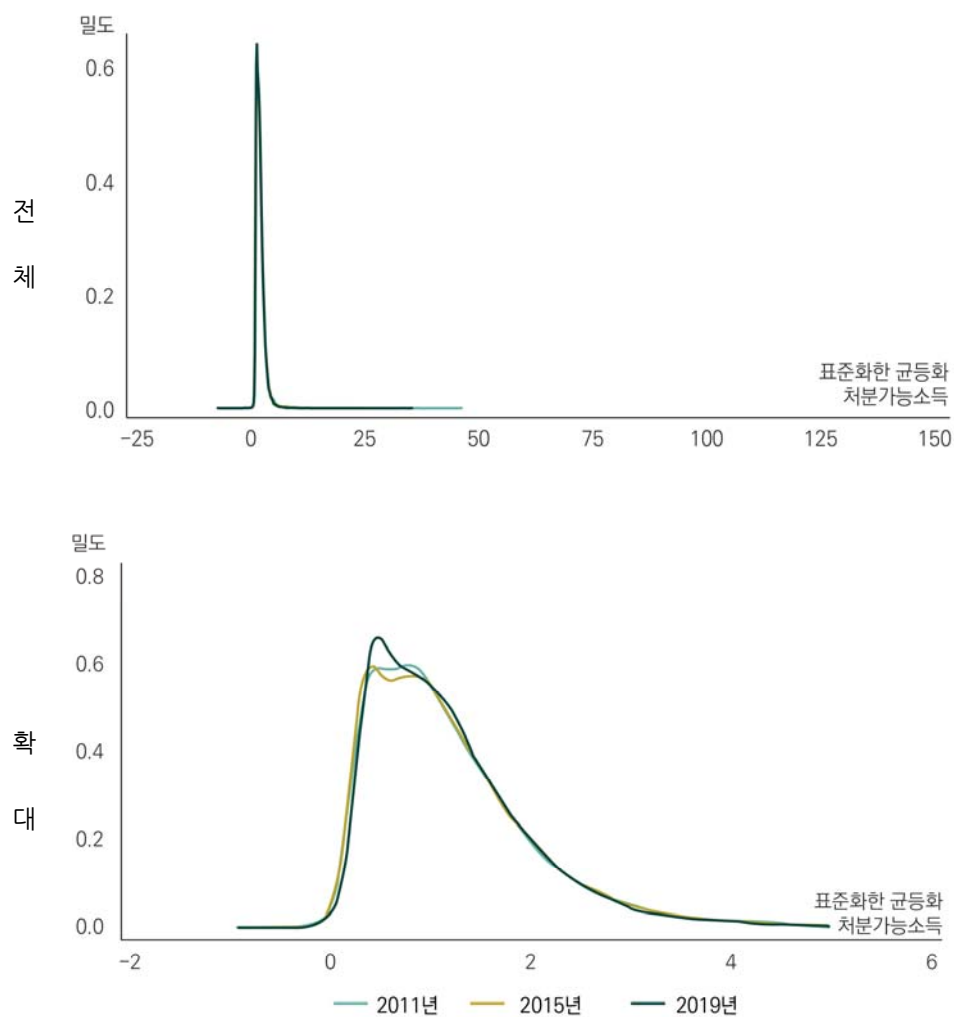


주: 2011년, 2015년 및 2019년을 하나의 그래프로 나타내어, 변화를 살펴보고자 하였으나, 변화의 폭이 크지 않아 최빈값 부분의 X축을 확대하여 비교함. 확대 결과, 유의미한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으나 이로 인해 분포가 실제보다 넓게 퍼진 형태로 표현됨

46) 일반적으로 팬 퍼레이드는 실제 값(level)을 기준(y축)으로 분포를 나타내나, 자산과 소득의 단위(level) 차이에 따라 기울기가 달리 보일 수 있어, 각 변수의 중위값으로 표준화하여 분석

2011년, 2015년 및 2019년의 커널밀도함수를 하나의 그래프로 나타내어, 이들 간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순자산과 처분가능소득 모두 2011년에 비해 오른쪽 꼬리가 짧아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불평등도가 완화된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최빈값 부근을 확대하여 본 결과, 2019년 처분가능소득 최빈값 분포가 눈에 띄게 높아져 중위계층이 2011년과 2015년에 비해 두꺼워졌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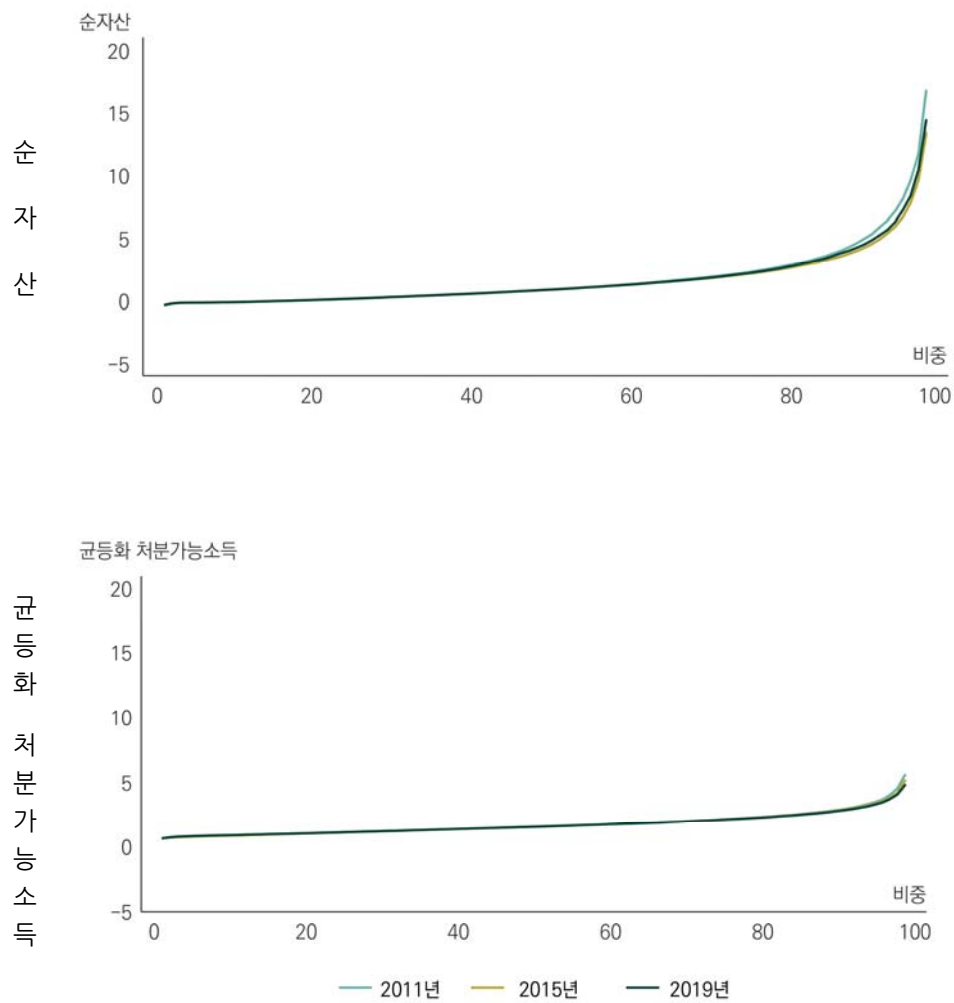
[그림 13] 표준화한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의 커널밀도함수 추이



주: 2011년, 2015년 및 2019년을 하나의 그래프로 나타내어, 변화를 살펴보려고 하였으나, 변화의 폭이 크지 않아 최빈값 부분의 X축을 확대하여 비교함. 확대 결과, 유의미한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으나 이로 인해 분포가 실제보다 넓게 퍼진 형태로 표현됨

순자산의 팬 퍼레이드가 처분가능소득에 비해 오른쪽으로 갈수록 급격히 증가하는 모양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자산이 소득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불평등하게 분포되어 있는 것을 반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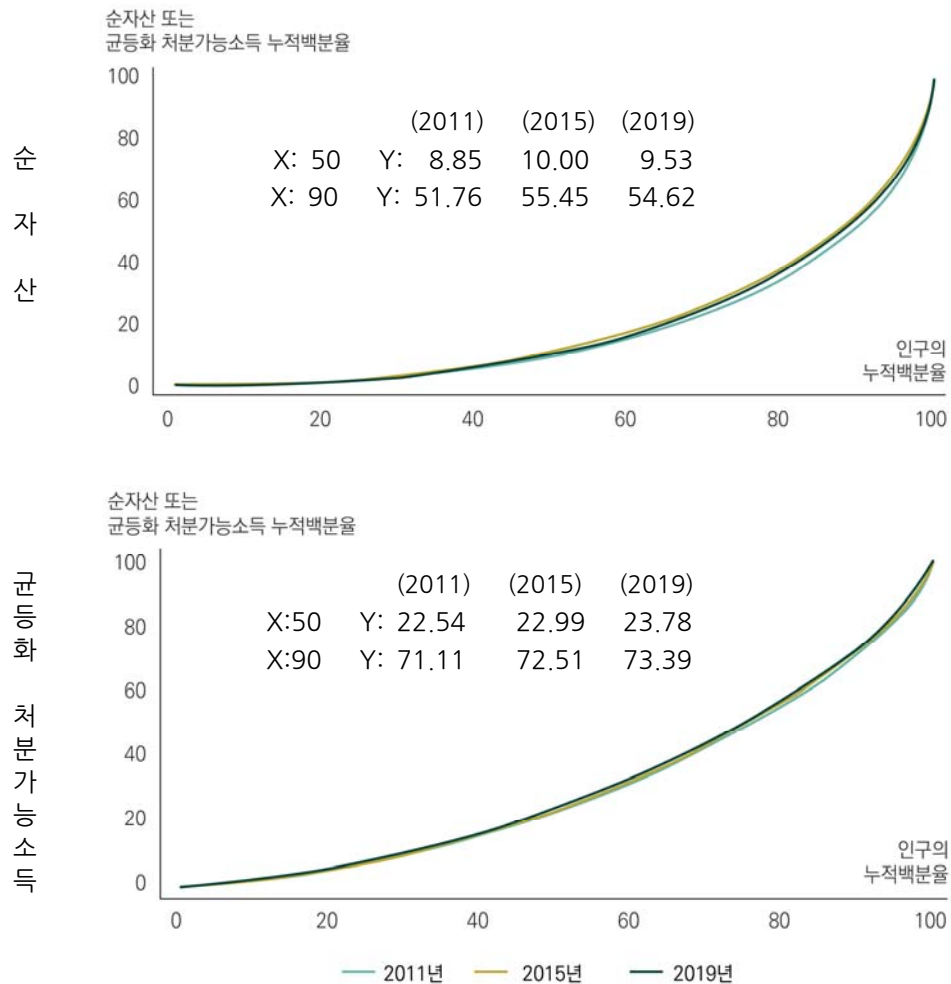
[그림 14] 순자산 및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의 팬 퍼레이드 추이



주: 2011년, 2015년 및 2019년을 하나의 그래프로 나타내어, 변화를 살펴보고자 하였으나, 변화의 폭이 크지 않아 최빈값 부분의 X축을 확대하여 비교함. 확대 결과, 유의미한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으나 이로 인해 분포가 실제보다 넓게 퍼진 형태로 표현됨

로렌즈곡선을 그려본 결과, 순자산의 경우, 50분위까지의 누적 비중이 2011년 8.85에서 2019년 9.53으로 높아졌고, 90분위까지는 2011년 51.76에서 2019년 54.62로 높아져 2019년의 로렌즈곡선이 2011년에 비해 45도선에 더 가까워졌다.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의 50분위까지 누적 비중은 2011년 22.54에서 2019년 23.78로 높아졌고, 90분위는 71.11에서 73.39로 높아져 2019년의 로렌즈곡선이 2011년에 비해 45도선에 더 가까워졌다. 즉, 순자산은 2011~2015년 기간에는 불평등이 개선되었으나, 2015년에 비해서 2019년에는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고,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은 2011년에서 2015년, 2019년으로 가면서 점차 분배가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5] 순자산 및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의 로렌즈곡선 추이



순자산과 처분가능소득 모두 2011년에 비해 불평등도가 완화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순자산의 로렌즈곡선이 처분가능소득에 비해 45도선에 더 멀리 분포하는 볼록한 모양으로 나타나고 있어, 자산이 소득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불평등하게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지표를 통한 격차 분석

지니계수, 일반화된 엔트로피지수, p_{90}/p_{10} , p_{90}/p_{50} 을 사용하여 불평등도를 분석하였다.

일반화된 엔트로피(Generalized Entropy; GE) 지수

□ 일반화된 엔트로피(GE) 지수

- 정보이론에서 사전적으로 기대되는 정보의 양(H)을 엔트로피라고 지칭하는데, 타일(Theil, 1967)은 이러한 개념을 불평등도 측정에 적용하여 다음과 같은 엔트로피지수(Entropy Index) 산출 공식을 도출

$$T = \log n - H(x) = \sum x_i \cdot \log n \cdot x_i$$

- n 은 표본의 크기, x_i 는 전체에서 i 번째 가구의 자산(또는 소득)의 비중
- 타일의 엔트로피지수를 일반화하여 특정 기준에 대한 가중치 파라미터 α 로 표기한 것이 일반화된 엔트로피(GE)지수이고, 불평등의 요인별 분해에 유용
 - $GE(\alpha)$ 의 값은 0에서 무한대(∞)까지이고, 값이 0인 경우 완전평등 분배 상태를 의미하고, 값이 증가할수록 불평등도 증가
- 가구자료를 이용하여 $GE(\alpha)$ 지수를 계산하는 식은 다음과 같이 정의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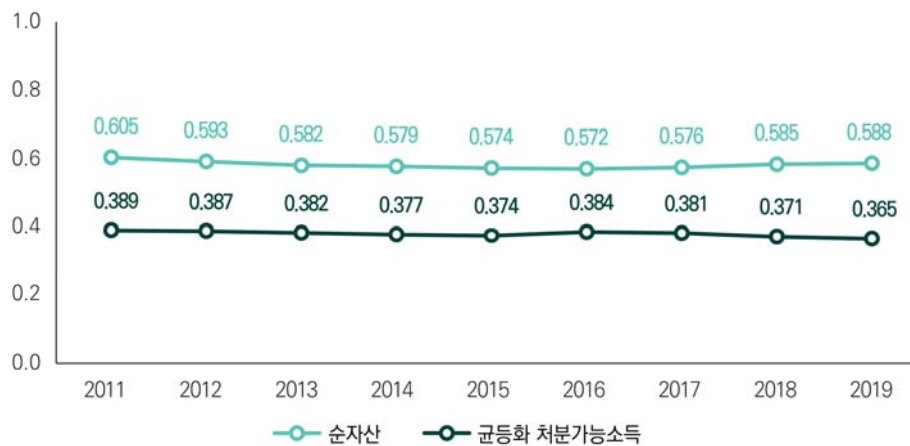
$$GE(\alpha) = \frac{1}{\alpha(\alpha-1)} \left[\frac{1}{n} \sum_{i=1}^n w_i \left(\frac{y_i}{\mu} \right)^\alpha - 1 \right]$$

- n 은 표본의 크기, w_i 는 i 번째 가구의 가구가중치, y_i 는 i 번째 가구의 자산(또는 소득), μ 는 평균자산(또는 평균소득)
- α 는 자산(또는 소득) 그룹에 대한 가중치로 α 의 값이 작을수록 하위계층의 자산(또는 소득)변화를 더 민감하게 측정, 일반적으로 $\alpha=0, 1, 2$ 가중치를 주로 사용

p90/p10은 소득(자산) 10분위 중 9분위 소득(자산)의 경계값을 1분위 소득(자산) 경계값으로 나눈 값으로, p10은 하위 10% 계층의 최대 소득(자산) 값을 의미한다. p90/p50은 소득(자산) 10분위 중 9분위 소득(자산)의 경계값을 5분위 소득(자산) 경계값으로 나눈 값이다. 따라서 p90/p10의 값이 커지는 것은 최하위 계층과 최상위 계층의 격차가 확대되는 것을 의미하고, p90/p50은 중위계층과 최상위간 격차가 확대되는 것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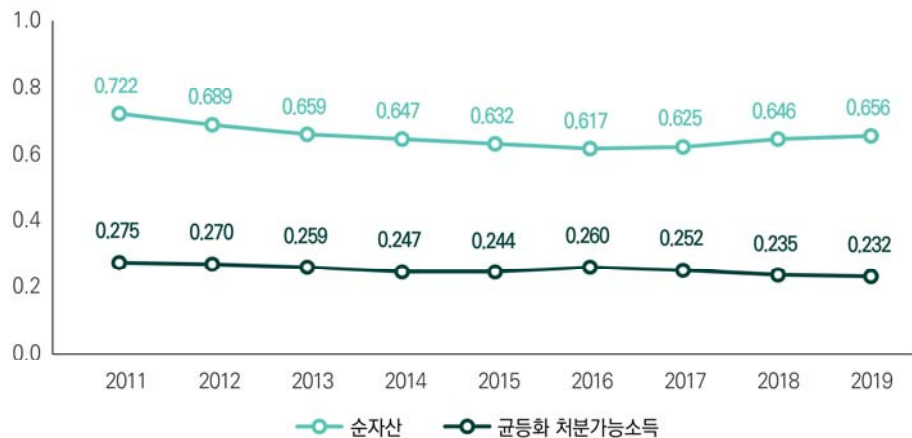
순자산의 지니계수는 2011년 0.605에서 2019년 0.588로 낮아졌고,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의 지니계수도 2011년 0.389에서 2019년 0.365로 낮아졌다. 그러나 기간을 구분하여 살펴보면, 각각 다른 양상을 보인다. 순자산의 지니계수는 2011~2016년 기간에는 꾸준히 하락하다가, 2016~2019년 기간에는 다시 상승하였다. 반면,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의 지니계수는 2011~2015년까지 하락하다가, 2016년에는 상승하였고, 이후 2017~2019년 기간에는 하락해 2019년에는 2011년 이후 최저 수준을 나타냈다.

[그림 16] 순자산 및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의 지니계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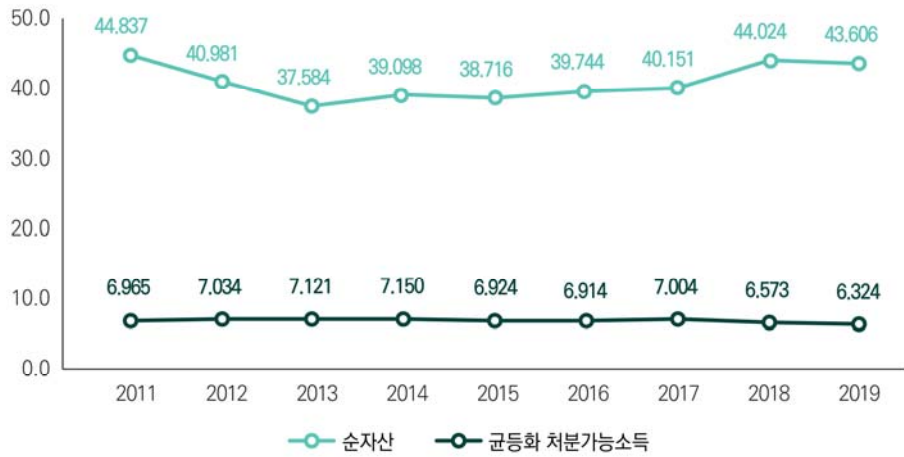
순자산의 일반화된 엔트로피지수는 2011년 0.722에서 2019년 0.656으로 낮아졌고,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의 일반화된 엔트로피지수도 2011년 0.275에서 2019년 0.232로 낮아졌다. 그러나 기간을 구분하여 살펴보면, 순자산과 처분가능소득은 서로 다른 양상을 보인다. 순자산의 일반화된 엔트로피지수는 2011~2016년 기간에는 꾸준히 감소하였으나, 2016~2019년 기간에는 0.617에서 0.656으로 다시 상승하였다. 반면,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의 일반화된 엔트로피지수는 지니계수와 마찬가지로 2011~2015년 기간에는 하락하였다가, 2016년에는 상승하였고, 이후 2017~2019년 기간에는 다시 하락해 2019년에는 2011년 이후 최저 수준을 나타냈다.

[그림 17] 순자산 및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의 일반화된 엔트로피지수(GE(1))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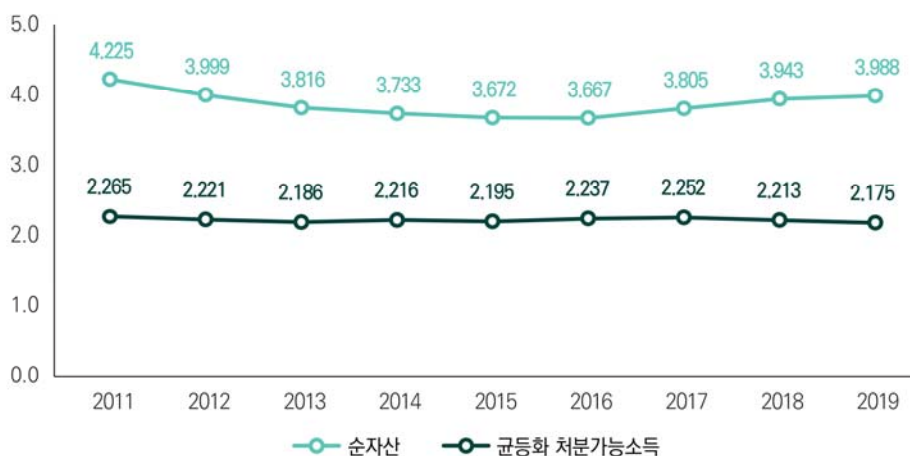
p90/p10의 경우, 순자산은 2011년 44.837배에서 2019년 43.606배로 1.231배p 낮아졌고, 균등화 처분가능소득도 2011년 6.965배에서 2019년 6.324배로 0.641배p 낮아졌다. 변화 추이를 보면, 순자산은 2011~2013년 기간에는 하락하였고, 2014~2018년 기간에는 추세적으로 상승하다가 2019년에는 다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인다. 반면,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은 2011~2014년 기간에는 상승하였다가, 2015~2019년 기간에는 추세적으로 하락하였다. 이에 따라 2015~2019년 기간 중 순자산은 4.994배p 증가한 반면, 처분가능소득은 0.600배p 하락하였다.

[그림 18] 순자산 및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의 p90/p10 추이



p90/p50의 경우, 순자산은 2011년 4.225배에서 2019년 3.988배로 0.237배p 하락하였고, 균등화 처분가능소득도 2011년 2.265배에서 2019년 2.175배로 0.090배p 낮아졌다. 변화 추이를 보면, 순자산은 2011~2016년 기간 중 하락하다가, 2016~2019년 기간에는 3.667배에서 3.988배로 0.321배p 높아진 반면,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은 2011~2015년 기간에는 추세적으로 하락하다가 2016년 반등 후 다시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며, 2015~2019년 기간 중 0.020배p 하락하였다.

[그림 19] 순자산 및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의 p90/p50 추이



순자산과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의 p90/p10, p90/p50의 차이를 통해 순자산과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의 불평등도 변화를 가늠할 수 있다. 자산 하위 10% 계층의 순자산 불평등도는 소득 하위 10% 계층의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불평등도에 비해 2011년 6.4배 높았는데, 2019년에는 6.9배로 더 심화되었다. 반면, 중위계층인 자산 50% 계층의 순자산 불평등도는 소득 50% 계층의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불평등도에 비해 2011년 1.9배 높았는데, 2019년에는 1.8배로 낮아진 것으로 나타난다.

지니계수, 일반화된 엔트로피지수, p90/p10, p90/p50을 사용하여 불평등도를 분석한 결과, 자산이 소득보다 더 불평등하게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2011~2019년 기간 중에는 자산과 소득의 불평등도가 모두 개선되었다. 그러나 최근 2016~2019년 기간 중 변화추이만 놓고 보면, 소득불평등도는 개선된 반면, 자산 불평등도는 심화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자산과 소득의 상관관계 분석

2019년 기준 전체 가구의 자산 및 소득 변수 간 선형관계의 강도를 Spearman 순위 상관계수⁴⁷⁾를 통해 분석한 결과, 자산과 부동산은 0.8971, 자산과 거주주택은 0.7102, 자산과 금융자산은 0.5913으로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났다. 즉, 금융자산이 많은 경우보다 부동산 또는 거주주택 자산이 많을수록 자산이 많을 확률이 높다는 의미이다. 반면, 금융자산과 거주주택(0.1317)의 상관관계가 가장 낮았고, 금융자산과 부채(0.2466), 부채와 순자산(0.2835), 거주주택과 부채(0.2843), 거주주택과 처분가능소득(0.3098)은 상관관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

47) 스피어만 순위상관계수(Spearman correlation coefficient)는 상관계수를 계산할 두 변수의 실제 값 대신 두 변수의 순위를 사용해 상관계수를 계산하는 방식임. 피어슨 상관계수와 마찬가지로 +1과 -1사이의 값을 가지며, 1은 한쪽의 순위가 증가함에 따라 다른 쪽의 순위도 증가함을 뜻하고, -1은 한쪽의 순위가 증가할 때 다른 쪽의 순위는 감소함을 의미함. 피어슨 상관계수와는 달리 비선형 관계의 연관성을 파악할 수 있으며, 이산형, 순서형 데이터에도 적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음

[표 11] Spearman 순위상관계수: 2019년 기준

	자산	금융자산	부동산	거주주택	부채	순자산	경상소득	처분가능소득
자산	1.0000							
금융자산	0.5913***	1.0000						
부동산	0.8971***	0.2763***	1.0000					
거주주택	0.7102***	0.1317***	0.8320***	1.0000				
부채	0.4682***	0.2466***	0.4196***	0.2843***	1.0000			
순자산	0.9627***	0.5797***	0.8686***	0.7023***	0.2835***	1.0000		
경상소득	0.5946***	0.5603***	0.4411***	0.3494***	0.4063***	0.5466***	1.0000	
처분가능소득	0.5314***	0.5300***	0.3855***	0.3098***	0.3308***	0.5010***	0.9746***	1.0000

주: 1. 경상소득과 처분가능소득은 균등화한 소득임

2. ***는 1%, **는 5%, *는 10% 내에서 유의함을 의미

소득기준으로 1분위(하위 20%)와 5분위(상위 20%)를 구분하여 Spearman 순위상관계수를 살펴 본 결과, 변수 간 상관관계가 상이하게 나타났다.

자산과 부동산의 상관계수는 1분위에서는 0.8578, 5분위에서 0.8955로 모두 높게 나타나, 우리나라의 경우 거의 모든 소득계층에서 자산과 부동산의 상관관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부동산과 거주주택의 상관계수를 살펴보면, 1분위에서는 0.9072, 5분위에서 0.6806으로 나타나, 저소득층의 부동산과 거주주택 간 상관관계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저소득층이 보유한 부동산은 대부분이 거주주택이고, 고소득층은 거주주택 이외에 다른 부동산 자산을 보유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부동산과 부채의 상관계수는 1분위 0.1536, 5분위 0.4274로 5분위가 더 높게 나타나고 있어, 고소득층이 부동산 자산형성에 부채를 더 많이 활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⁴⁸⁾ 또한 거주주택과 부채의 상관계수는 1분위(0.1063)와 5분위(0.1576) 간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48) 국회예산정책처의 「경제동향 & 이슈(2018.12.20.)」 “가계부채의 미시적 결정 요인분석”에서는 부동산 자산의 증가는 가구의 금융부채를 증대시키며, 저소득 가구(0.36%)보다 고소득가구(0.73%)의 경우 부채 증가에 더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분석됨. 또한 소득 수준에 따라 부채증가를 견인하는 요인이 다른데, 고소득 가구는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때 담보대출 외에 신용대출까지 늘어난 반면, 저소득 가구의 신용부채는 부동산 가격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표 12] 소득 1분위의 Spearman 순위상관계수: 2019년 기준

	자산	금융자산	부동산	거주주택	부채	순자산	경상소득	처분가능소득
자산	1.0000							
금융자산	0.4425***	1.0000						
부동산	0.8578***	0.0453**	1.0000					
거주주택	0.7629***	-0.0228	0.9072***	1.0000				
부채	0.2214***	0.1158***	0.1536***	0.1063***	1.0000			
순자산	0.9699***	0.4131***	0.8499***	0.7636***	0.0620***	1.0000		
경상소득	0.1768***	0.1771***	0.1132***	0.0788***	0.1251***	0.1577***	1.0000	
처분가능소득	0.0386	0.0947***	0.0031	-0.0081	-0.0249	0.0464**	0.9079***	1.0000

주: 1. 경상소득과 처분가능소득은 균등화한 소득임
 2. ***는 1%, **는 5%, *는 10% 내에서 유의함을 의미

[표 13] 소득 5분위의 Spearman 순위상관계수: 2019년 기준

	자산	금융자산	부동산	거주주택	부채	순자산	경상소득	처분가능소득
자산	1.0000							
금융자산	0.4540***	1.0000						
부동산	0.8955***	0.1355***	1.0000					
거주주택	0.5334***	-0.1013***	0.6806***	1.0000				
부채	0.3831***	-0.0258	0.4274***	0.1576***	1.0000			
순자산	0.9365***	0.4900***	0.8197***	0.5231***	0.1208***	1.0000		
경상소득	0.4134***	0.3310***	0.3068***	0.1656***	0.0783***	0.4104***	1.0000	
처분가능소득	0.2735***	0.2813***	0.1818***	0.0797***	-0.0543***	0.3089***	0.9076***	1.0000

주: 1. 경상소득과 처분가능소득은 *** 균등화한 소득임
 2. ***는 1%, **는 5%, *는 10% 내에서 유의함을 의미

3. 가계의 자산 및 소득 수준 결정요인 분석

본 절에서는 우리나라 가계의 자산 및 소득 수준 결정요인을 분석하고, 결정요인의 영향력 변화를 추정하기 위해 자산과 소득 각각에 대하여 각 연도별로 통상최소자승법에 의한 분석과 분위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위회귀분석은 표본 집단의 이질성을 고려하는 분석방법으로 Koenker and Bassett(1978)⁴⁹⁾가 처음 제시한 개념이다. 자산 또는 소득의 분산이 큰 경우, 자산 또는 소득의 분포가 이질적이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상위 10%에 속하는 그룹의 인적 특성 및 가구 특성의 영향력 정도가 하위 10%에 속하는 그룹의 경우와 차이가 날 수 있다. 이런 경우 통상최소자승법과 같은 평균적인 분석은 그 차이를 포착할 수 없으나, 표본 집단의 이질성을 가정한 분위회귀분석을 사용하면 종속변수의 조건부 분위별 인구학적 특성 및 가구특성 변수들의 영향력을 각각 추정해 낼 수 있다.⁵⁰⁾⁵¹⁾

분석에 이용된 종속변수는 자산의 경우는 순자산, 소득의 경우는 처분가능소득이고, 이를 각각 로그 변환하여 분석에 이용하였다. 설명변수는 자산과 소득 모두 범주형 변수인 가구주 연령, 거주지역, 가구주 성별, 가구주 종사상지위, 가구주 학력 변수를 동일하게 사용하였다.⁵²⁾ 가구주 연령은 30세 미만을 기준변수로, 30~40세 미만, 40~50세 미만, 50~60세 미만, 60세 이상으로 구분하였다. 거주지역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구분하고, 수도권을 기준변수로 하였다. 가구주 성별은 남자를 기준변수로 하였다. 가구주의 종사상 지위는 상용근로자를 기준변수로 임시일용근로자, 자영업자, 무직 등으로 구분하였다. 가구주 학력은 초등학교 졸업 이하를 기준변수로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 대학교 졸업과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ln(Y) = \alpha + \beta X + \epsilon$$

Y (종속변수): 순자산, 처분가능소득

X (설명변수): 가구주 연령, 거주지역, 가구주 성별, 가구주 종사상 지위, 가구주 학력

49) Koenker and Bassett, "Regression Quantiles," *Econometrica*, 1978, vol. 46, issue 1, pp. 33~50.

50) 최강식·정진욱·정진화, "자영업 부문의 소득 분포 및 소득결정요인: 분위회귀분석", 『노동경제논집』, 제 28권 제1호, 2005, pp.135~156

51) 분위회귀분석의 필요성에 대한 직관적인 설명은 앞의 글 최강식 외(2005)의 144~145쪽 참조

52) 연령, 거주지역, 성별, 종사상 지위 등 변수의 교차효과를 고려한 모형도 분석하였으나, 추정결과에 대한 VIF(Variance Inflation Factors, 분산팽창요인) 검토결과, 변수들간 다중공선성 등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분석에서 제외

가. 기초통계량

표본의 관측치 수는 2011년 19,744명, 2015년 18,273명, 2019년 18,064명으로, 독립 변수인 가구주 연령, 거주지역, 가구주 성별, 가구주 종사상 지위, 가구주 학력 등 표본의 기초통계량을 기간별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가구주 연령의 경우 50대 이상 가구주의 분포가 2011년 52.5%에서 2015년 60.0%, 2019년 68.4%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60대 이상 가구주의 비중이 2011년 29.0%에서 2015년 35.8%, 2019년 45.3%로 크게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가구주의 평균 연령은 2011년 51.9세에서 2015년 54.5세, 2019년 57.6세로 상승하였다. 거주지역의 경우 수도권 비중이 2011년 36.0%에서 2019년 32.6%로 낮아졌다. 가구주 성별의 경우 2011년 남성 77.6%, 여성 22.4%에서 2019년 남성 74.0%, 여성 26.0%로 여성 가구주 표본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거주지별 여성 가구주 표본의 비중은 수도권 여성 가구주의 경우 2011년 22.2%에서 2015년 24.0%, 2019년 24.4%로, 비수도권 여성 가구주는 2011년 22.5%에서 2015년 24.0%, 2019년 26.8%로 증가하였다. 대학 졸업 이상 학력자의 비중은 2011년 35.3%에서 2015년 37.2%, 2019년 36.6%를 차지하였으며, 대학 졸업 이상 학력자의 수도권 거주비율은 2011년 42.1%에서 2015년 44.0%로 증가하였다가, 2019년 43.3%로 감소하였다.

종사상 지위는 2011년 상용근로자 40.3%, 임시일용근로자 14.4%, 자영자 26.5%, 무직 등 18.8%, 2015년은 각각 40.0%, 12.2%, 24.6%, 23.2%, 2019년은 37.9%, 12.4%, 22.9%, 26.8%인 것으로 나타나, 2011년과 2019년 사이 상용근로자 비중이 2.4%p 감소하였다. 반면, 무직 등의 비중은 2011년 18.8%에서 2019년 26.8%로 증가하였다. 특히 대학 졸업 이상 학력자 중 종사상 지위가 상용근로자인 경우의 비중은 2011년 66.2%에서 2015년 65.4%, 2019년 60.8%로 꾸준히 감소한 반면, 무직 등의 대학 졸업 이상 학력자 비중은 2011년 16.3%에서 2015년 16.9%, 2019년 18.1%로 꾸준히 증가하였다.

[표 14] 가구주 특성별 비중

(단위: %)

		2011	2015	2019
연령	30세 미만	3.6	2.4	2.1
	30~40세 미만	17.9	14.9	10.7
	40~50세 미만	26.0	22.7	19.0
	50~60세 미만	23.5	24.2	23.1
	60세 이상	29.0	35.8	45.3
거주지	수도권	36.0	34.6	32.6
	비수도권	64.0	65.4	67.4
성별	남자	77.6	76.0	74.0
	여자	22.4	24.0	26.0
학력	초등학교 졸업	20.0	18.7	19.6
	중학교 졸업	11.0	10.8	11.1
	고등학교 졸업	33.7	33.3	32.7
	대학 졸업 이상	35.3	37.2	36.6
종사상 지위	상용근로자	40.3	40.0	37.9
	임시일용근로자	14.4	12.2	12.4
	자영업자	26.5	24.6	22.9
	무직 등	18.8	23.2	26.8
관측치 수(N)		19,744	18,273	18,064

자료: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나. 순자산 수준 결정요인 분석

순자산에 대한 OLS 추정 결과, 2011년, 2015년, 2019년 기준 모두 동일하게 가구주 연령이 높을수록, 수도권에 거주하고, 남성이고, 자영업자이고, 학력이 높을수록 순자산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가구의 순자산에 대한 분위회귀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가구의 자산 수준 결정에 연령, 성별 등 인구학적 요인과 거주지역과 학력 등이 미치는 영향력이 자산분위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2019년 기준으로 표본 집단의 이질성을 가정하고 실시한 분위회귀분석 결과, 순자산 분위별로 가구주 연령, 거주지역, 가구주 성별, 가구주 종사상 지위, 가구주 학력 등과 같은 변수들이 가구의 순자산에 미치는 영향력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⁵³⁾ 인적특성인 가구주 연령은 전 자산분위에서 연령이 증가할수록 자산이 증가하나, 전 연령대에서 자산상위계층으로 갈수록 영향력이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가구주 성별(남성)과 가구주 학력의 경우도 자산에 정(+)의 영향을 미치지 만 자산 상위계층으로 갈수록 그 영향력이 점차 감소하고 있다.

자산 상위계층으로 갈수록 수도권에 거주하는 경우 자산에 더 큰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⁵⁴⁾ 가구주 종사상 지위별로는 자영업자, 상용근로자, 무직 등⁵⁵⁾, 임시일용근로자 순으로 순자산의 증가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임금근로자보다 자영업자가 자산이 더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임금근로자는 생업을 위한 기타 자산이 필요하지 않으나, 자영업자의 경우는 영업장, 기계장치 등 영업을 위한 기타 자산이 필요한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자산 상위 계층의 자영업자가 중위계층의 자영업자에 비해 자영업자 여부가 자산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난다. 2011년 및 2015년의 분석결과도 유사한 경향을 보인다.⁵⁶⁾

53) 2011년 및 2015년 순자산의 회귀분석 결과는 부록 참조

54) 2011년과 2015년의 경우도 동일한 결과가 나타남

55) 무직 등에는 무급가족종사자, 기타종사자(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 교사, 대리운전 기사 등), 기타(무직자, 가사, 학생 등)이 포함됨

56) 부록 참조

[표 15] 가구 순자산에 대한 OLS 및 분위회귀분석 결과: 2019년 기준

변수명		OLS	분위(Quantile)		
			10%	50%	90%
가구주 연령	30~40세 미만	1.017*** (0.000)	1.125*** (0.000)	1.151*** (0.000)	0.955*** (0.000)
	40~50세 미만	1.431*** (0.000)	1.575*** (0.000)	1.566*** (0.000)	1.380*** (0.000)
	50~60세 미만	1.739*** (0.000)	1.836*** (0.000)	1.899*** (0.000)	1.721*** (0.000)
	60세 이상	2.219*** (0.000)	2.347*** (0.009)	2.349*** (0.000)	2.080*** (0.000)
거주지역		-0.288*** (0.000)	-0.070 (0.184)	-0.301*** (0.000)	-0.458*** (0.000)
가구주 성별		-0.607*** (0.000)	-0.758*** (0.000)	-0.586*** (0.000)	-0.344*** (0.000)
종사상 지위	임시일용근로자	-0.830*** (0.000)	-1.379*** (0.000)	-0.688*** (0.000)	-0.522*** (0.000)
	자영업자	0.217*** (0.000)	0.258*** (0.003)	0.109*** (0.001)	0.282*** (0.000)
	무직 등	-0.723*** (0.000)	-1.780*** (0.000)	-0.481*** (0.000)	-0.157*** (0.000)
가구주 학력	중학교 졸업	0.537*** (0.000)	0.764*** (0.000)	0.405*** (0.000)	0.285*** (0.000)
	고등학교 졸업	0.861*** (0.000)	1.102*** (0.000)	0.714*** (0.000)	0.664*** (0.000)
	대학 졸업 이상	1.616*** (0.000)	2.095*** (0.000)	1.380*** (0.000)	1.315*** (0.000)
R ²		0.258	0.189	0.145	0.152

- 주: 1. 기준범주는 30세 미만, 수도권, 남성, 초등학교 졸업, 상용근로자
 2. ***는 1% 수준, **는 5% 수준, *는 10% 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
 3. 가구의 순자산은 균등화지수를 적용하지 않고, 가구의 처분가능소득은 OECD의 균등화지수를 적용

다.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수준 결정요인 분석

가구의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에 대한 OLS 및 분위회귀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가구의 소득 수준 결정에 연령, 성별 등 인구학적 요인과 거주지역, 종사상 지위, 학력 등이 미치는 영향력이 소득분위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에 대한 OLS 추정 결과, 2011년, 2015년 및 2019년 기준으로 모든 연도에서 동일하게 30세 미만에 비해 연령이 높을수록, 거주지역이 수도권이고, 성별은 남성이고, 상용근로자이고, 학력이 높을수록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만, 연령이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에 미치는 영향력은 연령대 상승에 따라 꾸준히 증가하다가 은퇴시기인 60세를 기점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⁵⁷⁾ 종사상 지위 변수는 순자산과는 달리 상용근로자인 경우에 자영업자보다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2019년을 기준으로 한 분위회귀분석 결과,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분위별로 가구주 연령, 거주지역, 가구주 성별, 가구주 종사상 지위, 가구주 학력 등과 같은 변수들이 가구의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에 미치는 영향력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인적특성인 가구주 연령은 전 소득분위에서 연령이 상승할수록 소득이 증가하나, 60세를 기점으로 소득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성별이 미치는 음(-)의 영향은 소득 중위계층에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상대적으로 소득 상위계층이나 하위계층의 여성보다 중위계층에서 여성의 소득 여건이 불리한 상황임을 보여준다. 소득 상위계층으로 갈수록 수도권 거주 여부가 소득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가구주 종사상 지위별로는 상용근로자, 자영업자, 임시일용근로자, 무직 등 순으로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이 큰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소득 90% 분위 자영업자의 경우 다른 분위와는 달리 소득 수준이 상용근로자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또한 종사상 지위가 소득에 미치는 영향력은 소득 분위가 높아질수록 작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가구주 학력의 경우도 모든 소득 분위에서 가구주 학력이 높을수록 소득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대학 졸업 이상인 경우 소득상위계층으로 갈수록 그 영향력이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2011년 및 2015년의 분석결과도 유사한 경향을 보인다.⁵⁸⁾

57) 2015년의 경우는 가구주의 연령대가 30세 이하인 경우와 30~40세 미만인 경우와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음

[표 16] 가구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에 대한 OLS 및 분위회귀분석 결과: 2019년 기준

변수명		OLS	분위(Quantile)		
			10%	50%	90%
가구주 연령	30~40세 미만	0.091*** (0.010)	0.194* (0.083)	0.076* (0.060)	0.102 (0.136)
	40~50세 미만	0.158*** (0.000)	0.255** (0.040)	0.139*** (0.000)	0.166*** (0.007)
	50~60세 미만	0.334*** (0.000)	0.363*** (0.002)	0.330*** (0.000)	0.395*** (0.000)
	60세 이상	0.313*** (0.000)	0.321*** (0.006)	0.276*** (0.000)	0.361*** (0.000)
거주지역		-0.073*** (0.000)	-0.050*** (0.001)	-0.068*** (0.000)	-0.093*** (0.000)
가구주 성별		-0.234*** (0.000)	-0.202*** (0.000)	-0.251*** (0.000)	-0.208*** (0.000)
종사상 지위	임시일용근로자	-0.367*** (0.000)	-0.442*** (0.000)	-0.352*** (0.000)	-0.224*** (0.000)
	자영업자	-0.122*** (0.000)	-0.251*** (0.000)	-0.142*** (0.000)	0.002 (0.912)
	무직 등	-0.607*** (0.000)	-0.734*** (0.000)	-0.634*** (0.000)	-0.401*** (0.000)
가구주 학력	중학교 졸업	0.214*** (0.000)	0.135*** (0.000)	0.244*** (0.000)	0.253*** (0.000)
	고등학교 졸업	0.362*** (0.000)	0.199*** (0.000)	0.417*** (0.000)	0.408*** (0.000)
	대학 졸업 이상	0.598*** (0.000)	0.357*** (0.000)	0.649*** (0.000)	0.693*** (0.000)
R ²		0.326	0.176	0.216	0.153

- 주: 1. 기준범주는 30세 미만, 수도권, 남성, 초등학교 졸업, 상용근로자
 2. ***는 1% 수준, **는 5% 수준, *는 10% 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
 3. 가구의 순자산은 균등화지수를 적용하지 않고, 가구의 처분가능소득은 OECD의 균등화지수를 적용

4. 소결

가계금융복지조사 상 2011년, 2015년, 2019년의 자산 및 소득변수의 불평등도를 커널밀도추정 및 팬 퍼레이드, 로렌즈곡선을 이용해 분석한 결과, 자산이 소득에 비해 상위계층 집중도가 더 심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커널밀도함수 그래프를 통해 순자산과 처분가능소득의 분포를 비교한 결과, 순자산에 비해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의 꼬리가 짧고, 최빈값 부근의 밀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즉, 순자산에 비해 처분가능소득이 보다 균등하게 분포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순자산의 팬 퍼레이드가 처분가능소득에 비해 오른쪽으로 갈수록 급격히 증가하는 모양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자산이 소득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불평등하게 분포되어 있기 때문이다. 로렌즈곡선을 그려본 결과, 2019년의 순자산은 2011년 대비로는 불평등이 개선되었으나, 2015년에 비해서는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고,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은 2011년에서 2015년, 2019년으로 가면서 점차 분배가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기준 자산 및 소득 변수 간 선형관계의 강도를 Spearman 순위상관계수를 통해 분석한 결과, 저소득층과 고소득층 모두 자산과 부동산, 자산과 거주주택의 상관관계가 자산과 금융자산보다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금융자산이 많은 경우보다 부동산 또는 거주주택 자산이 많을수록 가계의 자산이 클 확률이 높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저소득층(소득 1분위)의 경우 부동산과 거주주택 간 상관관계가 고소득층(소득 5분위)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저소득층이 보유한 부동산은 대부분이 거주주택이고, 고소득층은 거주주택 이외에 다른 부동산 자산을 보유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부채와 부동산과의 상관계수는 1분위보다 5분위가 더 높게 나타나고 있어, 고소득층이 부동산 자산형성에 부채를 더 많이 활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OLS 추정 결과, 순자산은 가구주 연령이 높을수록, 수도권에 거주하고, 남성이고, 학력이 높을수록 자산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의 경우도 순자산과 유사한 방향성을 나타내고 있다. 다만 순자산의 경우는 60대에 순자산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난 반면, 처분가능소득은 50대를 정점으로 60대에는 50대보다 소득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종사상 지위별로 순자산과는 달리 상용근로자가 자영업자보다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다. 임금근로자보다 자영업자가 자산이 더 많을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이는 임금근로자는 생업을 위한 기타 자산이 필요하지 않으나, 자영업자의 경우는 영업장, 기계장치 등 영업을 위한 기타 자산이 필요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순자산 및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에 대한 분위회귀분석 결과, 자산 및 소득 분위별로 가구주 연령, 거주지역, 가구주 성별, 가구주 종사상 지위, 가구주 학력 등과 같은 변수들이 가구의 순자산 및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에 미치는 영향력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자산 상위계층으로 갈수록 수도권 거주여부가 자산 증가에 미치는 영향은 증가하나, 성별이 미치는 영향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임시일용근로자, 무직 등의 종사상 지위와 학력변수도 자산 상위계층으로 갈수록 영향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상위계층으로 갈수록 수도권 거주 여부가 처분가능소득 증가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고, 학력이 미치는 영향력도 점차 증가하였다. 이는 수도권에 고학력자를 고용해서, 고임금을 지급하는 대기업, 금융기업 등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성별이 미치는 음(-)의 영향은 소득 중위계층에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상대적으로 소득 상위계층이나 하위계층의 여성보다 중위계층에서 여성의 소득 여건이 불리한 상황임을 보여준다.

IV. 가계 자산 및 소득 분포의 국제비교⁵⁹⁾

4장에서는 OECD에서 발표하는 WDD(Wealth Distribution Dataset)자료를 이용하여 OECD 국가들 간의 가계 자산 및 소득 분포를 비교·분석한다. WDD자료는 OECD가 권고한 기준과 범위에 해당하는 자료를 각국이 원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하여 제공한 자료로 구성되기 때문에 국가 간 비교가 가능하다.⁶⁰⁾ 1~3절에서는 OECD에서 발표한 가장 최신 WDD자료⁶¹⁾를 기초로 OECD 국가 간 가계 자산 및 소득 분포를 분석하였고, 4절에서는 2010년, 2014년 및 2017년⁶²⁾을 중심으로 가계 자산 및 소득 분포의 변화 추이를 분석하였다. 다만, EU 국가를 제외한 국가들의 각 연도별 자료가 연속성과 일관성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4절의 추이 분석에서는 분석대상 국가 수가 감소하였다. 미국이나 호주, 캐나다 등 개별 국가의 자료를 이용할 수도 있으나, OECD에 보고된 자료와 차이가 있고 동일한 기준의 자료라고 판단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1. OECD 국가의 가계 자산⁶³⁾분포

가. 가계 자산의 중위수대비 평균값의 비율

가계 자산 중위수대비 평균값의 비율은 OECD 국가 평균 2.7 정도 수준으로, 가계

59) 가계의 자산 및 소득 자료는 각 국가의 조사자료를 바탕으로 각 국가 화폐단위로 작성되었음. 따라서 절대적인 소득수준의 비교는 환율의 영향을 받게 되어 비교시점과 기준통화에 따라 불안정한 결과를 갖게 되므로 절대적인 수준을 비교하는 것이 아닌 소득분포현황을 나타내는 비율과 지수를 제시하였음

60) 다만, OECD에서 발표하는 자료는 각 국의 경제·사회 환경의 차이점을 반영하여 분석된 결과가 아니기 때문에 자료의 수량적 수준만을 가지고 국가별 비교하여 해석하는 것은 주의할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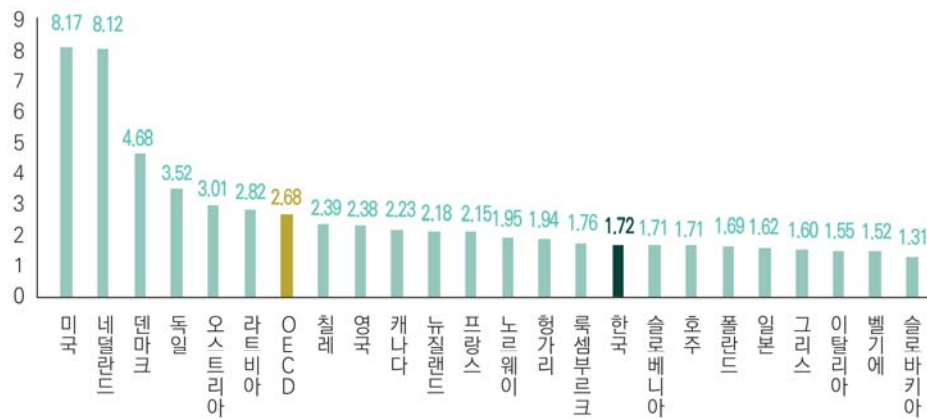
61) 국가별로 최신 자료가 2018년부터 2016년까지 상이함

62) 2010년, 2014년 및 2017년을 기준으로 하되 국가별로 ±1년의 차이가 있음.

63) 일반적으로 개인이 아닌 가계의 소득자료는 균등화하여 국가별 비교를 하지만, 가계의 자산은 '자산이 가지는 부의 효과는 가계 구성원의 규모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다(consistency for splitting or merging)'는 전제를 바탕으로 함. 예를 들면 10억원 가치의 부동산을 소유한 가구가 2인으로 구성된 경우와 4인으로 구성된 경우를 다르게 보지 않고 가구의 자산을 10억원으로 동일하게 본다는 것으로, 소득과 같이 가구원 수에 따라 균등화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음. 이는 OECD의 WDD 등 자산관련 국제연구기관의 자료에도 적용되고 있음

소득의 중위수대비 평균값의 비율 1.17보다 높다. 미국과 네덜란드의 경우는 중위수 대비 평균값이 8.17배와 8.12배 이상 높은 반면, 벨기에와 이탈리아의 중위수대비 평균값의 비율은 1.52와 1.55 수준이다. 평균값과 중위수 비율이 클수록 가계 자산이 매우 큰 차이를 두고 분포되어 있다는 의미이므로, 중위수대비 평균값이 약 8배 이상 큰 차이를 보이는 미국과 네덜란드의 경우 상위계층의 집중도가 매우 심할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한국의 경우 1.72 수준으로 OECD 국가 평균보다 평균값과 중위수 간의 차이가 작은 것으로 나타난다.

[그림 20] 가계 자산의 중위수대비 평균값의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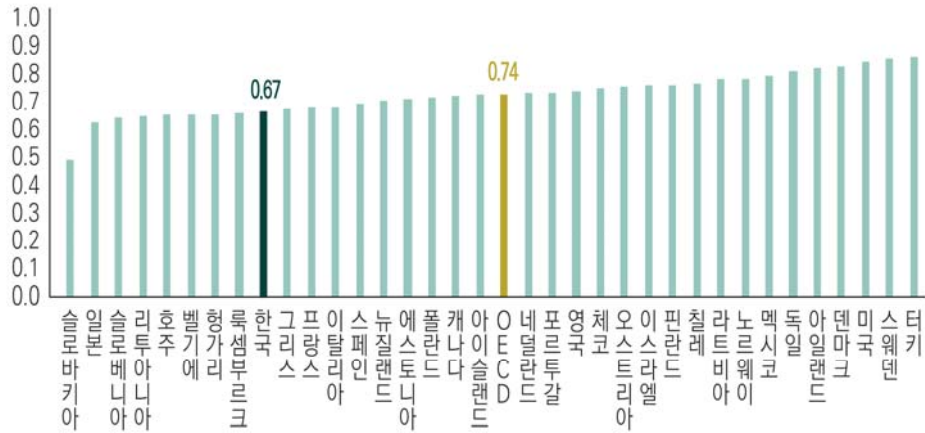
주: 그림에서 OECD는 가용한 자료가 있는 OECD 국가들의 평균을 의미

자료: OECD WDD(Wealth Distribution Database) 및 각 국가의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나. 지니계수와 팔마비율

OECD 국가들의 가계 자산 지니계수는 평균값이 0.74 수준으로 나타나 불평등도가 매우 높으며, 슬로바키아(0.49)를 제외한 35개의 국가에서 가계 자산의 지니계수가 0.6을 상회한 0.63~0.87의 수준을 보인다. 가계 소득의 지니계수에서 낮은 수준을 보였던 북유럽국가들도 가계 자산 지니계수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 한국의 가계 자산 지니계수는 0.67로서 OECD 국가들 중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가계 자산 불평등도를 나타낸다.

[그림 21] 가계 자산의 지니계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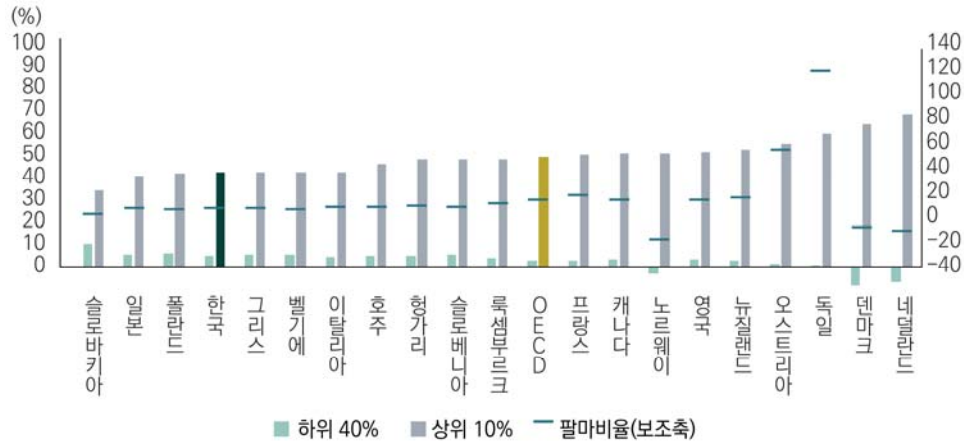
주: 그림에서 OECD는 가용한 자료가 있는 OECD 국가들의 평균을 의미

자료: Global Wealth Databook 2018, Credit Suisse

가계 자산의 분위별 점유율은 국가 간 차이가 크기 때문에 상위 10%의 비중과 하위 40% 비중의 상대적 비율을 나타내는 팔마비율의 격차도 크다. 팔마비율이 119.52로 높게 나타나는 독일은, 상위 10%의 가계 자산 점유율은 59.8%로 OECD 평균 수준인 49.26%를 상회하는 반면 하위 40%의 가계 자산 점유비중은 0.5%밖에 되지 않아 하위계층의 가계 자산 빈곤도는 높고 상위계층에 대한 가계 자산 집중현상이 심한 것으로 보인다. 노르웨이의 경우 가계 자산의 지니계수는 상대적으로 높은데, 팔마비율은 음(-)의 값을 나타낸다. 팔마비율이 음(-)의 값을 갖는 경우는 하위소득층에서 가계 자산을 상회하는 부채를 보유하고 있음을 의미하는데, 따라서 자산 격차가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⁶⁴⁾ 한국의 가계 자산 팔마비율은 8.48로 나타나 OECD 국가들 중에서는 상대적으로 자산 격차가 낮은 편에 속하는 것을 알 수 있다.

64) OECD WDD의 Debt to Asset 자료를 보면, 노르웨이 가계 중 자산 대비 부채비율이 75%를 상회하는 가구의 비중이 29.5%로 높게 나타남

[그림 22] 가계 자산의 상위 10% 및 하위 40%의 자산비중과 팔마비율



주: OECD에서 집계하는 wealth of household의 정의는 부채를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자산 대비 부채가 상회하는 경우 음(-)의 자산을 보유하게 됨. 이에 따라 일부국가에서 하위 40%의 자산비중과 팔마비율 또한 음(-)의 값을 갖게 됨

자료: OECD WDD(Wealth Distribution Database) 및 각 국가의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팔마비율(Palma ratio)

- 팔마비율은 상위 10%의 점유율과 하위 40%의 점유율의 비율로 정의되는데, 소득 분포의 불평등정도를 가늠하는 지수 중 하나로 개발되어, OECD와 UN 등의 국제경제 분석에서 소득 10분위 비중 및 빈곤율 분석과 함께 제시되고 있음
 - 팔마비율이 소득 분포의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지수로 개발된 것은, 불평등 문제가 주로 소득 상위 10%와 하위 40%간의 소득분배에서 발생하며, 상위 11~60%에 해당하는 중간층의 소득 분포의 변화는 대체적으로 다기간에 걸쳐 안정적으로 유지된다는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하고 있음
 - 팔마비율은 불평등도만이 아니라 상위에의 집중도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지니계수의 변화로는 알 수 없는 현상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한편 프랑스와 룩셈부르크의 가계 자산 지니계수는 각각 0.69와 0.66으로 비슷한 수준이지만 프랑스의 가계 자산 팔마비율은 18.74로 룩셈부르크 12.48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다. 이는 프랑스와 룩셈부르크의 상위 10%의 가계 자산점유율은 비슷한 수준이나 프랑스가 룩셈부르크에 비하여 하위 40%의 자산 보유비중이 낮은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네덜란드는 가계 자산의 중위수 대비 평균값의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인데, 미국은 지니계수와 팔마비율 모두 높게 나온 반면 네덜란드는 지니계수가 OECD 평균 수준이며, 팔마비율은 음(-)의 값을 가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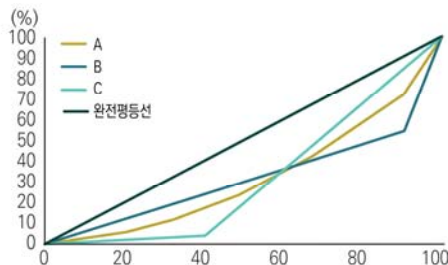
가계 자산의 지니계수가 높은 국가는 팔마비율 또한 높은 것이 일반적이지만, 일부 국가의 경우 상대적으로 지니계수는 높지만 팔마비율이 낮거나, 지니계수는 낮는데 팔마비율이 높은 현상을 보인다. 이는 가계 자산의 격차를 평가하는데 있어 지니계수와 팔마비율을 동시에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반면, 프랑스, 뉴질랜드 등은 지니계수의 상대적인 수준은 낮으나 비슷한 수준의 가계 자산 지니계수를 가진 한국이나 그리스, 이탈리아 등의 국가들과 비교할 때 팔마비율이 높다. 프랑스와 뉴질랜드, 한국이나 그리스, 이탈리아 등의 국가에서 하위계층의 가계 자산 점유율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나, 프랑스와 뉴질랜드의 상위계층 가계 자산 점유율이 높은 것에 기인한다. 상위 10% 계층이 보유한 자산의 절대적인 비중이 한국이나 그리스 등의 국가보다 프랑스와 뉴질랜드에서 더 높다는 것을 시사한다.

지니계수와 팔마비율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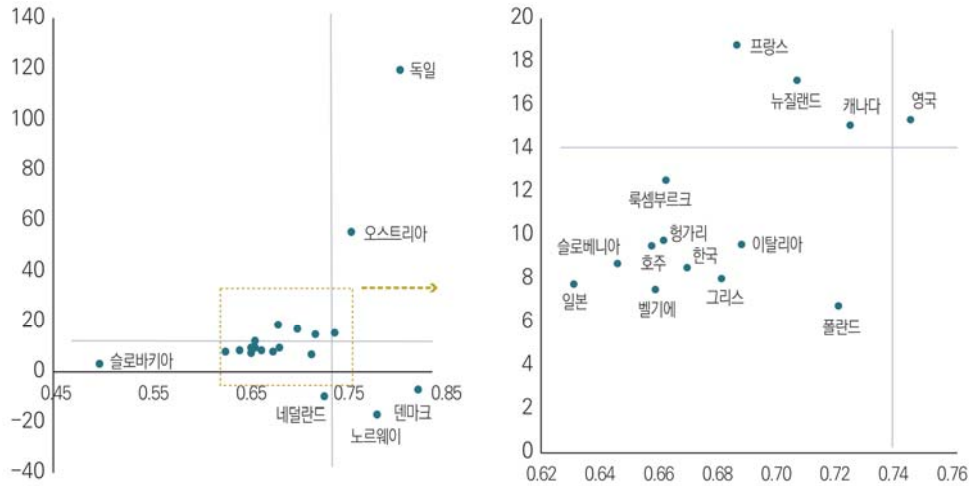
□ 지니계수는 동일한 3개의 상황에서 팔마비율은 다르게 나타남

- 소득 분포의 로렌즈곡선이 A에서 B로 변화하였다면, 중간계층의 비중은 동일한데 하위계층의 소득은 높아지고 상위그룹의 소득은 낮아져서 사회적으로 불평등이 개선된 상황임
- 반면 A에서 C로 변하는 경우는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되었으나 지니계수는 동일한 상황이므로, 이때 팔마비율의 변화로 분포상의 변화를 관측할 수 있음
- 예를 들어, 중간분위에서의 소득수준은 낮아지고 상위분위의 소득수준이 올라간 경우 불평등도가 개선된 것으로 평가할 수 없음에도 지니계수가 낮아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지만, 이 경우 팔마비율이 상승하므로 상위그룹에 소득집중이 심화된 문제점을 제기할 수 있음



	A	B	C
지니계수	0.360	0.360	0.360
팔마비율	1.647	1.917	4.000
하위 40% 비중	17%	24%	4%

[그림 23] 가계 자산의 지니계수와 팔마비율



주: 가로축은 가계 자산의 지니계수이고 세로축은 가계 자산의 팔마비율을 사용하였으며 보조선은 OECD 평균을 나타냄

자료: OECD WDD(Wealth Distribution Database) 및 각 국가의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다. 분위별 자산점유율

가계 자산의 보유 순위에 따른 점유율을 비교하면, OECD 국가들의 상위1% 자산 점유율은 평균 18.44%수준이며 상위 10%가 전체 가계 자산의 50%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반면, 하위 60%의 가계 자산점유율은 평균 12.06%에 불과하다. OECD 국가들의 상위 10%의 가계 자산 점유율은 평균 51.56%로, 슬로바키아를 제외하고는 모두 40%이상으로 나타난다. 미국의 경우 상위 1%와 5%에 대한 자산집중도가 각각 42.48%, 68.05%이고, 상위 10%에 자산의 79.47%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나 조사된 국가들 중 상위집단 집중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한국의 경우, 상위 10%의 가계 자산점유율이 42.40%인 반면 하위 60%의 점유율은 16.20%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상위계층의 자산집중도는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하위 60% 집단의 가계 자산 점유율은 높게 나타난 반면 상위집중도는 낮은 벨기에와 일본 등은 가계 자산의 평균값과 중간값의 비율이 낮고 지니계수도 작게 나타나, 자산 분포의 불평등도가 낮은 국가로 평가할 수 있다. 네덜란드와 덴마크의 경우 하위 60%의 가계 자산점유율이 음(-)의 값을 갖는데, 평균적으로 가구의 보유 자산에 비해 많은 부채를 가지고 있음을 나타낸다.

[표 17] OECD 각국의 분위별 가계 자산 점유율

(단위: %)

	상위 1%		상위 10%		하위 60%	
(1)	미국	42.48	미국	79.47	슬로바키아	25.89
(2)	네덜란드	27.83	네덜란드	68.35	벨기에	18.99
(3)	오스트리아	25.53	덴마크	63.98	폴란드	18.26
(4)	독일	23.66	라트비아	63.38	그리스	17.93
(5)	덴마크	23.62	독일	59.76	일본	17.75
(6)	슬로베니아	23.03	칠레	57.71	이탈리아	17.32
(7)	라트비아	21.39	오스트리아	55.59	슬로베니아	17.29
(8)	노르웨이	20.13	뉴질랜드	52.94	호주	16.54
(9)	영국	19.92	영국	51.99	한국	16.20
(10)	룩셈부르크	18.81	OECD	51.56	헝가리	15.45
(11)	프랑스	18.65	노르웨이	51.45	룩셈부르크	15.28
(12)	OECD	18.44	캐나다	51.08	캐나다	12.44
(13)	칠레	17.40	프랑스	50.59	뉴질랜드	12.32
(14)	헝가리	17.23	룩셈부르크	48.67	프랑스	12.11
(15)	캐나다	16.72	슬로베니아	48.62	OECD	12.06
(16)	호주	15.00	헝가리	48.48	영국	11.81
(17)	벨기에	12.06	호주	46.47	칠레	8.49
(18)	폴란드	11.73	이탈리아	42.78	오스트리아	8.00
(19)	이탈리아	11.69	벨기에	42.50	노르웨이	7.31
(20)	일본	10.77	그리스	42.42	라트비아	7.11
(21)	한국	9.70	한국	42.40	독일	6.46
(22)	슬로바키아	9.32	폴란드	41.84	미국	2.40
(23)	그리스	9.16	일본	41.02	덴마크	-3.85
(24)	뉴질랜드	-	슬로바키아	34.33	네덜란드	-3.99

주: 1. 괄호()안은 분석대상 OECD 국가 중 순위

2. 한국의 경우 가계금융복지조사(2019)에서 발표된 2017년 기준자료를 바탕으로 산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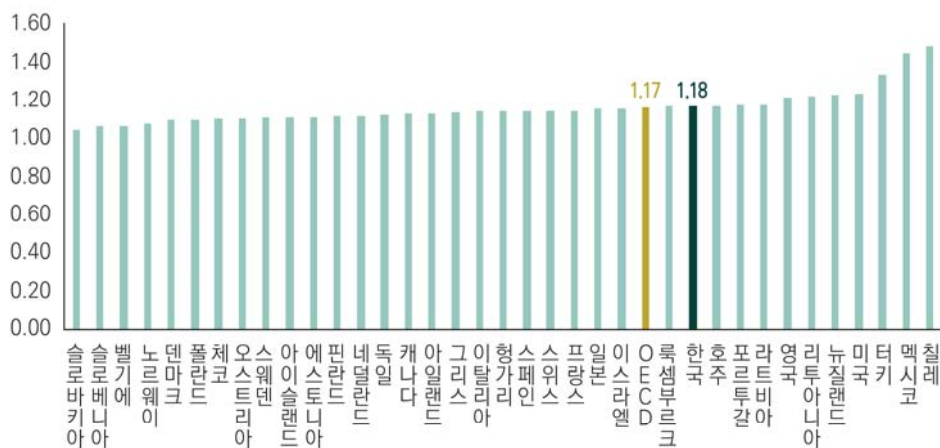
자료: OECD WDD(Wealth Distribution Database) 및 각 국가의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2. OECD 국가의 가계 소득 분포

가. 가계 소득의 중위수대비 평균값의 비율

OECD 국가들의 가계 소득 자료에서 중위수대비 평균값의 비율이 1.05~1.49로 나타났다으며 평균적으로 1.17배정도의 수준이다. 일반적으로 평균값은 중위수보다 극단치에 영향을 받는 변수이므로, 중위수대비 평균값의 비율이 1보다 크다는 것은 고소득자에 의해 평균소득 수준이 상승하는 효과가 있다는 의미로 봐야 할 것이다.⁶⁵⁾ 중위수에 비하여 평균값이 1.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국가는 영국, 뉴질랜드, 미국 등 7개국이고, 칠레의 경우 평균값이 중위수의 1.49배의 수준으로 평균값과 중위수가 가장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북유럽국가를 비롯한 대부분의 유럽국가에서는 평균값과 중위수의 차이가 OECD 평균보다 작게 나타났으며 한국의 경우 OECD 평균과 비슷한 1.18이다.

[그림 24] OECD 국가별 가계 소득의 중위수대비 평균값 비율



주: 그림에서 OECD는 가용자료가 있는 36개국의 평균을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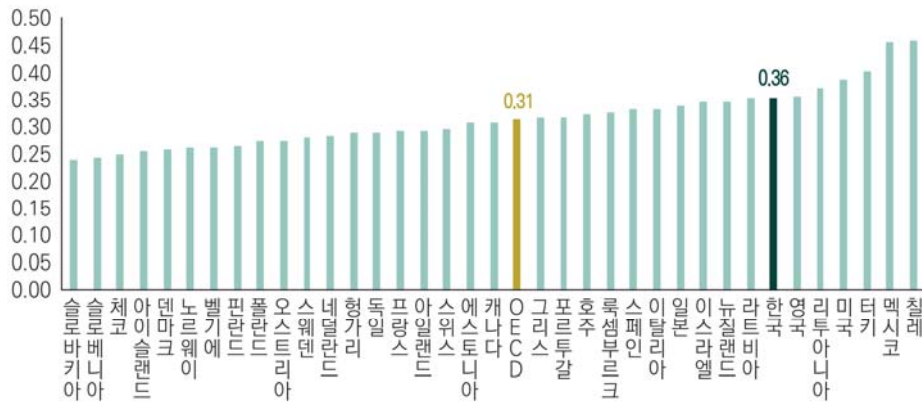
자료: OECD IDD(Income Distribution Database)

65) 가계 소득의 평균값에 비하여 중위수의 값이 작으면, 상위계층의 소득이 전체 가구의 평균을 높이는 효과를 갖고, 평균이 중위수보다 낮으면 하위소득계층 가구의 비중이 높다는 의미

나. 지니계수와 팔마비율

OECD 국가들의 가계 소득 지니계수는 0.24~0.46 수준으로 평균은 0.31로 나타났는데, 스페인과 이탈리아 등을 제외한 유럽지역 국가들은 지니계수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다. 터키, 멕시코, 칠레의 경우 0.4를 상회하면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한국은 0.36으로 조사된 OECD 36개국 중 30위 수준(낮을수록 높은 순위)으로서 평균보다 높게 나타나, 지니계수로 평가한 가계 소득의 격차가 상대적으로 높다고 평가된다.

[그림 25] OECD 국가별 가계 소득의 지니계수



주: 그림에서 OECD는 가용자료가 있는 36개국의 평균을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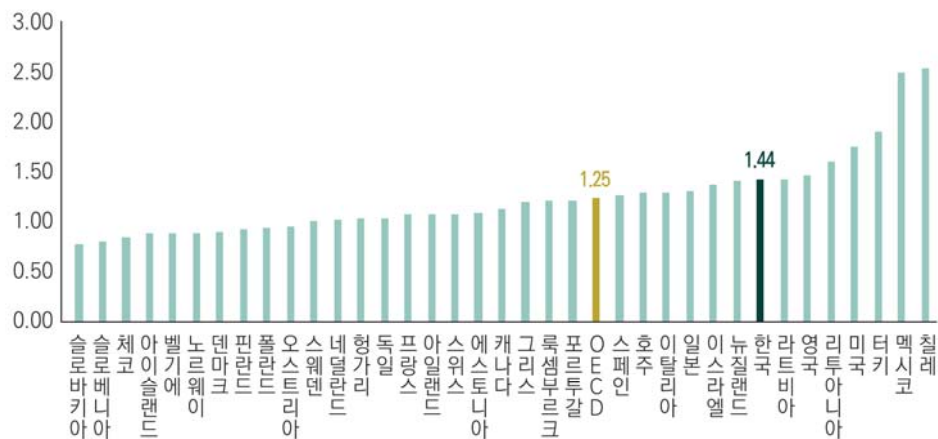
자료: OECD IDD(Income Distribution Database)

팔마비율은 가계 소득 전체 중 고소득층이 차지하는 소득액의 비중을 이용하여 그 집중도를 보여주는데, OECD 국가들의 가계 소득 지니계수의 순위와 팔마비율의 순위에는 차이가 있다. 또한 지니계수와 달리 팔마비율의 국가 간 차이가 다소 큰 편이다. OECD 36개 국가들의 팔마비율 평균은 1.25이며⁶⁶⁾, 팔마비율이 가장 낮은 국가는 슬로바키아(0.78)이고 가장 높은 국가는 칠레(2.55)이다. 그 외 멕시코(2.51), 터키(1.91), 미국(1.76)이 높은 수준을 보인다. 호주와 룩셈부르크는 가계

66) 후술하고 있는 자료에서 OECD 평균 가계 소득 상위 10%의 소득점유율이 약 25%인 것을 고려한다면, 하위 40%의 전체소득 점유율은 약 20%에 불과함. 이는 중위수와 평균값이 큰 차이가 없는 상황에서 상위 소득계층에 소득액 집중현상이 심하다는 것을 보여줌.

소득의 지니계수가 0.33으로 동일한 수준이나 팔마비율은 각각 1.30과 1.22로 룩셈부르크가 약간 낮는데, 이 경우 가계 소득이 고소득층에 집중된 정도가 룩셈부르크에 비하여 호주에서 상대적으로 더 심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한국의 경우는 1.44로서 고소득가구에의 집중현상이 다소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6] OECD 국가별 가계 소득의 팔마비율



주: 그림에서 OECD는 가용자료가 있는 36개국의 평균을 의미
 자료: OECD IDD(Income Distribution Database)

다. 분위별 소득점유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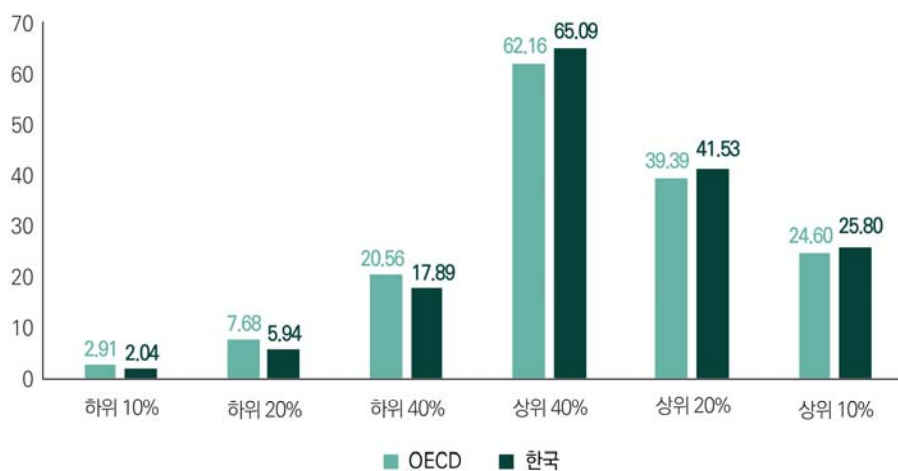
OECD 국가들의 분위별 소득점유율을 구해보면, 평균적으로 하위 40%의 가구가 전체 소득의 20.56%, 상위 40%의 가구가 62.16%를 차지하고 있다.

하위 10%, 20%, 40%의 소득 비중이 OECD 평균을 상회하는 국가들은 대부분 북유럽국가 및 동유럽국가이며, 이들 국가들의 가계 소득 상위 10%, 20%, 40%의 소득 비중이 OECD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상위 계층 소득 집중도가 낮은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OECD 국가 중 상위 분위의 가계 소득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는 칠레, 멕시코, 터키이며, 그 다음으로 미국이 상위 분위 가계 소득점유율이 가장 높다. 미국의 상위 10%, 20%, 40%의 가계 소득점유율은 각각 28.54%, 44.48%, 67.59%이다. 국가 소득 수준이 높은 국가들 중에서 벨기에의

경우 상대적으로 상위 분위 가계 소득점유율이 낮게 나타나는데, 상위 10%의 소득 점유율은 20.60%, 상위 20%의 점유율은 34.92%로서 OECD 국가들 중에서는 슬로바키아와 슬로베니아에 이어 가장 낮은 수준이다. 반면 하위 분위의 가계 소득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는 체코이다. 체코의 하위 40%의 가계 소득점유율은 24.37%, 하위 20%의 점유율은 9.95%로 나타난다.

한국과 OECD 국가들의 분위별 소득점유율을 비교하면 한국의 경우 상대적으로 하위 분위 점유율이 낮고, 상위 분위 점유율은 높아, 상대적으로 상위 계층의 소득 집중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한국의 하위 40%의 가계 소득점유율은 17.89%, 하위 20%의 점유율은 5.94%로 나타나며, 상위 40%의 점유율은 65.09%, 상위 20%의 점유율은 41.53%이다.

[그림 27] OECD 평균 및 한국의 가계 소득 분위별 비중 비교



자료: OECD IDD(Income Distribution Database)

[표 18] OECD 국가별 가계 소득의 분위별 비중

	하위			상위		
	10%	20%	40%	40%	20%	10%
그리스	2.57	7.27	20.23	62.27	39.18	24.34
네덜란드	3.33	8.67	22.40	59.76	37.12	22.98
노르웨이	3.31	8.91	23.64	57.88	35.19	21.32
뉴질랜드	2.90	7.32	19.2	64.51	42.23	27.49
덴마크	3.89	9.57	23.75	58.11	35.48	21.70
독일	3.28	8.43	22.18	60.09	37.54	23.18
라트비아	2.23	6.21	17.85	65.27	41.59	25.76
룩셈부르크	2.48	7.11	19.71	63.18	39.76	24.10
리투아니아	2.05	5.85	17.12	66.44	43.36	27.59
멕시코	1.76	5.01	14.48	71.73	51.43	36.38
미국	1.63	5.30	16.23	67.59	44.48	28.54
벨기에	3.63	8.87	22.87	58.42	34.92	20.60
스웨덴	3.56	8.72	22.58	59.44	36.85	22.96
스위스	3.32	8.48	21.91	60.62	38.11	23.82
스페인	2.29	6.66	19.03	63.58	39.85	24.22
슬로바키아	3.16	9.09	24.32	56.59	33.18	19.06
슬로베니아	3.85	9.52	24.35	56.90	33.83	19.73
아이슬랜드	3.99	9.76	24.16	57.86	35.46	21.59
아일랜드	3.52	8.60	21.84	60.68	37.99	23.63
에스토니아	2.83	7.24	19.78	62.27	37.86	21.82
영국	2.44	6.90	18.90	64.75	42.66	28.02
오스트리아	3.28	8.61	22.67	59.23	36.20	21.67
이스라엘	2.29	6.30	18.34	64.35	40.80	25.39
이탈리아	2.05	6.55	19.25	63.26	40.13	25.09
일본	2.30	6.50	18.92	63.81	40.43	24.99
체코	4.12	9.95	24.37	57.53	34.94	20.68
칠레	1.85	5.06	14.36	72.14	52.16	36.67
캐나다	2.81	7.58	20.61	61.75	38.51	23.56
터키	2.31	6.06	16.56	68.45	46.96	31.58
포르투갈	2.96	7.74	20.54	62.50	40.02	25.05
폴란드	3.28	8.58	22.60	59.25	36.14	21.54
프랑스	3.48	8.74	22.37	60.24	38.18	24.05
핀란드	3.96	9.47	23.56	58.59	36.17	22.23
한국	2.04	5.94	17.89	65.09	41.53	25.80
헝가리	3.17	8.53	22.22	60.24	37.48	23.07
호주	2.72	7.22	19.56	63.40	40.44	25.52
OECD	2.91	7.68	20.56	62.16	39.39	24.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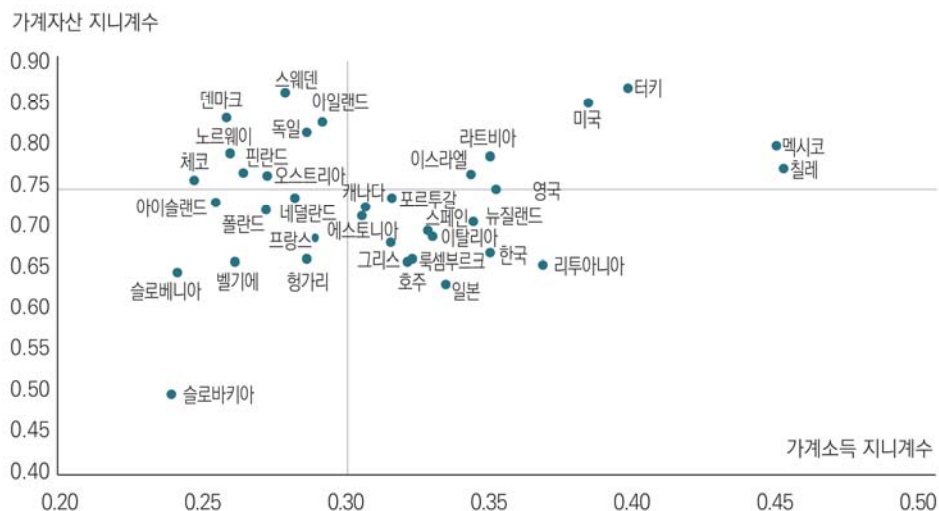
자료: OECD IDD(Income Distribution Database)

3. 가계 자산과 가계 소득의 결합분포 분석

2017년 기준 자료를 비교해 보면 가계 소득의 지니계수는 OECD 평균 0.31이고 가계 자산의 지니계수는 0.74로서 자산의 격차가 훨씬 심각하다. 가계 소득의 지니계수와 가계 자산의 지니계수가 동시에 매우 높은 값을 가지는 국가는 미국과 터키이며, 사회복지수준이 높은 국가로 평가되는 스웨덴과 덴마크, 노르웨이 등의 북유럽국가는 소득의 지니계수는 낮으나 가계 자산의 지니계수는 가장 높다.

반면 일본과 한국, 뉴질랜드와 다수의 서유럽국가들은 가계 소득의 지니계수는 상대적으로 높은 값을 갖지만 가계 자산의 지니계수는 낮은 수준을 보인다. 가계 소득과 가계 자산 모두 상대적으로 지니계수가 낮은 국가는 슬로바키아를 비롯한 다수의 동유럽국가들과 벨기에, 프랑스, 네덜란드로 나타난다.

[그림 28] OECD 국가별 가계 자산과 가계 소득 지니계수의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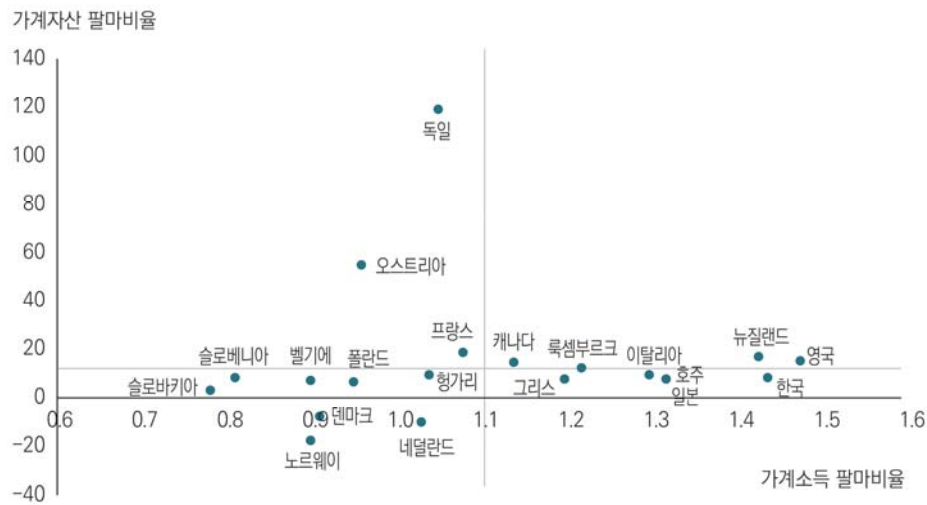


자료: OECD 및 각 국가의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일부 계층에의 쏠림정도를 볼 수 있는 팔마비율을 이용하여 OECD 국가 간 비교를 해보면 가계 자산의 팔마비율은 거의 비슷한 수준이지만 가계 소득의 팔마비율은 국가 간 편차가 나타났다. 국가별 상대적인 비교를 해보면, 뉴질랜드와 영국, 한국 등은 가계 소득의 팔마비율이 OECD 다른 국가들에 비하여 높고, 독일이

나 오스트리아는 가계 자산의 팔마비율이 타 국가에 비하여 높게 나타난다. 노르웨이와 덴마크, 네덜란드의 경우 팔마비율이 음(-)의 값을 가지는데, 하위집단의 자산 대비 부채⁶⁷⁾비율이 높아 가계 자산이 음(-)의 값을 갖기 때문으로, 자산 격차가 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림 29] OECD 국가별 가계 자산과 가계 소득 팔마비율의 비교



자료: OECD 및 각 국가의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OECD 국가들의 분위별 분포를 비교해보면 가계 소득보다 가계 자산에서의 격차가 더 심한 것으로 나타난다. OECD 국가의 가계 소득 중위수대비 평균값의 비율이 가계 소득에서는 최소 1.05, 최대 1.49 나타나며 평균 1.17의 값을 갖는 데 반하여 가계 자산의 중위수대비 평균값은 국가별로 최소 1.30에서 최대 8.20까지 큰 차이를 보인다. 중위수대비 평균값의 비율이 클수록 상위계층으로의 쏠림현상이 크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가계 소득에 비하여 가계 자산의 중위수대비 평균값의 비율이 더 크고, 국가 간 편차도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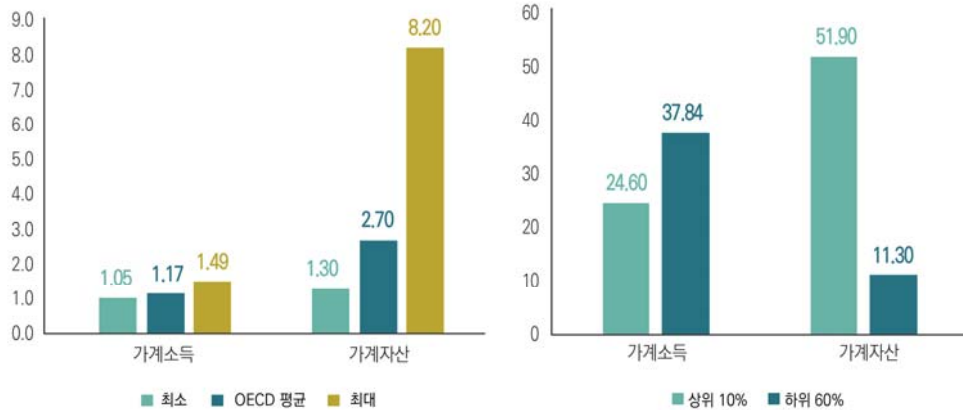
또한 가계 소득과 가계 자산의 분위별 구성을 보면, 가계 소득의 상위 10% 계층의 소득점유율은 24.60%인 반면 가계 자산의 상위 10%의 자산점유율은 51.56%에 이른다. 하위 60% 계층의 점유율은 가계 소득에서 37.84%, 가계 자산에서 12.06%로 나타나 상위 계층으로의 집중현상이 가계 자산에서 훨씬 심한 것으로 해석된다.

67) DTA(Debt to Asset)

[그림 30] 가계 자산 및 소득의 상·하위계층 간 격차

중위수대비 평균값 비율

상·하위 분위별 소득 및 자산 점유율



자료: OECD 및 각 국가의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4. 가계 자산 및 가계 소득 분포 변화 추이

이 절에서는 2010년, 2014년 및 2017년의 자료로 가계 자산 및 소득 분포의 변화 추이를 분석하였다. 다만, OECD 국가들 중 연도별 자료가 연속성과 일관성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였기 때문에 분석대상 국가 수가 감소하였다.⁶⁸⁾

가. 가계의 자산 격차 추이

(1) 지니계수

2010년, 2014년 및 2017년의 자료가 가능한 국가들의 가계 자산 지니계수 추이를 보면, EU전체 평균은 2010년 0.682에서 2014년 0.694, 2017년 0.695 수준으로 점차 높아지고 있다. 다만, EU전체 평균과 비교하여 가계 자산 지니계수가 높은 수준을 보이는 국가는 네덜란드와 덴마크, 오스트리아이다. 슬로베니아의 경우 2010년에는 가계 자산 지니계수가 0.534로 나타났으나 2014년에는 0.628로 크게 상승하였다가 2017년 0.594수준으로 다소 완화되었고, 포르투갈의 경우도 2010년 0.660에 비하여

68) 미국이나 호주, 캐나다 등 개별 국가의 자료를 이용할 수도 있으나, OECD에 보고된 자료와 차이가 있고 동일한 기준의 자료라고 판단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 분석에서 제외되었음

2014년 0.684로 다소 불균형이 심화되었다가 2017년 0.567로 눈에 띄게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슬로바키아의 경우 EU 국가들 중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가계 자산 격차를 보이고 있기는 하나, 2010년, 2014년, 2017년 연속적으로 지니계수가 상승하여 격차가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와는 반대로 오스트리아의 가계 자산 지니계수는 2010년 EU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0.762)이었으나 2014년 0.731, 2017년 0.730으로 소폭이지만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높은 소득 수준을 가진 국가로 평가되는 벨기에와 룩셈부르크는 2010~2014년 사이 각각 0.608, 0.661에서 0.589, 0.646으로 가계 자산 지니계수가 하락하였지만 2017년에는 다시 0.632와 0.652 수준으로 높아졌다. 우리나라의 가계 자산 지니계수는 2010년에는 0.605, 2014년에는 0.579, 2017년에는 0.576 수준으로 EU 국가들 중 가계 자산 격차가 가장 낮은 국가들과 비슷한 수준을 보인다.

스페인, 그리스, 핀란드의 경우 2010~2017년 기간에 가계 자산 지니계수가 상승하여 자산격차가 지속적으로 심화된 것으로 볼 수 있는 반면, 프랑스와 오스트리아의 경우 지니계수로 평가한 가계 자산 격차는 완화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는 같은 기간 가계 자산의 지니계수가 하락하여 격차가 다소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0~2014년 사이의 변화와 2014~2017년 사이의 변화를 동시에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결과를 볼 수 있다. 프랑스, 오스트리아의 경우 2010~2014년 사이와 2014~2017년 사이 가계 자산 격차는 소폭이지만 개선되었다. 한국의 경우, 2010~2014년 사이 가계 자산 격차가 크게 개선된 반면, 2014~2017년 사이에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⁶⁹⁾ 포르투갈과 덴마크, 슬로베니아는 2010~2014년 사이 가계 자산 격차가 심화되었지만, 포르투갈의 경우 2014~2017년 사이 큰 폭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난다. 반면, 네덜란드는 2010~2014년 사이 가계 자산 격차가 다소 완화되었으나, 2014~2017년 사이에는 격차의 정도가 심해졌는데, 유사한 패턴을 보이는 국가는, 룩셈부르크, 이탈리아, 벨기에 등이다. 그리스와 스페인, 핀란드 슬로바키아 등의 국가는 2010~2014년 사이와 2014~2017년 사이 가계 자산 격차가 계속 심화된 것으로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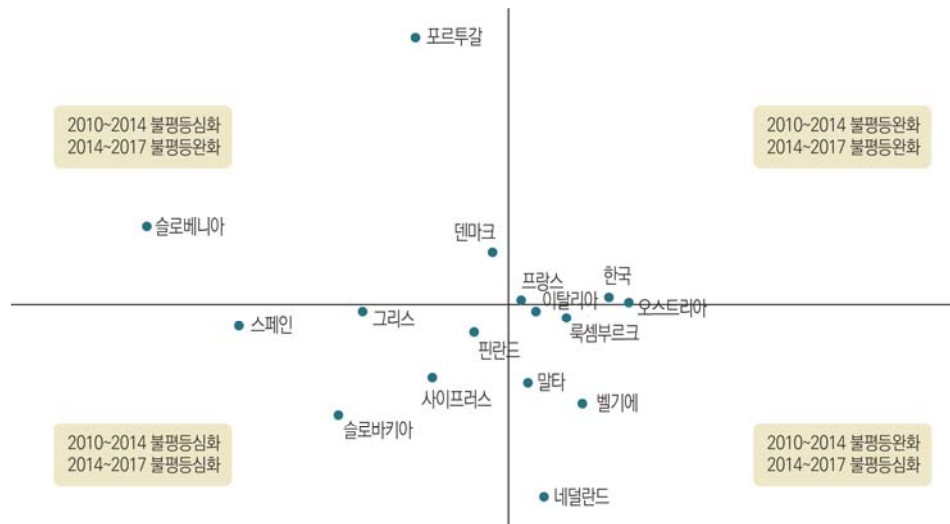
69) 이는 국제비교가 가능한 자산·소득 분포 자료를 구할 수 있는 2010년, 2014년, 2017년 등 3개년 도간의 변화 추이를 분석한 것으로서, 3장에서 2011~2019년 우리나라 가계 자산·소득 분포의 연도별 자료를 이용하여 추이를 분석한 결과와는 다소 차이가 있음

[표 19] 분석대상 OECD 국가별 가계 자산의 지니계수 변화: 순위별

2010		2014		2017	
슬로바키아	0.448	슬로바키아	0.492	슬로바키아	0.540
슬로베니아	0.534	한국	0.579	포르투갈	0.567
그리스	0.561	벨기에	0.589	한국	0.576
스페인	0.599	그리스	0.599	슬로베니아	0.594
한국	0.605	이탈리아	0.603	그리스	0.602
벨기에	0.608	슬로베니아	0.628	이탈리아	0.606
이탈리아	0.610	룩셈부르크	0.646	벨기에	0.632
핀란드	0.641	핀란드	0.650	룩셈부르크	0.652
포르투갈	0.660	스페인	0.669	핀란드	0.662
룩셈부르크	0.661	프랑스	0.676	프랑스	0.674
프랑스	0.679	포르투갈	0.684	스페인	0.678
EU 평균	0.682	EU 평균	0.694	EU 평균	0.695
네덜란드	0.707	네덜란드	0.698	오스트리아	0.730
덴마크	0.758	오스트리아	0.731	덴마크	0.739
오스트리아	0.762	덴마크	0.762	네덜란드	0.782

자료: OECD 및 각 국가의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그림 31] 분석대상 OECD 국가의 가계 자산 격차 변화: 지니계수 기준



주: 사분면에서 가로 및 세로축은 각각 2010년과 2014년, 2014년과 2017년의 가계 자산 지니계수의 차이로서, 양(+)의 값을 가질수록 2010년(2014년)에 비하여 2014년(2017년)의 가계 소득 격차가 완화된 것으로 평가

자료: OECD 및 각 국가의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2) 분위배율

상위 10%기준과 중위수의 배율로 본 p90/p50배율 또한 EU전체 평균과 대부분의 국가에서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수의 국가에서 2010년에 비하여 2014년 p90/p50배율이 하락하고 2014년에 비해 2017년 p90/p50배율이 높아졌다. 포르투갈의 경우 예외적으로 2014년에 비하여 2017년에 p90/p50배율이 낮아졌다. 2010년에 비하여 2017년의 p90/p50배율이 낮아진 국가는 오스트리아와 포르투갈 등이다. 한국의 경우 2010년에 비하여 2014년 p90/p50배율이 크게 하락한 반면, 2014년에 비해 2017년 p90/p50배율은 소폭 상승하였다.⁷⁰⁾

[표 20] 분석대상 OECD 국가별 가계 자산의 p90/p50배율 변화: 순위별

2010		2014		2017	
슬로바키아	2.5	슬로바키아	2.6	슬로바키아	2.9
슬로베니아	3.2	벨기에	3.2	포르투갈	3.2
그리스	3.3	슬로베니아	3.2	슬로베니아	3.2
이탈리아	3.3	이탈리아	3.4	벨기에	3.6
벨기에	3.4	룩셈부르크	3.5	이탈리아	3.6
스페인	3.4	그리스	3.7	그리스	3.7
룩셈부르크	3.5	한국	3.7	룩셈부르크	3.7
포르투갈	3.9	스페인	4.2	한국	3.8
한국	4.1	포르투갈	4.2	핀란드	4.5
핀란드	4.2	핀란드	4.2	스페인	4.6
프랑스	4.4	프랑스	4.7	프랑스	4.7
EU전체	4.7	네덜란드	4.7	EU전체	5.3
네덜란드	5.2	EU전체	4.9	오스트리아	6.3
오스트리아	7.1	오스트리아	6	네덜란드	6.6
덴마크	8.6	덴마크	7.7	덴마크	7.9

자료: OECD 및 각 국가의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70) 이는 국제비교가 가능한 자산·소득 분포 자료를 구할 수 있는 2010년, 2014년, 2017년 등 3개년 도간의 변화 추이를 분석한 것으로서, 3장에서 2011~2019년 우리나라 가계 자산·소득 분포의 연도별 자료를 이용하여 추이를 분석한 결과와는 다소 차이가 있음

앞서 2010~2014년 지니계수가 하락했던 프랑스의 경우 동일한 기간 p90/p50 배율이 상승하였는데, 이는 가계 자산의 불평등도는 낮아졌으나, 상위계층의 가계 자산과 중위수의 절대적인 격차는 확대되었음을 의미한다. 덴마크의 경우 지니계수로 평가한 가계 자산 격차는 2010~2014년 상승하고 2014~2017년에는 하락하였는데, p90/p50배율은 오히려 2010~2014년 하락하고 2014~2017년 상승한 것을 볼 수 있다. 덴마크의 상위 10%가 차지하고 있는 가계 자산의 비중이 2010년 59.2%, 2014년 59.8%, 2017년 55.4%인 것을 볼 때, 최상위계층으로 자산이 쏠리는 정도의 변화가 격차 수준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예상된다. 2010~2014년 덴마크의 가계 자산 불평등도는 중상위계층(50~90%)내 격차가 감소하였으나 최상위계층(10%)으로의 쏠림정도가 심화되었고, 2014~2017년에는 최상위계층의 가계 자산 쏠림정도는 완화되어 불평등이 개선되었으나 중상위계층 간의 격차는 확대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가계의 소득 격차 추이

(1) 지니계수

분석대상 OECD 국가들의 가계 소득 분포를 살펴보면, 지니계수는 0.25~0.35 수준에서 조금씩 변화하고 있다. 2010년, 2014년 및 2017년 3개년 자료에서 가계 소득의 지니계수가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는 국가는 영국과 한국이다. 영국의 경우 0.351, 0.356, 0.357 수준을 보이면서 소폭이지만 계속 상승하였다. 같은 시기 우리나라 가계 소득의 지니계수는 0.419, 0.386, 0.396로서, 2010년과 비교하여 2014년에 소득 격차가 크게 완화되었으나 2014~2017년 소득 격차 변화는 미미하게 나타났다.⁷¹⁾ 동일한 연도별 자료에서 가장 낮은 지니계수를 보이는 것은 슬로베니아로 2010년 0.245에 비하여 2014년에는 0.251로 격차가 커졌으나 2017년에는 0.243으로 다시 낮아졌다. 유럽 내 국가 중 가장 높은 지니계수를 보이는 영국과 가장 낮은 지니계수를 보이는 슬로베니아의 격차는 2010년 비하여 2017년에 더 커졌다. 하지만 2010년과 2017년의 슬로베니아와 한국의 가계 소득 지니계수의 격차는 좁아졌고, 중간수준의 격차를 보이는 국가들의 지니계수 수준도 조금씩 하락한 것을 볼

71) 이는 국제비교가 가능한 자산·소득 분포 자료를 구할 수 있는 2010년, 2014년, 2017년 등 3개년 도간의 변화 추이를 분석한 것으로서, 3장에서 2011~2019년 우리나라 가계 자산·소득 분포의 연도별 자료를 이용하여 추이를 분석한 결과와는 다소 차이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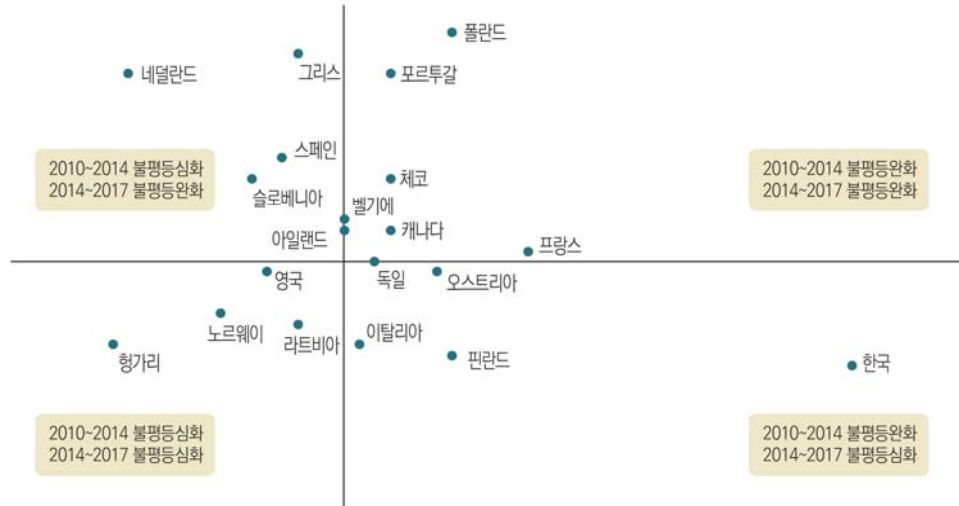
수 있다. 국민경제의 규모와 경제수준이 비교적 높은 국가로 평가되는 벨기에와 오스트리아의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격차를 보이고 있는 점이 눈에 띈다. 2010~2017년 지속적으로 지니계수가 낮아진 국가는 체코, 프랑스, 폴란드, 포르투갈이고, 반대로 지속적인 지니계수 상승을 보이는 국가는 노르웨이와 라트비아, 영국이다. 가계 소득의 격차가 상대적으로 크게 변한 국가는 헝가리로서, 2010년에는 가계 자산 지니계수가 0.266으로 조사 국 중 상대적으로 낮은 격차를 보였으나 이후 지니계수가 상승하여 2017년에는 중간수준의 격차를 보이고 있다.

[표 21] 분석대상 OECD 국가별 가계 소득의 지니계수 변화: 순위별

2010		2014		2017	
슬로베니아	0.245	슬로베니아	0.251	슬로베니아	0.243
노르웨이	0.249	체코	0.257	체코	0.249
체코	0.260	핀란드	0.257	노르웨이	0.262
핀란드	0.264	노르웨이	0.257	벨기에	0.263
헝가리	0.266	벨기에	0.267	핀란드	0.266
벨기에	0.267	오스트리아	0.274	오스트리아	0.275
오스트리아	0.280	헝가리	0.281	폴란드	0.275
네덜란드	0.289	독일	0.289	네덜란드	0.285
독일	0.291	프랑스	0.293	독일	0.289
아일랜드	0.298	폴란드	0.297	헝가리	0.289
폴란드	0.304	아일랜드	0.298	프랑스	0.292
프랑스	0.305	네덜란드	0.303	아일랜드	0.295
캐나다	0.316	캐나다	0.313	캐나다	0.310
이탈리아	0.327	이탈리아	0.326	그리스	0.319
그리스	0.336	포르투갈	0.338	포르투갈	0.320
스페인	0.339	그리스	0.339	스페인	0.333
포르투갈	0.341	스페인	0.343	이탈리아	0.334
라트비아	0.346	라트비아	0.349	라트비아	0.355
영국	0.351	영국	0.356	영국	0.357
한국	0.419	한국	0.386	한국	0.396

자료: OECD 및 각 국가의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그림 32] 분석대상 OECD 국가의 가계 소득 격차 변화: 지니계수 기준



주: 사분면에서 가로 및 세로축은 각각 2010년과 2014년, 2014년과 2017년의 가계 자산 지니계수의 차이로서, 양(+)의 값을 가질수록 2010년(2014년)에 비하여 2014년(2017년)의 가계 소득 격차가 완화된 것으로 평가

자료: OECD 및 각 국가의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2) 팔마비율

지니계수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상위계층이나 하위계층에의 쏠림정도를 알 수 있는 팔마비율은 국가별 격차가 다소 크게 나타나는데 2010~2017년 기간에 국가 간 격차는 점점 확대되었다. 2010년, 2014년 및 2017년 모두 팔마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는 영국이다.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는 국가는 2010년에는 슬로베니아이지만 슬로바키아의 팔마비율이 2010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17년에 가장 낮은 수준 0.78로 나타났다. 반면, 노르웨이의 가계 소득 팔마비율은 2010년에는 슬로베니아 다음으로 낮은 수준인 0.84였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17년에는 0.90수준으로 높아진 것을 볼 수 있다. 조사된 국가 중 2010~2017년 사이 팔마비율의 변화가 가장 큰 국가는 폴란드인데, 2010년 1.12에서 2017년 0.95로 가계 자산의 특정 계층 쏠림정도가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경우, 가계 소득의 팔마비율이 2010년 1.12에서 2014년 1.42로 크게 상승하였으나, 2014~2017년 사이에는 1.44로 소폭 높아지는 데 그쳤다.

폴란드의 지니계수와 팔마비율이 2010~2014년, 2014~2017년 사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소득분위배율인 p_{90}/p_{10} 이 2010년 3.9에서 2017년 3.6으로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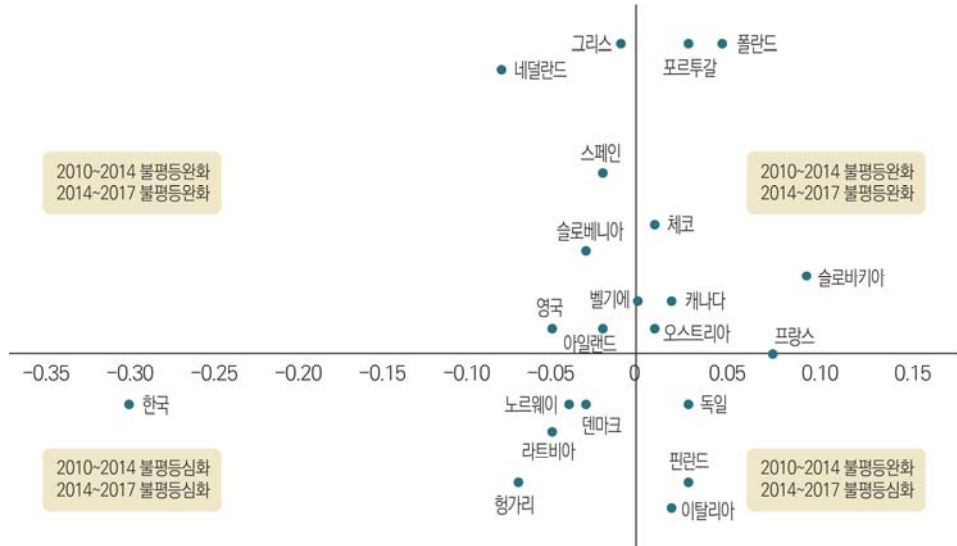
하는 것을 참고로 하면, 상·하위 계층 간 격차가 다소 축소되면서 가계 소득 격차가 개선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반면 독일의 경우, 2014~2017년의 가계 소득의 지니계수는 하락하였으나 동일한 기간의 팔마비율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소득분위배율 p90/p10이 동일한 기간에 3.5에서 3.7로 상승하고 소득분위배율 p90/p50은 1.9에서 1.8로 소폭 하락하였다. 이러한 경우 상위계층의 집중도 상승보다 상위계층과 중간계층의 격차가 줄어든 효과가 각각의 지수의 특징에 따라 다른 방향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표 22] 분석대상 OECD 국가별 가계 소득의 팔마비율 변화: 순위별

2010		2014		2017	
슬로베니아	0.82	슬로바키아	0.81	슬로바키아	0.78
노르웨이	0.84	슬로베니아	0.85	슬로베니아	0.81
덴마크	0.86	노르웨이	0.88	체코	0.85
체코	0.91	덴마크	0.89	벨기에	0.90
슬로바키아	0.91	핀란드	0.89	노르웨이	0.90
벨기에	0.92	체코	0.90	덴마크	0.91
핀란드	0.92	벨기에	0.92	핀란드	0.94
헝가리	0.92	오스트리아	0.97	폴란드	0.95
오스트리아	0.98	헝가리	0.99	오스트리아	0.96
독일	1.06	독일	1.03	네덜란드	1.03
네덜란드	1.06	폴란드	1.07	헝가리	1.04
아일랜드	1.07	프랑스	1.08	독일	1.05
폴란드	1.12	아일랜드	1.09	프랑스	1.08
한국	1.12	네덜란드	1.14	아일랜드	1.08
프랑스	1.16	캐나다	1.16	캐나다	1.14
캐나다	1.18	이탈리아	1.24	그리스	1.20
이탈리아	1.26	그리스	1.32	포르투갈	1.22
그리스	1.31	포르투갈	1.34	스페인	1.27
스페인	1.32	스페인	1.34	이탈리아	1.30
라트비아	1.36	라트비아	1.41	라트비아	1.44
포르투갈	1.37	한국	1.42	한국	1.44
영국	1.44	영국	1.49	영국	1.48

자료: OECD 및 각 국가의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그림 33] 분석대상 OECD 국가의 가계 소득 격차 변화: 팔마비율 기준



주: 사분면에서 가로 및 세로축은 각각 2010년과 2014년, 2014년과 2017년의 가계 자산 지니계수의 차이로서, 양(+)의 값을 가질수록 2010년(2014년)에 비하여 2014년(2017년)의 가계 소득 격차가 완화된 것으로 평가

자료: OECD 및 각 국가의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3) 분위배율

국가 내 분위별 배율을 보면 지니계수나 팔마비율과 달리 국가 간 격차는 줄어들고 있는 점이 눈에 띄는데, 이는 2010년 낮은 수준의 분위배율을 보였던 국가들에서 분위배율이 상승한 결과로 볼 수 있다.

p90/p50 배율로 측정한 가계 소득의 격차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동일한 수준이거나 소폭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0~2014년 시기에 p90/p50 배율이 하락한 국가는 한국을 포함하여 포르투갈, 프랑스와 오스트리아 등이고 2014~2017년 시기에 p90/p50 배율이 상승한 국가는 한국⁷²⁾, 오스트리아와 노르웨이 뿐이다. 2010~2014년과 2014~2017년 모두 p90/p50 배율이 하락한 국가는 포르투갈이며, 두 시기에 걸쳐 모두 p90/p50 배율이 상승하여 가계 소득 격차가 심화된 것으로 나타나는 국가는 없다.

72) 이는 국제비교가 가능한 자산·소득 분포 자료를 구할 수 있는 2010년, 2014년, 2017년 등 3개년 도간의 변화 추이를 분석한 것으로서, 3장에서 2011~2019년 우리나라 가계 자산·소득 분포의 연도별 자료를 이용하여 추이를 분석한 결과와는 다소 차이가 있음

[표 23] 분석대상 OECD 국가별 가계 소득 p90/p50 분위배율의 변화: 순위별

2010		2014		2017	
덴마크	1.6	노르웨이	1.6	벨기에	1.7
노르웨이	1.6	오스트리아	1.7	체코	1.7
벨기에	1.7	벨기에	1.7	덴마크	1.7
핀란드	1.7	덴마크	1.7	핀란드	1.7
슬로베니아	1.7	핀란드	1.7	노르웨이	1.7
오스트리아	1.8	슬로베니아	1.7	슬로베니아	1.7
체코	1.8	체코	1.8	오스트리아	1.8
헝가리	1.8	프랑스	1.8	프랑스	1.8
네덜란드	1.8	네덜란드	1.8	독일	1.8
캐나다	1.9	캐나다	1.9	아일랜드	1.8
프랑스	1.9	독일	1.9	네덜란드	1.8
독일	1.9	헝가리	1.9	폴란드	1.8
아일랜드	1.9	아일랜드	1.9	캐나다	1.9
이탈리아	1.9	폴란드	1.9	그리스	1.9
폴란드	1.9	그리스	2.0	헝가리	1.9
그리스	2.0	이탈리아	2.0	이탈리아	2.0
리투아니아	2.1	라트비아	2.1	포르투갈	2.0
스페인	2.1	포르투갈	2.1	스페인	2.0
영국	2.1	스페인	2.1	영국	2.0
라트비아	2.2	영국	2.1	라트비아	2.1
포르투갈	2.2	리투아니아	2.2	리투아니아	2.2
한국	2.3	한국	2.2	한국	2.5

자료: OECD 및 각 국가의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5. 소결

분석대상 OECD 국가의 가계 자산과 가계 소득의 분포를 비교하면, 많은 국가에서 가계 자산의 격차가 가계 소득의 격차보다 심한 것으로 나타난다. 불평등도의 국가 간 차이도 가계 소득보다 가계 자산에서 더 크다. 이러한 차이는, 자산에 대한 격차보다 소득에 대한 격차에 대한 문제의식이 먼저 대두되면서 소득재분배 정책 등을 통해 가계 간 소득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소득 격차가 낮아

진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자산의 경우, 경제가 성장하면서 필연적으로 자산의 축적이 이루어지고 그 가치가 상승하기 때문에 선진국의 경우 가계 자산 격차가 높게 나타낼 수 있다. 하지만 국가별 자료를 분석한 결과, 벨기에와 룩셈부르크와 같은 국가들은 높은 수준의 부(wealth)를 축적한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경제성장 수준을 가진 다른 국가들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가계 자산 격차를 보이고 있다. 이는 가계 자산 격차가 경제성장에 따른 필연적 결과로만 볼 수는 없다는 점에서 사회경제적 시스템의 차이를 눈여겨 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⁷³⁾

이와 더불어 각 국가의 산업구조와 금융시장의 발달정도, 가계 자산의 구성요소 등의 차이로 인해 격차의 변화폭은 국가별로 조금씩 다를 수 있다. 한국을 포함하여 오스트리아 등의 국가에서 2010년에 비하여 2017년의 가계 자산 격차가 다소 완화되었으나 핀란드, 그리스, 스페인 등의 국가에서는 지니계수와 분위 수 배율이 상승하면서 가계 자산의 격차가 조금씩 심화되었다. 2010년, 2014년 및 2017년의 자료를 비교하여 보면, 다수의 국가에서 2010~2014년 사이에 자산 격차가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다가 2014~2017년에는 다소 격차가 심화되는 모습을 보인다. 이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자산 가격이 하락하고 경기침체가 심화된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며, 2014년 이후 신산업의 등장과 경기저점을 통과하였다는 기대와 함께 자산 가격과 금융시장이 회복 움직임을 보인 것과 일맥상통하는 추세이다. 본 장의 분석에서 주목한대로 가계의 자산보유가 가계의 경제적 격차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실례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경제수준, 제도 및 정책 시스템, 대내외 경제여건 등의 차이로 인해 국가별 가계 경제 불평등도의 추이도 달라지는 현상에 주목하여 볼 필요가 있다. 가계의 경제수준 격차를 완화할 수 있는 정책을 수행함에 있어 소득재분배 정책이나 과세시스템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정책 등을 통한 안정화 정책까지 포괄적인 고려가 있어야 함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73) 국가별 경제 및 사회 제도 등의 차이가 자산분포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으나, 각국이 가진 사회적·경제적 특징과 여건의 차이를 반영하여 분석하는 것은 부가적이면서도 방대한 자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본 분석에서는 수행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음

V. 시사점

본 보고서는 가계의 소득뿐만 아니라 가계가 보유한 자산의 분포가 가계 경제의 격차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가계의 자산이 실직이나 질병, 노후빈곤 등 가계의 다양한 위기 상황에 대한 경제적 안정성을 담보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가계 소득이 비교적 평등한 상황에서도 가계 자산의 격차로 가계 경제의 불평등도가 더욱 심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자산 격차에 따른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가계 소득과 함께 가계 자산의 분포를 분석하였다.

2011~2019년 기간 중 가계 자산과 소득 분포 변화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가계 자산은 소득에 비해 격차가 더 크고, 상위계층 집중도 또한 더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 기간 중 순자산과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의 지니계수, 일반화된 엔트로피지수, p_{90}/p_{10} , p_{90}/p_{50} 등 주요 불평등 지표가 모두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기간을 구분하여 살펴보면,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은 전 기간에 걸쳐 격차가 지속적으로 완화된 반면, 가계 자산의 경우는 2011~2015년 기간에는 불평등지표가 개선되다가, 이후 기간에는 심화된 것으로 나타난다. 동 기간 중 가계 자산의 격차 확대는 대부분 거주주택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2019년 기준 우리나라 가계 자산 중 부동산의 비중이 71.8%으로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2011년 69.6%에 비해 2.2%p 증가하였다. 그런데 거주주택이 가구의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9년 42.5%로 2011년 31.9% 대비 10.6%p 증가하여, 모든 자산 중 비중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거주주택 비중의 증가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거주자간 자산 격차 확대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2011~2019년 기간 중 수도권과 비수도권 거주자간 자산 격차는 2011~2015년 기간에는 축소되었다가, 이후 기간에는 다시 확대되었는데, 이것은 2015년 이후 비수도권보다 수도권에서 주택가격이 상대적으로 빠르게 상승한 영향인 것으로 나타난다.

우리나라 가계는 저소득층과 고소득층 모두 자산과 부동산, 자산과 거주주택의 상관관계가 자산과 금융자산의 경우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의 보유자산이 모두 부동산에 편중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부채와 부동산과

의 상관계수는 1분위보다 5분위가 더 높게 나타나고 있어, 고소득층이 부동산 자산 형성에 부채를 더 많이 활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OLS 추정 결과, 상용근로자보다 자영업자가 순자산이 더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이는 임금근로자는 생업을 위한 기타 자산이 필요하지 않으나, 자영업자의 경우는 영업장, 기계장치 등营业을 위한 기타 자산이 필요한 때문으로 해석된다. 반면,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은 상용근로자가 자영업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본 집단의 이질성을 고려하여 실시한 분위회귀분석 결과, 자산 상위계층으로 갈수록 수도권 거주여부가 자산 증가에 미치는 영향은 증가하나, 성별이 미치는 영향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임시일용근로자, 무직 등의 종사상 지위와 학력변수도 자산 상위계층으로 갈수록 영향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득 상위계층으로 갈수록 수도권 거주 여부가 처분가능소득 증가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고, 학력이 미치는 영향력도 점차 증가하였다. 이는 수도권에 고학력자를 고용해서, 고임금을 지급하는 대기업, 금융기업 등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성별이 미치는 음(-)의 영향은 소득 중위계층에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상대적으로 소득 상위계층이나 하위계층의 여성보다 중위계층에서 여성의 소득 여건이 불리한 상황임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보면, 우리나라 가계는 저소득층과 고소득층 모두 보유 자산 대부분이 부동산에 편중된 것으로 나타난다. 부동산과 거주주택 위주의 가계 자산 포트폴리오로는 가계가 위기 상황에 직면할 경우, 유동성 부족으로 인해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자산의 역할 중 하나인 위기상황에 대한 경제적 안정성을 담보하는 역할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최근 계층 간 자산 격차와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자산 격차가 확대되고 있어, 경제적 격차 심화에 따른 사회적 통합 저해 등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계층 간 가계 자산의 격차 확대와 수도권과 비수도권 거주자간 가계 자산 격차 확대는 대부분 거주주택에서 발생한다. 따라서 주택가격의 상승으로 인한 자산 격차 심화를 방지하기 위해, 실수요자 중심의 지속적인 주택시장 안정화 정책을 펼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균형발전을 통해 지역 간 경제적 격차를 축소하는 정책이 꾸준히 추진되어야 한다.

한편 OECD 국가별 자료를 이용하여 지니계수와 팔마비율로 가계 자산과 가계 소득의 분포를 비교하면, 대부분의 국가에서 가계 자산의 상위층으로 쏠림정도

가 가계 소득에서 보다 더욱 뚜렷하게 나타난다. 국가 간 차이 또한 가계 소득보다 가계 자산에서 더 크다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차이는 자산격차보다 소득격차에 대한 문제의식이 먼저 대두되었고, 소득재분배 정책 등을 통해 소득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있었음에 기인하는 측면이 있다. 또한 경제가 성장하면서 필연적으로 자산의 축적이 이루어지고 그 가치가 상승하기 때문에 선진국의 경우 가계 자산 격차가 크게 날 수 있다. 하지만 국가별 자료를 분석한 결과, 벨기에와 룩셈부르크와 같은 국가들은 높은 수준의 부를 축적한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경제성장 수준을 가진 다른 국가들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가계 자산 격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가계의 자산 격차가 경제성장에 따른 필연적 결과로만 볼 수는 없다는 점에서 사회경제적 시스템의 차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2010년, 2014년 및 2017년의 자료를 비교하여 보면, 다수의 국가에서 2010~2014년 사이에 자산 격차가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다가 2014~2017년에는 다소 격차가 심화되는 모습을 보인다. 한국을 포함하여 오스트리아 등의 국가에서 2010년에 비하여 2017년에 가계 자산 격차가 다소 완화되었으나 핀란드와 그리스, 스페인 등의 국가에서는 지니계수와 분위 수 배율이 상승하면서 가계 자산의 격차가 조금씩 심화되었다.

이처럼 경제수준, 제도 및 정책 시스템 등의 차이로 인해 국가별 가계 경제 격차의 추이도 다르다. 같은 유럽지역에서 유사한 경제수준을 가지고 있는 국가인데도 가계 경제 격차의 변화방향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다. 이는 가계 간 경제적 격차를 완화할 수 있는 소득재분배 정책이나 과세시스템, 사회복지정책 등의 효과에 대한 분석을 통해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특히 한국은 전체적인 가계 자산 격차가 낮은 편임에도 상위계층 집중도는 높고 가계 소득 격차가 상대적으로 높은 점을 고려할 때, 가계의 경제적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본 보고서는 가계금융복지조사와 OECD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는데, 전술한 바와 같이 표본조사에 의한 가계조사의 공통적 한계와 더불어 각국의 사회경제적 배경 및 여건의 차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으므로, 추후 이를 보완하기 위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부 록

[부표 1] 자산과 소득의 불평등지수: 2011~2019년

		자산	금융자산	부동산	거주주택	부채	순자산	균등화 경상소득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2011	지니계수	0.609	0.647	0.539	0.471	0.679	0.605	0.401	0.389
	GE(1)	0.727	0.819	0.583	0.403	0.933	0.722	0.289	0.275
	p90/p10	51.650	95.850	13.037	10.750	178.600	44.837	7.698	6.965
	p90/p50	4.260	5.400	3.520	2.867	6.173	4.225	2.313	2.265
2012	지니계수	0.594	0.627	0.527	0.448	0.669	0.593	0.394	0.387
	GE(1)	0.687	0.761	0.550	0.363	0.888	0.689	0.280	0.270
	p90/p10	46.454	76.130	11.897	8.889	136.250	40.981	7.645	7.034
	p90/p50	4.031	5.009	3.450	2.667	5.979	3.999	2.287	2.221
2013	지니계수	0.582	0.618	0.516	0.437	0.652	0.582	0.390	0.382
	GE(1)	0.652	0.727	0.524	0.346	0.827	0.659	0.268	0.259
	p90/p10	41.275	72.107	11.500	8.000	97.872	37.584	7.830	7.121
	p90/p50	3.809	4.787	3.286	2.500	5.740	3.816	2.256	2.186
2014	지니계수	0.578	0.619	0.514	0.427	0.643	0.579	0.386	0.377
	GE(1)	0.641	0.734	0.522	0.329	0.808	0.647	0.258	0.247
	p90/p10	42.293	72.061	11.667	8.600	77.000	39.098	7.603	7.150
	p90/p50	3.745	4.760	3.182	2.529	5.133	3.733	2.238	2.216
2015	지니계수	0.575	0.627	0.508	0.416	0.645	0.574	0.384	0.374
	GE(1)	0.633	0.755	0.509	0.308	0.827	0.632	0.257	0.244
	p90/p10	43.743	85.462	10.714	8.182	77.188	38.716	7.577	6.924
	p90/p50	3.678	4.768	3.125	2.500	4.940	3.672	2.228	2.195
2016	지니계수	0.572	0.629	0.504	0.417	0.643	0.572	0.397	0.384
	GE(1)	0.619	0.765	0.491	0.305	0.820	0.617	0.282	0.260
	p90/p10	45.445	78.830	11.429	8.333	66.050	39.744	7.491	6.914
	p90/p50	3.631	4.947	3.200	2.500	5.180	3.667	2.306	2.237
2017	지니계수	0.576	0.633	0.512	0.435	0.646	0.576	0.396	0.381
	GE(1)	0.625	0.782	0.500	0.338	0.822	0.625	0.277	0.252
	p90/p10	45.926	82.383	12.360	8.833	70.750	40.151	7.487	7.004
	p90/p50	3.617	4.900	3.385	2.585	5.254	3.805	2.337	2.252
2018	지니계수	0.584	0.640	0.520	0.458	0.646	0.585	0.389	0.371
	GE(1)	0.642	0.825	0.507	0.377	0.819	0.646	0.264	0.235
	p90/p10	49.680	75.600	12.740	10.000	74.320	44.024	7.232	6.573
	p90/p50	3.817	4.928	3.577	2.857	5.536	3.943	2.313	2.213
2019	지니계수	0.586	0.636	0.527	0.469	0.642	0.588	0.384	0.365
	GE(1)	0.649	0.808	0.519	0.392	0.798	0.656	0.261	0.232
	p90/p10	49.742	78.275	13.819	10.833	75.175	43.606	6.925	6.324
	p90/p50	3.915	4.921	3.554	2.955	5.012	3.988	2.293	2.175

[부표 2] 가구 순자산에 대한 OLS 및 분위회귀분석 결과: 2011년 기준

변수명		OLS	분위(Quantile)		
			10%	50%	90%
가구주 연령	30~40세 미만	0.752*** (0.000)	1.015*** (0.000)	0.753*** (0.000)	0.645*** (0.000)
	40~50세 미만	1.181*** (0.000)	1.382*** (0.000)	1.245*** (0.000)	1.146*** (0.000)
	50~60세 미만	1.763*** (0.000)	1.894*** (0.000)	1.801*** (0.000)	1.646*** (0.000)
	60세 이상	2.020*** (0.000)	2.191*** (0.009)	2.042*** (0.000)	1.804*** (0.000)
거주지역		-0.351*** (0.000)	-0.225*** (0.004)	-0.335*** (0.000)	-0.435*** (0.000)
가구주 성별		-0.669*** (0.000)	-0.989*** (0.000)	-0.652*** (0.000)	-0.347*** (0.000)
가구주 종사상 지위	임시일용근로자	-0.895*** (0.000)	-1.580*** (0.000)	-0.751*** (0.000)	-0.526*** (0.000)
	자영업자	0.279*** (0.000)	0.203*** (0.001)	0.194*** (0.000)	0.451*** (0.000)
	무직 등	-0.836*** (0.000)	-2.076*** (0.000)	-0.567*** (0.000)	-0.155*** (0.000)
가구주 학력	중학교 졸업	0.610*** (0.000)	0.766*** (0.000)	0.499*** (0.000)	0.381*** (0.000)
	고등학교 졸업	0.965*** (0.000)	1.026*** (0.000)	0.820*** (0.000)	0.774*** (0.000)
	대학 졸업 이상	1.677*** (0.000)	1.913*** (0.000)	1.500*** (0.000)	1.369*** (0.000)
R ²		0.292	0.204	0.171	0.179

- 주: 1. 기준범주는 30세 미만, 수도권, 남성, 초등학교 졸업, 상용근로자
 2. ***는 1% 수준, **는 5% 수준, *는 10% 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
 3. 가구의 순자산은 균등화지수를 적용하지 않고, 가구의 처분가능소득은 OECD의 균등화지수를 적용

[부표 3] 가구 순자산에 대한 OLS 및 분위회귀분석 결과: 2015년 기준

변수명		OLS	분위(Quantile)		
			10%	50%	90%
가구주 연령	30~40세 미만	0.830*** (0.000)	1.140*** (0.000)	0.880*** (0.000)	0.598*** (0.000)
	40~50세 미만	1.226*** (0.000)	1.547*** (0.000)	1.276*** (0.000)	1.060*** (0.000)
	50~60세 미만	1.727*** (0.000)	1.999*** (0.000)	1.776*** (0.000)	1.603*** (0.000)
	60세 이상	2.079*** (0.000)	2.342*** (0.000)	2.107*** (0.000)	1.833*** (0.000)
거주지역		-0.173*** (0.000)	-0.039 (0.410)	-0.159*** (0.000)	-0.296*** (0.000)
가구주 성별		-0.671*** (0.000)	-0.985*** (0.000)	-0.622*** (0.000)	-0.353*** (0.000)
가구주 종사상 지위	임시일용근로자	-0.885*** (0.000)	-1.537*** (0.000)	-0.775*** (0.000)	-0.526*** (0.000)
	자영업자	0.254*** (0.000)	0.215*** (0.000)	0.179*** (0.000)	0.390*** (0.000)
	무직 등	-0.873*** (0.000)	-2.133*** (0.000)	-0.607*** (0.000)	-0.206*** (0.000)
가구주 학력	중학교 졸업	0.630*** (0.000)	0.774*** (0.000)	0.512*** (0.000)	0.407*** (0.000)
	고등학교 졸업	0.941*** (0.000)	1.024*** (0.000)	0.819*** (0.000)	0.754*** (0.000)
	대학 졸업 이상	1.619*** (0.000)	1.830*** (0.000)	1.451*** (0.000)	1.326*** (0.000)
R ²		0.280	0.202	0.159	0.164

- 주: 1. 기준범주는 30세 미만, 수도권, 남성, 초등학교 졸업, 상용근로자
 2. ***는 1% 수준, **는 5% 수준, *는 10% 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
 3. 가구의 순자산은 균등화지수를 적용하지 않고, 가구의 처분가능소득은 OECD의 균등화지수를 적용

[부표 4] 가구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에 대한 OLS 및 분위회귀분석 결과: 2011년 기준

변수명		OLS	분위(Quantile)		
			10%	50%	90%
가구주 연령	30~40세 미만	0.055** (0.035)	0.102*** (0.009)	0.015 (0.557)	0.069 (0.126)
	40~50세 미만	0.156*** (0.000)	0.168*** (0.000)	0.126*** (0.000)	0.178*** (0.000)
	50~60세 미만	0.338*** (0.000)	0.274*** (0.000)	0.335*** (0.000)	0.414*** (0.000)
	60세 이상	0.142*** (0.000)	-0.040 (0.336)	0.119*** (0.000)	0.281*** (0.000)
거주지역		-0.078*** (0.000)	-0.029 (0.121)	-0.078*** (0.000)	-0.112*** (0.000)
가구주 성별		-0.216*** (0.000)	-0.217*** (0.000)	-0.216*** (0.000)	-0.196*** (0.000)
가구주 종사상 지위	임시일용근로자	-0.362*** (0.000)	-0.436*** (0.000)	-0.373*** (0.000)	-0.340*** (0.000)
	자영업자	-0.067*** (0.000)	-0.198*** (0.000)	-0.082*** (0.000)	0.101*** (0.000)
	무직 등	-0.691*** (0.000)	-0.847*** (0.000)	-0.690*** (0.000)	-0.454*** (0.000)
가구주 학력	중학교 졸업	0.287*** (0.000)	0.244*** (0.000)	0.292*** (0.000)	0.289*** (0.000)
	고등학교 졸업	0.437*** (0.000)	0.348*** (0.000)	0.447*** (0.000)	0.465*** (0.000)
	대학 졸업 이상	0.716*** (0.000)	0.549*** (0.000)	0.757*** (0.000)	0.776*** (0.000)
R ²		0.382	0.274	0.236	0.164

- 주: 1. 기준범주는 30세 미만, 수도권, 남성, 초등학교 졸업, 상용근로자
 2. ***는 1% 수준, **는 5% 수준, *는 10% 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
 3. 가구의 순자산은 균등화지수를 적용하지 않고, 가구의 처분가능소득은 OECD의 균등화지수를 적용

[부표 5] 가구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에 대한 OLS 및 분위회귀분석 결과: 2015년 기준

변수명		OLS	분위(Quantile)		
			10%	50%	90%
가구주 연령	30~40세 미만	0.011 (0.737)	0.094 (0.137)	-0.025 (0.460)	0.000 (0.998)
	40~50세 미만	0.061* (0.057)	0.139** (0.017)	0.031 (0.301)	0.067 (0.134)
	50~60세 미만	0.275*** (0.000)	0.249*** (0.168)	0.277*** (0.000)	0.347*** (0.000)
	60세 이상	0.146*** (0.000)	0.045 (0.436)	0.140*** (0.000)	0.231*** (0.000)
거주지역		-0.030*** (0.003)	0.005 (0.812)	-0.044*** (0.000)	-0.058*** (0.000)
가구주 성별		-0.244*** (0.000)	-0.282*** (0.000)	-0.237*** (0.000)	-0.195*** (0.000)
가구주 종사상 지위	임시일용근로자	-0.431*** (0.000)	-0.502*** (0.000)	-0.424*** (0.000)	-0.342*** (0.000)
	자영업자	-0.100*** (0.000)	-0.277*** (0.000)	-0.110*** (0.000)	0.087*** (0.007)
	무직 등	-0.784*** (0.000)	-0.981*** (0.000)	-0.799*** (0.000)	-0.532*** (0.000)
가구주 학력	중학교 졸업	0.309*** (0.000)	0.236*** (0.000)	0.344*** (0.000)	0.338*** (0.000)
	고등학교 졸업	0.461*** (0.000)	0.348*** (0.000)	0.498*** (0.000)	0.470*** (0.000)
	대학 졸업 이상	0.707*** (0.000)	0.503*** (0.000)	0.753*** (0.000)	0.772*** (0.000)
R ²		0.399	0.285	0.250	0.167

- 주: 1. 기준범주는 30세 미만, 수도권, 남성, 초등학교 졸업, 상용근로자
 2. ***는 1% 수준, **는 5% 수준, *는 10% 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
 3. 가구의 순자산은 균등화지수를 적용하지 않고, 가구의 처분가능소득은 OECD의 균등화지수를 적용

참고문헌

- 김낙년, “가계조사의 행정자료에 의한 보정: 2016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중심으로,” 「한국사회정책」 제27권 제1호, 한국사회정책학회, 2020, 39~61쪽.
- , “우리나라 개인 자산 분포의 추정,” 「경제사학」 제43권 제3호(통권 제71호), 경제사학회, 2019, 437~482쪽.
- 김영일, 「가계 소득·자산의 분포와 가계부채에 대한 연구」, KDI, 정책연구시리즈 2019-07, 2019.
- 남상섭, “한국 가계 자산의 분배와 불평등 요인분해,” 「경제연구」 제27권 제2호, 한양대학교 경제연구소, 2009.
- 남상호, “소득분위별 소득·자산의 결합분포 분석: 중·고령자 가구를 대상으로,” 「보건·복지 Issue & Focus」 제290호(2015-22),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8.17.
- 노영훈·김현숙, 「소득과 주택자산 소유분포에 관한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연구보고서 5-06, 2005.12.
- 오민준, 「자산 불평등에서 주택의 역할」, 국토연구원, WP 20-08, 2020.
- 윤덕룡·이동은·이진희, 「자산가격 변화가 경제적 불평등과 대외경제 변수에 미치는 영향 분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19-21, 2019.
- 이우진, “한국의 소득 및 자산의 불평등: 현황과 과제,” 「정부학연구」 제24권 제2호, 2018.
- 전병유 외, 「한국의 불평등 2016」, 한신대학교 공공정책연구소, 페이퍼로드, 2016.
- 정다운·강동익·최승문, 「자산 격차 발생 요인 분석 및 완화 방안 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보고서 19-05, 2019.
- 정준호·전병유, “국가 간 비교 관점에서 본 한국의 자산불평등-한국, 미국, 스페인 주택자산의 불평등 효과를 중심으로,” 「국토지리학회지」 제51권 2호, 2017.
- Leipziger, D.M., D. Dollar, A.F. Shorrocks and S.Y. Song, The Distribution of Income and Wealth in Korea, The World Bank, Washington, 1992.
- Davies, J. and Shorrocks, Anthony F., The distribution of wealth, ch. 11, p. 605~675 in Atkinson, A.B. and Bourguignon, F. eds., Handbook of Income Distribution, vol. 1, Elsevier, 2000.
- Azpitarte, F., The Household Wealth Distribution in Spain: The Role of Housing and Financial Wealth, ECINEQ WP 2008-83, 2008.
- Sierminska, E. and Smeeding, T.M., “Measurement Issues: Equivalence Scales, Accounting Framework, and Reference Unit”, Construction and Usage of Comparable Microdata on Wealth: the LWS workshop, Perugia, Italy, 27-29 January, 2005.

경제현안분석 목록

	제 목	집 필	발 간
102	경기조정 재정수지와 잠재성장률 추정 -비관측인자모형을 중심으로-	황종률	2021. 6
101	NABO 내국인 인구 시범추계 2020~2040년	김경수·김상미	2021. 3
100	주요 주력산업과 신산업의 동향 및 수출경쟁력 분석	김상우·김미애·허가형 ·권 일·최세중	2020.12
99	혁신성장 전략투자의 현황 및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김상우·최세중	2020.10
98	주요 산업별 수출의 경쟁력 및 경제적 기여도 분석	김상우·김미애·최세중 ·신동진·권 일	2019.12
97	중국경제 현안 분석 -부채·부동산·그림자금융을 중심으로	김윤기·황종률·오현희	2018.12
96	5대 신산업 선도 프로젝트의 추진 현황과 정책 효과 분석	김상우·신동진·김미애 ·권 일·장아련	2018.12
95	북한 경제개발 자원조달을 위한 국제기구와의 협력방안	진 익·모주영·박승호· 조은영	2018.12
94	우리나라 저출산의 원인과 경제적 영향	김경수·허가형·김윤수 ·김상미	2018.10
93	내수활성화 결정요인 분석	김윤희·진 익	2017.12
92	주택가격 변화가 가계부채와 금융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	현영진	2016.11
91	아동 관련 복지분야의 조세지출과 재정지출 지원 현황 및 시사점	채은동	2016. 6
90	일본의 장기침체기 특성과 정책대응에 관한 연구	김윤기·유승선·황종률 ·오현희	2016. 4
89	조세지출제도 국내외 동향 및 시사점	채은동·이영숙	2015. 9
88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OECD 국가들의 세제개편 동향 연구	이영숙	2015. 2
87	취득세율 인하가 주택거래 및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채은동·태정림	2015. 2
86	북유럽 국가의 금융·재정위기 극복과 시사점	조은영	2014. 4
85	우리나라 투자지원 조세제도 현황과 주요국 제도와의 비교 연구	이영숙	2013.12
84	해외 주요국의 재정준칙 운용동향과 정책시사점	김정미·이강구	2013. 9
83	담배가격 인상에 따른 재정 영향 분석	신영임·서재만	2013. 7
82	가계부채의 현황 및 대응방안	신동진	2013. 7
81	소액주주 주식양도소득세 도입방안 및 세수효과분석	채은동	2013. 5

	제 목	집 필	발 간
80	남부유럽재정위기가 국내외 경제에 미치는 영향	신후식·유승선	2012.10
79	고령화가 근속 및 연공임금체계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 시사점	장인성	2012. 9
78	고령자 일자리 현황과 정책과제	서재만	2012. 9
77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거래세 도입에 관한 연구	채은동	2012. 8
76	국민연금 장기 지속가능성 확보방안	김대철·심혜정	2012. 8
75	공적자금 상환대책의 현황 및 개선방안	신동진	2012. 8
74	세무조사 운영실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심혜정	2012. 7
73	2012 근로장려세제 확대시행의 소요재정과 분배 효과	장윤정	2012. 7
72	출산·보육지원 재정소요 추계와 정책과제	조은영	2012. 6
71	발생주의 회계제도 도입이 세입 결산에 미치는 영향	신영임·장윤정	2012. 6
70	외국자본의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합리적 과세방안	최천규	2012. 5
69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소득계층별 귀착 및 세수효과와 시사점	성명기	2011.12
68	경제성장을 단기에측 모형 - 베이지언 VAR 접근방식에 의한 예측 -	황종률	2011.12
67	재정통계 개편의 주요 쟁점과 과제	윤용중·이강구·윤준승 ·서재만·김정미	2011.11
66	소득계층별 물가지수의 차이가 체감물가에 미치는 영향	장인성	2011.11
65	자영업자 현황 및 정책 방향	서재만	2011. 9
64	통일비용에 대한 기존연구 검토	신동진	2011. 8
63	2010년 결산상 재정통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윤준승	2011. 8
62	재정의 경제안정화 효과 분석 - 자동안정화장치를 중심으로 -	박승준·이강구	2011. 6
61	한·중 신재생에너지 정책 비교와 시사점	원동아	2011. 2
60	고령화가 생산성 및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장인성	2010.12
59	위안화 절상의 영향과 시사점	신후식·유승선	2010.12
58	재정정보 공개 현황 및 개선방안	서재만	2010.12
57	2010년 세법개정안의 세수효과	이영환·신영임	2010.10
56	조세법률주의 위반 사례 및 개선방향	윤준승, 정지은, 이남수	2010. 9
55	가계부채의 문제점과 정책개선방안	신동진	2010. 7
54	경기선행지수의 향후 경기에 관한 시사점	유승선	2010. 7

	제 목	집 필	발 간
53	남유럽 재정위기와 정책시사점	김정미	2010. 7
52	외평기금 이자비용 처리문제로 본 통합재정통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심혜정	2010. 6
51	경제위기와 각국의 조세정책 동향 및 시사점	신영임·이영환	2010. 5
50	외화예산의 환위험 관리방안	연훈수	2010. 2
49	국가재정운용계획의 평가 및 과제	나아정·박승준	2009.12
48	소득격차의 확대와 재분배 정책의 효과	장인성	2009.12
47	금융위기와 한국의 잠재성장률	황종률	2009.12
46	사회복지 기능 확대에 따른 지방재정 영향 분석	심혜정	2009.12
45	2009년 말 일몰도래 비과세·감면항목 운용현황	정지은	2009.11
44	비과세·감면제도 운용현황 및 개선과제	정지은	2009.11
43	지방소득세·지방소비세 도입과 향후 과제	이영환, 황진영, 신영임	2009.11
42	금융안정화대책의 정책효과와 출구전략의 방향	신동진	2009.11
41	2008년 이후 세제개편의 세수효과	이영환·신영임	2009. 8
40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금융정책 분석	신동진	2009. 7
39	재정확대의 거시경제적 효과분석	박승준	2009. 4
38	경제위기의 전개와 대응	신후식, 유승선, 연훈수	2009. 3
37	우리나라 외환금융시장 취약성 비교 분석	신후식, 유승선, 연훈수	2008.12
36	중국의 기업소득세법 제정에 따른 입법적 시사점 검토	황진영	2008.12
35	지방정부 재정자주권의 국제비교와 정책적 시사점	심혜정	2008.12
34	2008년 세제개편안 분석: 목적세 정비안을 중심으로	이영환·정지은	2008.11
33	2008년 세제개편안 분석: 비과세·감면제도를 중심으로	정지은	2008.11
32	2008년 세제개편안 분석: R&D지원 강화를 중심으로	이상훈	2008.11
31	2008년 세제개편안 분석: 종합부동산세	이영환·신영임	2008.11
30	OECD 주요국가 초과세수 발생과 재정규율 사례	이남수·이성규	2008. 9
29	유가환급금 지급(안) 평가	정지은, 홍인기, 전승훈	2008. 9
28	청년층 고용현황과 시사점	정상훈·이충언	2008. 8
27	환율변동이 국내물가에 미치는 영향	연훈수	2008. 4
26	목적세와 특별회계의 문제점과 개편방향	이영환, 이성규	2008. 1

	제 목	집 필	발 간
25	은행산업의 경쟁도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신동진	2007.12
24	「강제집행등과 체납처분의 절차조정법」의 입법 필요성 검토	황진영	2007.12
23	원화가치 변동이 수출가격에 미치는 영향	성명기	2007.11
22	한국의 실질 GDP 장기 예측 : 2007~2050년	장인성	2007.11
21	세법체계 개편작업의 동향분석	황진영	2007. 9
20	중소기업 신용보증제도의 운영성과와 개선방안	정상훈	2007. 9
19	과세정보 공개제도의 현황	문성환	2007. 8
18	구조조정 이후 은행산업의 효율성 분석	신동진	2007. 8
17	한국의 잠재성장률과 자연실업률 추정	황종률	2007. 7
16	유가 상승의 원인 및 유류세 인하를 둘러싼 쟁점 분석	이영환·전승훈	2007. 7
15	미국 기준선전망의 의의와 우리 예산과정에 대한 시사점	정문종	2007. 6
14	최근 일본의 재정개혁과 시사점	이남수·서세욱	2007. 6
13	물가상승에 의한 소득세 부담 증가 완화를 위한 정책대안 : 소득세 물가연동제에 대한 검토	전승훈	2007. 5
12	DDA 농업협상의 논의동향 및 영향에 대한 고찰	송원근	2006. 6
11	미국의 재정개혁 논의동향과 시사점	정문종	2006. 6
10	2000~2005년 경제예측의 경험과 단기예측 방식의 개선방향	유승선	2006. 5
9	퇴직연금세제 관련 현안분석과 개선방향	문성환	2006. 5
8	자영업 진출 결정요인과 정책적 시사점	김기승	2006. 2
7	분야별 자원배분에 대한 국제비교 연구	전승훈	2006. 1
6	주택가격 안정을 위한 정책현황 및 과제	송원근	2005.12
5	국세행정에 대한 새로운 감독체제의 모색	문성환	2005. 7
4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한 재정규율의 확립 -지출상한선을 중심으로-	정문종	2005. 6
3	일자리 창출정책의 현황과 과제	김기승	2005. 5
2	조세지출예산제도와 정책과제	전승훈	2004.12
1	재정지출 확대와 감세의 경제적 효과 분석	김기승, 임일섭, 전승훈	2004.10

분위별 자산·소득 분포 분석 및 국제비교

발간일	2021년 7월 9일
발행인	임익상 국회예산정책처장
편집	경제분석국 산업자원분석과
발행처	국회예산정책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tel 02·2070·3114)
인쇄처	유월애 (tel 02·859·2278)

내용에 관한 문의는 국회예산정책처 산업자원분석과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tel 02·6788·3781)

ISBN 978-89-6073-420-3 93350

© 국회예산정책처, 2021

내일을 여는 국민의 국회



(07233)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Tel. 02-2070-3114 www.nabo.go.kr

발 간 등 록 번 호
31-9700527-001903-01



국회에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